2021년도 성과관리 전략계획

(2021 ~ 2025)

2021.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2021.3.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실 (044-205-1434)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세종청사별관 806호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 1

1. 그간의 정책성과 ····· 1

2.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 62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103

1. 행정안전부 일반현황 ····· 103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 106

Ⅲ. 세부 추진계획 ····· 111

전략목표 Ⅰ(정부혁신조직) ····· 111

전략목표 Ⅱ(디지털정부) ····· 132

전략목표 Ⅲ(지방자치분권) ····· 149

전략목표 Ⅳ(지방재정경제) ····· 173

전략목표 Ⅴ(안전정책) ····· 194

전략목표 Ⅵ(재난관리) ····· 217

전략목표 Ⅶ(재난협력) ····· 236

전략목표 Ⅷ(비상대비정책) ····· 245

전략목표 Ⅸ(지원) ····· 256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1 국민 중심의 열린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추진

□ 소통·참여·디지털 기반의 '정부혁신' 추진

< 정부혁신 범정부 확산 및 성과 창출 >

○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20.2월)

-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40개 일반과제 선정 및 역점 추진

○ 공직 내 정부혁신 가치 공유·확산으로 확실한 혁신성과 창출

-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총 4회), 「정부혁신 어벤져스」 운영, 공직사회 소통 책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발간 등

○ 「제2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개최(11.24.~12.3., 온라인)

- 4개 주제관, 2개 특별관으로 구성(10일간 총 168만여명 방문)

○ 개방·신뢰 등 열린정부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

-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순위 기록('17년 51위 → '20년 33위)
  OECD 데이터 개방지수 평가 3회('15·'17·'19년) 연속 1위

○ 국제사회에 정부혁신 리더십 발휘 및 대내외 홍보·확산

-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제11대 의장국 임기 시작('20.10.~'21.12.)

  * 투명성 제고, 반부패 등을 목표로 '11년 출범한 국제협의체

- OGP 디지털포럼('20.5.5.), OGP 리더스서밋('20.9.24.) 등 계기 열린정부 구현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소개

- 유엔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범정부 출품 지원

  * 유엔 회원국의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하여 개도국의 공공행정 개선을 목표로 매년 '유엔 공공행정의 날'(6.23.)에 시상

< 문제해결력 높은 유능한 정부 구현 >

○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을 넘어, 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협업과제 발굴·추진 및 성과 도출

- 7대 중점 및 233개 기관관리 협업과제 선정·추진으로 성과 창출
- 공공과 민간의 '협업 상대방'을 찾아 이어주는 온라인 매칭 플랫폼(협업이음터) 신설

○ 범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혁신 과제 발굴 및 성과 확산

- 영상회의·모바일 결재 등 확산, 업무자동화(RPA) 도입 및 적용(공통업무)

< 정보공개활성화 및 행정문서의 효율적 개선 >

○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개선, 시스템 정비를 통한 정보공개 강화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20.1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비공개 대상 정보의 관리 강화,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확대 및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보공개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21.1.)

* 중앙행정기관 등 587개 기관을 대상으로 4개 분야 10개 지표 평가('20.9~11월), 정보공개위원회('20.12.)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21.1.)에서 의결

-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정보공개포털, 모바일시스템 등 전면 재구축, 빅데이터 기반의 지원서비스 제공('19~'20년)

○「온나라 문서시스템」·「문서24」활용 확대 및 기능 개선

-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전자문서유통 통합포털 구축 및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시스템 강화('21년 사업예산 확보: 5,859백만원)

- 295개 온-나라 문서 시스템 이용기관의 효율적·체계적 운영·관리

* 온-나라 문서시스템의 기능개선, 신속한 장애 복구체계 구축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체계적인 업무처리 환경 제공

** 수신문서 자동접수·배정,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개시(MY 페이지) 등 317건

- 「문서24」 내 웹서식 제공으로 웹에서 바로 서식을 작성·제출 가능, 모바일 문서24 서비스 제공으로 문서 처리결과 확인 가능

□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

○ 범정부 생애주기 통합제공 서비스 확대('19년 2종 → '20년 7종)

- 전입신고 플러스('20.4월), 온종일 돌봄('20.6월), 맘편한 임신('20.6월), 나만의 예우('20.7월), 꿈청소년('20.12월)

○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행 및 참여병원 확대* 추진으로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

* 참여병원 수 : '18.5.시행 18개 → '18.12. 77개 → '19.10. 107개 → '20.10. 166개

○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공유누리) 개통('20.3.) 및 고도화('20.12.)

※ 모바일(앱)에서 이용자 위치기반 공유자원 검색, 이용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 및 행정절차 개선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과제(29개) 최종 확정 및 추진

※ 요보호아동(12건), 학교 밖 청소년(9건), 복지 위기가구(2건), 독거노인(4건), 장애인(2건)

- 국민의 행정절차 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6.11.시행)

※ 공청회 개최 요구요건 신설, 공청회 주재자 자격요건 규정 등

- 행정제도 및 공공서비스 개선 우수사례(13개) 및 우수 아이디어 (10개) 선정

<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활성화 >

○ 국민정책소통 공론장인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확대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온라인 위주(온라인 생중계, 채팅토론)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전환, 전년 대비 참여자 3배 이상 증가

※ '19년 총 11회 개최, 838명 참여 → '20년 총 13회 개최, 2,923명 참여

○ 온라인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광화문1번가' 20만 회원 돌파('20.10.), 국민 참여도 제고를 위한 모바일 앱 출시('20.10.)

※ ('20.12.) 회원수 263,532명, 일평균 방문자수 3,201명, 앱 다운로드 : 7,952건

< 국민편의 중심의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

○ 국민과 현장중심 민원제도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국민참여를 통해 민원처리 불편사항 발굴, 개선과제(73건) 마련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15건) 선정·확산

○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확대(주민등록등·초본 등 100종 '20.12월)

○ 민원서비스 품질제고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민원서비스 컨설팅 실시

□ 국정성과 창출 및 공공서비스 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조직 관리

<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및 인력 재배치 >

○ 안전·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서비스 품질 제고와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공무원 집중 충원

- 「일자리 로드맵」('17.10.18.)과 연계하여 '20년도 소요정원 11,359명 직제 반영 및 '21년도 소요정원 8,345명 국회 확정

○ 국가 재정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인력 4,187명 재배치 ※ 계획(3,772명) 대비 111% 달성

- 기능 감소·쇠퇴 분야의 인력을 현장·신규핵심 분야로 전환·활용

○ 정부조직의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관리 혁신방안 마련

- 실·국내 자체개편 자율시행, 총액인건비 활용범위 확대(5%→7%)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강화시켜 정부의 현안대처·조직운영 역량 강화

<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정부조직진단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 국민참여 조직진단으로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 (생활밀착분야 진단) 국제우편물 통관(관세청), 농산물 안전관리(농진청) 등 29개부처 33개분야 대상 진단 실시
- (개선과제 발굴·정책화) 진단 대상분야 기구·인력·기능 등에 관한 국민제안·토론을 통해 개선과제 발굴 및 정책반영 추진

※ 국민제안 430건 중 반영예정 203, 旣 반영 114, 장기검토85, 반영곤란 28

《'20년 국민점검단 개선과제(제안) 발굴사례》

▸ **(기구)** 로컬푸드가 있는 지역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안전분석실 설치 법제화(농진청)

▸ **(인력)** 보호관찰 조사 시 심리상담분야 전문가 영입 및 전문기관 조사 의뢰를 통해 인력 부족문제 보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교정직 공무원 활용방안 검토(법무부)

▸ **(기능·서비스)** 안전정보 앱 개발을 통해 활동신고, 시험접수, 전자고지 등 모바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기능 개선(해경청)

○ 신설기구·신규인력 평가 등 조직운영의 성과관리 강화

- '20년 신설기구 성과평가 심사회의 4회, 54개 기구 평가 실시

※ 총 54개 기구 평가 결과 정규화 29개(54%), 연장 25개(46%)

- '20년 신규인력 성과평가 심사회의 5회, 34개 업무분야 4,308명 평가

※ 총 34개 업무분야 4,308명 평가 결과 정규화 14개 업무분야 1,912명(44%), 연장 20개 업무분야 2,396명(56%)

○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과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책임운영기관 대국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20년 통합고객만족도 점수 89점 달성('19년 88.3점 대비 0.7점 상승)

* 워크숍, 역량진단·컨설팅, 종합평가 설명회, 서비스혁신 공유 등

< 국가 주요현안 대응을 위한 수행체계 지원 >

○ 국가 주요현안에 대해 부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수행체계를 재점검하여 효과적인 기구·인력 재설계 지원

- (개보위 출범)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일원화하고,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20.8.11.)

- (질병청 승격) 코로나19 등 국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등 인력 확충,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20.9.12.)

○ 긴급대응반 대상기관 확대 및 코로나19 대응 특례 마련·시행

- (대상 확대) 2020년부터 18개 '부'로 확대('20.3.24 정부조직관리지침 ~)

  * ('19) 8개 部(부총리·복수차관) → ('20) 18개 部 전체 → ('21) 全 부처 확대

- (특례시행)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全 부처 확대('20.4.1~)

  ·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처 17청 6위원회'도 긴급대응반 운영 대상기관으로 설치·허용(기관당 1개씩)

  ·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의 경우, 설치요건* 완화 적용

  * ①중요성, ②긴급성, ③종합성, ④한시성 중 ①, ②, ④ 요건 충족시 가능(종합성 제외)

  ·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8.11.)'와 '질병관리청(9.12.)'을 특례 적용기관 추가('20.9.22.)

○ 창의적 혁신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문제해결형 '벤처형조직' 추진

- (혁신 아이디어 발굴) 부처 제출 혁신과제 27건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서면심사 및 심층심사*를 통해 신규 벤처형조직 발굴·선정

  * 전문가 발표심사(70%) + 일반국민 온라인심사(30%, 광화문1번가) ⇒ 10개 과제 선정(최종)

- (제도 공감대 확산) '2020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혁신과제 선정 결과, 벤처형조직 제도 소개·운영사례 언론보도·카드뉴스 등 온라인 홍보*

  * 행안부 누리집,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정부혁신1번가 등

- (운영 활성화) 벤처형조직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벤처형조직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제공 및 벤처형조직 설치·운영 활성화 컨설팅(상·하반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등 운영 내실화 체계 마련

- (사전협의 강화) 위원회 남설 방지를 위해 위원회 신설 시 협의 강화

  *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시행(‘20. 8. 19.)

- (정비) 전년 대비 정비기준을 강화하고 정비이행 실적* 제고

  * 정비실적: (‘19) 39.7%(23/58) → (’20) 60.1%(54/89) 폐지·통폐합 2, 운영활성화 52

- (위원구성 다양화) 비수도권 민간위원 위촉 확대 노력 결과, 최근 2년간 연평균 목표 대비 실적 초과 달성(2.7%p)

  * ’19년(32.2%*목표 36.4%*실적 +4.2%p), ’20년(38%*목표 39.3%*실적 +1.3%p)

○ 민간위탁법 제정 및 행정권한 위임·위탁 규정 정비 노력

- (의견수렴)「민간위탁법」제정 관련, 연구용역*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안 관련 국회 방문 설명 등 추진

  * 기관별 위탁사무 유형 및 개수, 근거 법령, 예산 규모, 관리·감독 등 현황 조사

  ** 민간위탁법 제정 및 민간위탁 제도 활성화 관련 논의 및 입장별 애로사항 청취 등

  ※ (재입법 추진 경과) 정부안 제출(’20.6.26.) →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20.11.16.) →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발의로 행안위 법안 계류(’20.11.17.~)

- (예산확보) 민간위탁 제도 개선 및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 민간위탁 제도 개선 연구용역 5천만, 민간위탁 관리시스템 구축 ISP 5천만

- (정비) 부처별 민간위탁의 법적책임 명확화를 위해 ’20년 정비 요구사무 6개(인사처1, 고용부2, 국토부2, 해수부1) 대상 규정 정비 추진

  ※ 입법예고(~5.27.) → 차관회의(11.13.) → 국무회의(11.17.) → 공포(11.24.)

□ 기록관리 혁신으로 국가기록물 체계적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촉진

< 미래지향적 국가기록관리 체계 구축 >

○ 「공공기록물법」 개정 등을 통한 행정업무 기술·환경 변화 지원

- 법률개정 과제(4개)에 대한 입법절차 추진(’20.12.31. 국회 제출)

○ 기록관리 연구개발 추진 및 주요성과 대내외 공유·확산

- ’20년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 연구개발(R&D) 사업 8개 연구과제(7.1억)* 추진

  * 전자기록분야 4.3억, 비전자기록분야 1.2억, 기록활용분야 1.6억 연구 수행

- ’20년 기록관리 정책포럼·연구세미나 개최(총 4회*)를 통한 성과·정보 공유

  * 주제: (포럼) 기록공동체 지평의 확장, 민간아카이브(6.9.), 대통령기록관리 제도개선 및 체계 개편(7.28.), 개인정보 문제 공동 해결 방안(11.12.) / (세미나) 문서포맷과 서식 개선방안(7.8.)

- 기록관리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활성화

  * 언론, SNS, 기관 홈페이지, 정보지 발간 등 기록관리 연구성과 및 정보제공 창구 다각화

○ 다양한 행정데이터에 체계적이고, 투명한 기록행정 기준 마련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한 관리기준, 절차, 방법* 개발 및 확산

  * 행정데이터의 관리기준표 개발, 관리기준 유형 및 보존 처분 프로세스 정립

<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 >

○ 각급 기관 기록관리 지원 및 소통·협력 강화

- (중앙행정기관) 업무협의회(9회), 컨설팅(37개), 현황분석서(183개), 이관협의 등
- (공공기관·대학) 업무설명회(1회), 방문컨설팅(22개), 현안 지원 등
- (지자체·교육청) 업무협의회(1회), 방문컨설팅(10개), 전문요원 간담회(2개) 등

○ 주요기록물 수집 및 차질 없는 정리 추진

- 전자문서(’09년 생산분) 약 332만 건, 비전자문서 10.3만 권 수집
- 전자기록물 검수(약 394만 건)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등록(36만 권) 추진
- 기획재정부 등 18개 기관 전자-비전자 통합 시범이관 추진(’20.3.~12.)

○ 국가 중요기록물 보존·복원 추진

- (매체수록) 중요기록 우선순위 선정심의를 통해 약 2만 권 매체수록 추진
- (복원처리) 6.25전쟁 관련 기록물, 전봉준판결문, 국무회의록, 조선총독부 도면·문서 등 8,408매 복원처리

< 국민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 >

○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

- 비공개 기록물 250만 건(30년경과 35만건, 30년미경과 215만건) 공개재분류
- 기록물 기술분류(6개 기관 5.5만권) 및 관리정보 입력(행형기록 36.9만건) 추진
- 대국민 정보공개 및 기관협조 기록물 제공 65만 건(국민 36만건, 기관 29만건)
- 중요 기록물을 활용한 온라인콘텐츠*, 편찬**, 기획전시*** 추진

*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80～'90년대) / 국무회의록의 재발견(6～7차 개헌)

** '기억해야 할 사람들 : 강제동원 김광렬 기록으로 말하다 사진집'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5.12.～12.31., 69,967명), 경인선 전 개통 120주년 기획전(11.9.～11.23., 24,198명)

○ 기록관리교육 강화

-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적 교육 운영 추진 및 맞춤형 교육 확대 운영
- 강사인증제도 도입·운영 등 교육 체계화 실행 관련 성과 창출

※ 5개 교육 24개 과정 160회 운영, 75,542명 수료(계획 대비 65.6% 증가 달성)

○ 국가기록포털 사용자 편의성 제고

- 2020년 국가기록포털 만족도 조사 계획수립(1.16.) 및 매월 실시

※ 포털이용자 요구사항(통합 검색페이징, 게시글 담당자 정보표시 등) 반영

- 2020년 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 구축 사업 완료 및 서비스 개시(6.1.～11.28.)
- 기록정보콘텐츠에 잔존해 있는 플러그인 제거(국정과제) 완료(10.16.)

2 세계를 선도하는 개방과 소통의 디지털정부 구현

□ 언제 어디서나 공유·협업하는 업무환경 구현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

○ 스마트 행정업무환경 도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스마트 통합 행정업무환경 구축 및 보안강화 ISP 수립' 사업완료('20.9.)
-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 인터넷 PC 클라우드 서비스(DaaS) 시범 도입 및 전략수립('20.12.)

○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 도입 확산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일부 직원(120명)에게 휴대형 단말기 지급하여 근무지 및 출장지 등에서 웹오피스 사용
-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G드라이브) 이용기관 확대(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및 기관관리자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

○ 모바일 전자정부 활성화 추진
- 바로톡 사용 시 가장 불편해 하는 기능을 편리하게 개편하여 이용활성화 도모

※ ①설치 시 민간 앱스토어 사용 ②일정시간 경과 시 재인증 기간확대(5일→3개월), ③사용 후 60분 경과 시 화면잠김(60분→7일)

- 행정기관 모바일 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보안점검표 기준)
- 모바일 보안 공통기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최신 단말(AOS 10이상)에서도 행정앱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능개선 추진

○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업무환경 지원
- 온-나라 PC영상회의 라이선스 증설(2,850개) 및 적용(5월~12월)
- PC영상회의시스템의 OS·WEB·WAS·DB·AP 영역의 성능 최적화 및 자원 증설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 및 이용 활성화

- 국회 본관 스마트워크센터를 국회 소통관으로 이전 확대 구축('20.12.)
- 공무원 업무망 가상화 소프트웨어(VDI) 교체 등 인프라 확충 및 이용활성화 추진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한 디지털정부 핵심과제 추진》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정부 구축 지원
- 사회 환경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 추진
※ 범정부 민원상담 365 서비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등 8개 과제(314억원)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대국민 서비스 혁신 등 디지털정부 선도
※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30억원),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 구축(79억원), 인공지능 기반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55억원), 병무 민원신청시스템 구축(14억원) 등

○ '20년 지원사업의 종료시기 정상화 및 이월사업 대폭 축소
- 사업계획 수립의 지연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과제를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예산 조정
- 조기 사업발주를 위하여 사업계획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적정 사업기간 확보

< 최근 5년간 전자정부지원사업 이월 현황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월/전체 사업	5개/31개	15개/34개	19개/29개	18개/21개	11개/19개
이월 비율	16%	44%	66%	86%	58%
최종 종료 시기	'17.3월	'18.11월	'19.9월	'20.10월	'21.3월

○ 사업 수·발주자 간 상생협력 및 지속적인 동반성장 추진
- IT기업 대상 사업설명회(1월), 사업자 간담회(6월, 7월),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참여 확대* 추진
* 중소기업수주액/총계약액: ('19)743억/765억(97%)→ ('20)878억/890억(98%)
- 전체 사업 하도급 지킴이 적용, 제안서 보상(3건), SW 분리발주(75건), 장기계속계약 추진(3건) 등 SW산업 육성정책을 선도적으로 반영

□ 안정적 · 효율적 디지털정부 인프라 강화

《디지털 정부혁신 성과 창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수립('20.6.23. 국무회의 보고) 및 대국민 공유의 장 마련(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 코로나19 위기를 디지털 정부혁신 가속화의 계기로 삼아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발전방향 제시

※ 비대면서비스 확대, 맞춤형서비스 혁신, 데이터활용과 민관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 선정

○ 범정부 디지털 전환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 디지털 정부혁신 성과 확대 및 가속화,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 극복 등 국가·사회적 현안 대응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 31개 기관 64개 접수된 과제 중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27개 과제 선정

- 국민 수요기반의 디지털 정부혁신을 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20.4~6월) 및 시상(6.23.)

○ 범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가속화를 위한 범정부TF, 워킹그룹 운영

- 다수 부처 간 긴밀한 협의·조정을 위한 범정부TF 및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연중)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과정 및 성과를 공유하고 대국민 소통을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 홈페이지 운영 ('20.5월)

《디지털정부 정보자원관리 혁신 및 성과관리 체계 확립》

○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1·2차 사업 추진('19.12월~'21.3월)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19.11월)

○ 불필요한 플러그인 제거 등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환경 구현

- '19년 선도사업 추진 등을 통한 대민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완료

  * ▲정부24, 건강보험 등 22개 주요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선도사업('19.2월~8월), ▲공간정보 등 9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통합사업('20.6월~12월)

-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개정 및 가이드 적용 기술지원 컨설팅

  * 플러그인 제거사례 반영 등 가이드라인 개정('19.8월), 기술지원 컨설팅('20년)

○ 범정부 통합 전자정부 성과관리 체계 확립

- 정보화사업 예산편성·발주 단계에서 유사·중복, 연계 등을 검토·조정하여 예산낭비 방지

  * 60개 기관의 '21년 정보화사업계획을 검토하고 204건의 의견 제시, '20년 발주 정보화사업 1,685개를 검토하여 개선·보완 의견 제시

- 정보시스템 성과측정 및 개선계획 수립을 통해 시스템 운영 효율화

  * 정보시스템 성과측정 결과 통폐합 대상 456개, 폐기 대상 310개(연간 운영유지비 409억원)로 유형 분류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운영기반 강화》

○ 지방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18.9.~'19.12.)

-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재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추진

  * 시도·새올 통합, 클라우드 전환 등 3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도출

-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검토 신청·대응

○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 및 공유로 신속·편리한 서비스 제공

- ('16년) 임신·출산, 사망·상속 등 개별 신청·처리되는 민원서비스를 원스톱 형태로 처리되도록 개선하여 대국민 편의성 향상
- ('17년) 시도·새올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 중 301개 민원에 대한 구비서류 온라인 조회 기능 적용으로 민원인 편의성 제고
- ('18년)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소정보 연계로 반송 고지서 송달 감소 비용 감축
- ('19년) 환경개선부담금 대국민 납부 편의 향상 및 공유재산 수기처리 자동화 등 자치단체 업무단계 축소 및 자동화 처리 범위 확대로 업무 효율성 개선

- ('20년)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오프라인 시스템 및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구축·운영 등을 통한 디지털 정부혁신 체계 구현

□ 국민 중심의 안전한 디지털정부 구현 및 국제적 확산 도모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

○ 국민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첨단 정보기술 서비스 구축

- 시·청각 장애인이 수화나 음성으로 대화하며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도움을 주는 '스마트 미러 민원안내 서비스' 구축('20.6.~11.)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렵고 복잡한 민원서식 작성을 음성안내 기반 질의·답변 방식으로 도와주는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구축('20.6.~11.)
- 국민이 생활 주변 안전 시설물 점검을 요청하면 스마트글라스로 신속히 점검·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주는 '원격 안전 점검 서비스' 구축('20.7~11.)

○ 성과 우수과제의 확산을 통한 지역정보화 발전 견인(스마트 선별관제)

- 쓰레기 무단투기, 자전거 절도, 청소년 흡연, 소방도로 방해 등 민원급증 4대 분야 탐색을 위한 행위기반 관제 플랫폼 구축(서울 성동구, '20.6.~11.)
- 생활방범, 어린이 보호 등 범죄 발생 예방 및 추적에 특화한 안면 검출 및 자동차 번호판 인식 기능을 추가한 플랫폼 구축(부천시, '20.7.~12.)

○ ('21년 과제기획) 민간 협업을 통한 솔루션 마련 및 서비스 구체화

- 국민의 생각과 행정 현장의 문제를 다각적 분석·평가하여 핵심이슈 선정('20.5.~7.)
  * 현장문제조사(5월), 빅데이터 이슈분석(5월), 도전·한국분석(6월), 민간 평가단 제안 평가(6월)
- 기술전문가 자문을 통해 핵심이슈 6개 과제의 기술적 해결방안(솔루션) 수집('20.7..~8.)
- 민·관·산·학·연 등 다양한 구성원 참여한 해커톤 및 서비스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실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체화, 기술검토 등 추진('20.7.~'20.10.)
  * 팀구성(7월), 오리엔테이션(8월), 중간보고회(9월), 서비스디자인(9월), 결과보고(10월)
- 보다 많은 기관의 공모 참여와 문의 사항 선제적 해결을 위해 '첨단 공공서비스 온라인 사업 설명회'(온나라PC영상회의 활용) 개최('20.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사업과 유사·중복성·소관 등 합동검토 추진('20.12)
- 사업 검토·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효과, 추진 가능성, 파급 효과, 확산 가능성, 정책적 부합성 등 다각적 심의를 통해 주관기관 확정('21.2.)
  * 신규과제 및 주관기관(3개), 확산과제 및 주관기관(2개) 선정

《디지털정부 사이버보안 및 인증체계 강화》

○ 국가정보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한 지자체 망분리 추진 전략(ISP) 수립
- 지자체 공무원 PC를 인터넷망과 내부망으로 분리하여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자체 망분리 세부추진방안 마련

○ 지자체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상시점검 체계 마련
- 보안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지자체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자동진단하고 조치지원 가능한 취약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 기반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확산으로 대량화·지능화·자동화되는 사이버 침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
※ ('19) 3개 광역시도 구축 → ('20) 17개 광역시도 구축 완료

○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시범 서비스 추진
- 국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온·오프라인 신원증명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공무원증) 시범서비스 도입('20.12월)

○ 하나의 ID와 지문 패턴 등 선택한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원패스(간편로그인) 적용 및 확대
- 정부24, 나이스, 위택스 등 총 125개(누적) 서비스 중
※ 연계사이트(개, 누적) : ('18) 36 → ('19) 84 → ('20.11월) 140
- 「FIDO* Alliance 글로벌 정기총회」 정부·공공분야 우수사례 선정
  * FIDO(Fast IDentity Online) : 패스워드 대신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표준 온라인 인증 기술

《국제사회 디지털정부 선도국가 위상강화》

○ 국제기구 평가 적극 대응으로 대한민국 국격 제고
- OECD 디지털정부 평가결과 종합순위 1위 달성
- '20년 UN 전자정부 평가 결과 온라인참여지수 2연속 1위, 전자정부발전지수 2위 달성

○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협력 제약 극복

- 국가 간·국제기구와의 MOU(4건), 장·차관급 양자회담·협력포럼 등(22건), 국제기구·디지털정부 설명회 등(19건), 디지털정부 초청연수(3건)
-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운영을 통한 협력사업추진

* 세르비아·튀니지·우즈벡에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치('20～'22)

○ 한국형 디지털정부 모델 발표(17건)

- 행안부·UNPOG 디지털정부 웹세미나 공동개최(9.23. 온라인), Digital Nations 장관회의(11.3. 캐나다 비대면 개최) 등

□ 공공부문 데이터 개방·활용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 강화》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범정부 중장기('19～'21) 개방계획에 따라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 ('13)5,272개 ⇨ ('19)33,600개 ⇨ ('20)55,139개(10.6배 증가)

※ 공공데이터 활용(누적) : ('13)13,923건 ⇨ ('19)13,141,413건 ⇨ ('20)20,848,555건(1,497배 증가)

-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 및 생활·안전 분야와 관련된 6개 주제영역 46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고품질 형태로 개방('20~'22년)

○ 데이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체계적 지원

-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개최(11.12.)
- 제3회 데이터 걸스데이(Data Girl's Day) 해커톤 개최(10.24.)
- 전국 6개 권역 오픈스퀘어-D를 활용,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기업 창업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의견수렴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간담회 개최(4회)

○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강화

- 기관의 품질관리수준 진단 및 환류체계 마련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 지표개발(2월) → 대상 DB확정(6월) → 1차 자체평가(～8월) → 확인점검(8～9월) → 2차 자체평가(9～10월) → 2차 확인점검 및 결과 확정(11～12월)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실시(5~12월)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535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10, 11차)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 (제도마련) 민원처리법 제10조의2를 신설('20.10.20. 공포)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하였고, 민원처리 이외의 업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전자정부법 개정('20.12.3. 국회제출) 추진을 통해 준비 중
- (업무협약)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16개* 활용기관 업무협약식 개최(10.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6개 기관

- (워킹그룹) 민간·산학·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범정부 공공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 (마이꾸러미) 활용도가 높은 행정정보 중심으로 데이터 형태의 꾸러미* 발굴(24종)

  * 마이데이터 꾸러미 : 국민과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의 편의를 위해 신청자 본인의 행정정보에서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 요구하는 항목만 추출한 데이터 조합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

- (자격정보 확대) 임산부 정보, 어업경영체 증명정보, 공무원 연금 내역서 등 비대면 자격확인 정보 6종 추가 확대

❖ (연도별 자격정보 확대) 17년 16종 → 18년누적 27종 → 19년누적 35종 → 20년누적 41종

- (이용기관 확대) 국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감효과가 큰 정부혁신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특교세 10억원을 확보하여 공모사업 추진

❖ (연도별 기관 확대현황) 17·18년누적 18개 → 19년누적 62개 → 20년누적 200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반 구축》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6.)·시행('20.12.)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국정과제, 정책현안, 다부처 협력과제 등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 현안 정책수립 지원

- 초등돌봄수요 예측, 감염병 대응 의료물자 비축량 예측 등 부처·지자체 현안 해결, 국정과제 이행지원을 위한 분석과제 수행(20년 13건)
- 우수 분석사례를 부처·지자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참조모델 정립(5종) 및 총 41종의 분석참조모델 확산 추진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체계 마련
-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등록 및 수집·활용할 수 있는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12.10.)
-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2.10.)

※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기본기능을 우선 구축('20년), 데이터 연계 등 확대구축('21년 예정)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공공기관 데이터 역량 강화
- 데이터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전문교육 및 실무체험 기회 제공

※ 청년 610명에게 데이터분석 전문교육(2개월), 행정·공공기관에 일경험 수련(6개월) 기회 제공

- 공공기관 스스로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 마련·배포(12.10.)

3 지방분권 · 균형발전 촉진 및 시민사회 성장 지원

□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월 시행)으로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전면적·실질적 이행 가속화

- 주민참여 확대, 지방 권한·책임성 강화,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등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주민 참여권 강화, 주민조례발안 활성화(청구요건 완화),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 조정,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권 19세→18세), 기관구성 다양화

○ **(지방역량강화·자치권 확대)** 국가-지방 사무배분 명확화, '특례시' 명칭 부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책임성·투명성 제고)** 지방자치 정보 적극 공개, 시·군·구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보충적 개입,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구체화

○ **(중앙지방 협력)**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 행정구역 결정 절차 개선, 지자체간 경계조정 절차 신설, 단체장 인수위 도입, 행정협의회 활성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화

○ 지역별 다양성·특수성을 고려한 자치단체 조직자율성 강화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확대로 주민자치회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한 사전 기반 마련

□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 장기 미이양 사무의 신속한 이양 및 이양 사무 수행에 따른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18.)'

*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을 하나의 법률에 일괄개정하여 400개 사무이양('21.1.1. 시행)

○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소요비용(인건·경상·사업) 평가 및 지원 제도화를 위한 '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전문위원회 검토 및 분권위 심의·의결을 거쳐 신규 이양사무 수행비용(154,936백)을 '21년 균특회계 예산으로 편성·지원

※ 「지방분권특별법」('20.1.29. 개정) : 자치분권委에서 사무이양비용평가·기능 수행
「지방분권특별법 시행령('20.5.4. 개정) : 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 구성

○ 모든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의 자치권 침해소지 사전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운영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19.3.12.), 지침 마련, 설명회 개최 등 4개월 간의 준비 후 제도 본격 시행('19.7.1.)

< 사전협의제 운영 경과 >

- '19.7.1.~'20.12.31. 기준 총 2,587건 접수, 검토완료된 2,426건 중 99건의 개선의견 제시(개선권고 62건, 보충의견 37건) ※ 해당 부처 협의完

□ 지방인사제도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지역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20.7.3. 국회 제출) 등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 조례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직류 신설 등

○ 지자체별 인사운영통계 공개 및 확대, 시도·새올 출장시스템 개선을 통한 출장여비 부당수령 예방 등 자율적 인사운영에 따른 책임성·공정성 확보 기반 마련

□ 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 및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이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유지를 통한 공명선거 문화 안착 추진

○ 제21대 총선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및 철저한 방역지침 이행으로 감염사례 미발생 및 K-방역 사례로서 국격 제고

* 제21대 총선 투표율은 66.2%(사전투표율은 26.69%)로 2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선거체계 및 대응경험을 해외 각국에 공유(미국 5.29. / 웨비나 7.8.)

□ 지방의회 책임성·자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례회·임시회 등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원 겸직 금지 명확화,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등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출 제한 항목 신설* 등 지방의회 관련 예산 사용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20.12.)

□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례청구제도 개선 및 홍보

○ 주민조례 청구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법률 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20.7.3.) 완료, 온라인 주민참여시스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추진

○ 주민직접참여 서비스 제고를 위한 디지털 주민직접참여플랫폼 구축 사업 소요 예산 확보 및 지자체와 협의 완료

□ 혁신과 분권을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 양성교육 운영

○ 코로나 19 이후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하여 교육 공백 최소화

- 온·오프 교육운영 병행, 국정과제·시의성 반영한 교육 운영, 방역·복무 관리 대응시스템 및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 등

< 위기단계별 교육운영 계획 수립 현황>

심각단계 (2.25.~5.26.)	1단계 (5.27.~8.21.)	2단계 (8.24.~10.16.)	1단계 (10.19.~)
코로나19발생, 장기화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합재개**	**수도권발 집단발생, 전국 확산**	**겨울철 환자급증, 공공부문2단계**
(2.24)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운영 긴급 대응방안수립 장차관 보고 **(3.8)**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지정 **(3.30)** 코로나장기화로 온라인 교육전환 준비, 과정별 운영	**(5.6)** 생활속 거리두기 완화로 **저밀도 집합교육 계획수립, 보고**	**(8.18)** 코로나19 전국확산에 따른 교육운영 변경계획수립	**(11.23)** 공공부문 방역관리 2단계 상향으로 교육계획 변경 장차관보고
-**(5급)** 2.26 434명 조기수료 및 온라인 교육(1,000명) -**(장기)** 2.24.사이버, 개인과제, 4.20 온라인 강의 전환 -**(전문)** 전 과정 3월이후 연기 후 원내 과밀방지로 5월로 재연기	-(5급) 6기(6.29)부터 집합재개 -(장기) 5.27부터 집합-온라인병행 -(전문) 6월부터 7개과정 저밀도교육	-(5급) 6기(6.19)부터 집합재개 -(장기) 5.27. 5개과정 단계별등원 등 -(전문) 6월 7개과정 저밀도교육	-(5급) 집합교육 중이던 12기~13기 재택교육 전환 -(장기) 11.26. 5개 과정 조기 수료 -(전문) 3개과정 비대면 교육전환

○ 위기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환경 기반 마련

- ICT 기반 구축, 스튜디오 설치·운영 등 온·오프 융합학습 환경 조성

- 7과정 신규·재개발, 마이크로러닝(358편) 및 K-MOOC(600여개) 강좌 전면 개방 등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공유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수요 급증으로 사이버 교육이수 증가(전년대비 54만 명, 668% 增)

○ 지자체 역량 배양을 통해 변화를 선도하는 문제해결형 리더 양성

- 직위별 역량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광역팀장 모의과제 개발

※ 3개 직위(국장, 과장, 팀장) → 4개 직위(국장, 과장, 읍·면·동장, 팀장)

- 지자체 역량기반 인사운영 지원을 위한 직위별 맞춤형 교육 확대

※ 과정별 역량교육(5급 12→13회/국과장급 11→19회) 및 자체양성 FT 전문성 강화(2→4회)

○ 지자체 HRD 우수사례 공유 등 개방·소통·협력의 열린 교육 추진

<table>
<tr>
<td></td>
<td></td>
<td rowspan="2"><제38회 지자체 HRD 경연대회>
❖ (참석) 원장, 발표자, 온라인평가단 등 60명(현장 25명)
❖ (출품작) 13개 시·도 16개 과제(강의강연 9, 교육과정개발 7)
❖ (내용) 시도 교육기관 간 강의경연, 교육과정개발 사례 발표·시상으로 교수요원 격려 및 우수 프로그램 발굴·확산
❖ (시상) 총9점(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행안부장관상 4, 자치인재원상 3)</td>
</tr>
<tr>
<td>현장 발표</td>
<td>온라인 참가</td>
</tr>
</table>

□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 및 국내·외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

○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속 안정적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청사 점검·관리 및 교육생 의견을 반영한 시설 개선·운영

○ 국내·외 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교육발전협의회」, 「LOGODI 포럼」, 「한·중세미나」 개최 등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화상 방식의 회의 도입으로 국제적 교류·협력 내실화

○ 시의성을 반영한 시책교육 운영* 및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국정성과 우수사례 발굴·공유로 국정과제 성과창출 지원

* ('20) 7회(혁신적 포용국가 중심, 한국판 뉴딜^{신설}) ('19) 8회(포용국가 전략 중심)

□ 중앙-지방간 소통 · 협력 강화 및 시민사회 성장 지원

○ 중앙-지방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통과 국회 대응으로 제2국무회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19.9.10.) → 국무회의('20.6.30.) → 국회제출('20.7.3.) → 행안위 상정('20.9.10.)

-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2회)* 및 중앙·지방정책협의회(9회) 개최로 중앙-지방 간 주요 정책 및 현안 공유

  * (1. 30. 영상) 신종코로나감염증 대응 논의, (10. 13. BH)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 장(차)관의 단체장 면담(16회), 지자체 민생현장 방문(14회) 등을 통해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문제 해결 지원

-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역할 강화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중앙-지방 간 전·출입 교류 120명 / 계획교류 320명)

- 자원봉사 활성화 제도 정비 및 코로나19 대응, 재난피해복구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주도 자원봉사 지속

  *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자 171만명('20.12월말기준) / 폭우피해복구 봉사자 138,202명(8.3~8.25.)

□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통한 '알 권리' 보장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제3자의 전입신고를 세대주, 소유자(또는 임대인)에게 통보('20.6.9.)하고, 세대주의 변경을 전(前) 세대주에게 통보('20.10.13.)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상 지역표시번호 폐지('20.10.5.)

○ 사회적 배려계층의 편의제고를 위한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범위 확대('20.6.9.)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20.11.30.)

○ 행정자료를 통한 거주불명자 조사 방안 마련 등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자료 정확성 제고 및 행정력 낭비 등 문제 해소('19.12.3.)

□ 과거사 문제 해결 노력 및 화해·치유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

○ 과거사정리법 개정, 진화위 활동 재개로 과거사 문제 완결적 해결 기대

- 과거사정리법 개정(6.9. 공포), 과거사정리준비기획단 설치(7.1.)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 준비*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인선, 사무처 조직·직제 협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사무실 임차 등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진화위 출범(12.10.), 미해결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신청접수 재개

○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심사·결정 완료로 명예회복 기여

- 4·3사건법 시행령('17.12월) 개정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6차 추가신고 실시('18.1~12월), '20년까지 신고인원 100% 심사·결정 완료(6.29.)

※ 6차 추가신고자 총 21,696명(희생자 321, 유족 21,375명)에 대한 심의·결정 완료
→ 인정: 21,325명(희생자 300, 유족 21,025) / 불인정: 371명(희생자 21, 유족 350)

○ 과거사·민주화운동 관련 화해와 치유사업 추진으로 국민통합 기여

-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 체계 수립 및 치유활동 시작(광주, 제주)
- 기념식* 및 추모사업**으로 민주적 가치를 국민과 공감하는 계기 마련

* 6·10민주항쟁기념식(6.10.), 부마민주항쟁기념식(10.16.),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10.16.) 등

**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가칭)민주인권기념관 조성 실시설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국제설계공모 공고 및 당선작 선정('20.12월) 등

- 노근리 사건 70주년 기념식(7.29.) 및 글로벌평화포럼(11.10.~12.) 등으로 평화와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 수여(국민훈장 12, 국민포장 2, 대통령 표창 5)

□ 경찰·소방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및 공무원노조와의 소통 강화

○ 공무원직협법 제정 21년만에 경찰·소방공무원에게 협의회 가입 허용('20.6.~) 등 상생 협력적인 협의회 활성화 도모

- 경찰·소방 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등으로 협의회 규모 확대(2.4만→19만)

구 분	'00	'04	'08	'13	'20.5.	'20.11.	
공무원직협	20,904	160,000	58,000	24,654	23,949	(중앙부처·지자체 등) 23,949 (경찰·소방) 166,388	190,337
공무원노조	-	-	215,000	164,725	297,221	-	

* 서울 등 8개권역별 경찰·소방 현장컨설팅, 매뉴얼 전면개편, 간담회, 교육지원 등

○ 공무원노조*에서 행안부와 **소통할 수 있는 정책협의체** 운영을 제안해옴에 따라 '18년부터 **매년 정례화** 운영

□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기반 마련

○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의 참여·소통·협력 공간 조성**

※ 거점별 소통협력공간('18~'20년): 강원 춘천, 전북 전주, 대전, 제주, 충남 천안

○ 민간의 지역사회혁신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추진**

※ 민간의 유휴공간 매입·운영 시 보증·저리대출 지원('20년 12개소 57억 원)

○ 주민·공공기관·자치단체·대학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확산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운영('19년: 대구·광주·대전·강원·충북·경남 → '20년 충남·전남 추가)으로 2년간 767개 기관 47,000여 명 참여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마을기업 지정(신규 138, 재지정 76, 고도화 32, 우수 16),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판로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지원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및 소규모 판매장(상생샵) 구축 지원(4개소), 공공구매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 제품품평회 개최 등

** ('19년 12월 기준) 1,556개소, 매출액 1,928억원, 일자리 20,062명 창출

○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및 지역 활력 제고

* 전국 16개 지역에 청년공동체 16개팀 활동 지원

□ 참여를 통한 현장 중심의 지역문제 해결 확대

○ **주민참여·협업** 및 **디지털·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 문제기획 리빙랩(행안부+과기부), 농촌현안 해결 리빙랩 프로젝트(농식품부) 등

○ **지역·현장**과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 및 혁신 가치 확산

※ 17개 시·도 혁신현장 간담회('18~'19년), 권역별 지역사회 혁신정책 나눔터('20년)를 통해 총 243건의 건의사항 수렴, 116건 수용

○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충남혁신상회****, **지역사회활성화 기반 조성***** 등 주민 주도 문제해결 사업 우수사례 창출로 지역 활력 제고

* 청년마을 조성('18~'20년, 총 3개소)

**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공간 활용, 주민 주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시민정원, 삐삐책방 등) 운영

*** 유휴 공간을 지역주민 활용 공간으로 조성('19~'20년, 49개소)

□ 체감 혁신성과 확산 및 인식·공감대 확산 노력

○ **체감형 혁신사례**의 자치단체 **확산 지원**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

※ ('19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17개 자치단체 확산) 등 17개 사례
('20년) 소외계층 대상 대형이불 원스톱 세탁서비스(5개 자치단체 확산) 등 21개 사례

○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재도전**에 대한 **지지·격려** 문화 조성

※ **('18년)** 최초 개최(5만여 명) → **('19년)** 자치단체 확산(37만여 명, 권역별 4개 자치단체 참여)
→ **('20년)** 민관협업으로 참여 확산(150만여 명, 전년 대비 약 4배)

○ **지방행정 혁신** 지원 및 지자체 **혁신역량** 진단·강화

※ 정부혁신 추진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지표 수정·개발, 우수 자치단체 대상 인센티브 부여(매년 특교세 40억 원,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4)

□ 새마을운동 현대적 계승·발전으로 함께 잘사는 지구촌 실현

○ **생명살림운동 추진**을 통한 탄소중립사회 구현 촉진

※ 새마을운동 대전환('18년 6월)에 따른 생명살림국민운동 추진 /유기농 태양광 발전소 운영(발전규모 70.4Kw/h), 양삼식재 412개소, 전회원 에너지 30% 감축

○ 개발도상국(라오스, 동티모르 등) 대상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으로 다함께 잘 사는 지구촌 실현

※ 초청연수('20년 35국 1,506명), 시범마을조성('20년 8국 35마을)

○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지구촌 및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 지구촌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컨퍼런스(11.25.~26.)

□ 접경·도서 등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 남북관계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 'DMZ 평화의 길' 최종노선(안) 확정 및 통합브랜드(BI) 등 디자인 개발

○ '한국섬진흥원' 신설을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완료('20.12월)

※ 섬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한국섬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LPG 배관망 확충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 지역밀착형 생활SOC 추진으로 생활여건 개선 및 국민안전 제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1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원 시책·특례 발굴 및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추진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서해5도 생활환경 개선,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군관련 특수지역 지원

□ **안전하고 편리한 주민생활환경 조성**

○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정비개선사업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 적극 추진으로 '17년부터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지속 감소
※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건수 : ('17년) 265건, ('18년) 209건, ('19년) 178건

○ 공중화장실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및 홍보물 제작, 불법촬영 근절 지속 점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및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 지원사업 추진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허가신고 간주제 도입,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시도위임 등 옥외광고물 법령개정 추진('20년, 4건)

○ 개인자동차 타사광고(서울, 경기, 인천), LCD 활용 부동산 광고(서울, 경기도, 인천), 전기버스 창문 디지털사이니지(수원) 등 실증특례 추진

□ **주소정보의 안정적 정착 및 주소체계 고도화 기반 마련**

○ 도로명주소 등 위치정보 사용편의 제공 및 인프라 확대

○ 도로명주소 사용 국민 불편사항 정비를 통한 사용환경 개선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20.12.8. 공포, '21.6.9. 시행)으로 2차원 평면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 주소체계로 전환

○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 실시 및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체계 구축

4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실적 및 성과

○ 추진 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 민생·경제 어려움 확대**

※ OECD, '20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 2.9 → 2.4%(△0.5%p)로 대폭 하향조정(3.2.)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안전망**(「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제공**하여, **국민 생활안정** 및 **경제 회복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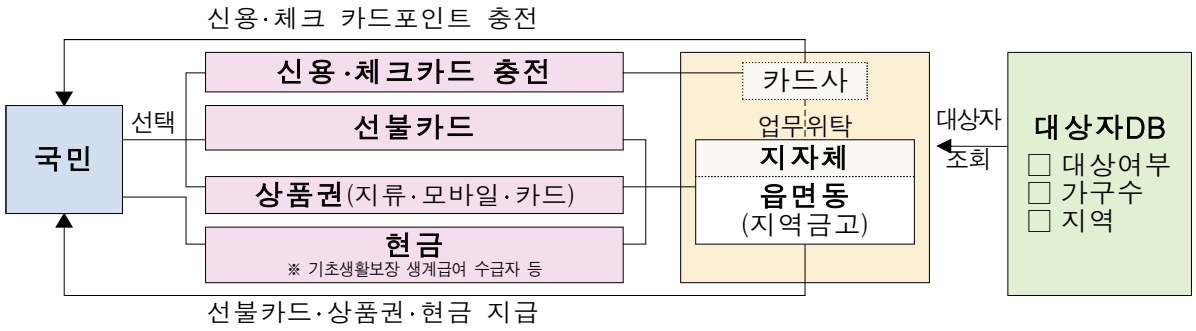
< 긴급재난지원금 개요 >

▪ **(지원범위) 전 국민 가구***(예산편성 기준 2,171만 가구)

▪ **(지원수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선불카드, 상품권 등 지급

* 취약계층에 한하여 별도 신청 없이 현금지급(총 286만 가구)



○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경과

'20.3.30.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발표**(제3차 비상경제회의)
'20.3.31.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범정부TF 구성**
'20.4.16.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예산안 국회 제출**(소득하위 70% 국민 가구)
'20.4.30.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예산안 국회 의결(전 국민 가구)**
'20.5. 4.	취약계층* 대상 **현금지급** 실시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총 286만 가구)
'20.5.11.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지급 시작
'20.5.18.	**선불카드·상품권** 신청·지급 시작
'20.8.31.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종료**

○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성과

<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성과 >

▪ (신청·지급) 전국 **2,216만 가구***, **총 14조 2,357억원** 지급 완료
* 신용·체크카드 1,464만(66.1%), 선불카드 292만(13.2%), 현금 287만(12.9%), 상품권 173만(7.8%)

▪ (사용) 지급액 12조 1,273억원* 중 **12조 656억원(99.5%) 사용**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액(현금·지류형 상품권 제외)

- **지급 한 달** 만에 **대부분 가구에 지급** 완료

· **5월말까지 2,100만 이상 가구**에 지급, **국민 생계 안정**을 **신속 지원**

※ 5.31. 기준 2,132만 가구(예산편성기준 지급대상 2,171만 가구 대비 98.2%) 지급

· 재난지원금 지급에 IT기술을 접목한 **한국이** 서류작업 위주의 일본에 비해 **지급속도·효율성 면에서 탁월**한 것으로 평가(美 블룸버그, 5.21.)

※ 한·일 양국, 같은 날 예산 승인(4.30.) / 6.9. 기준 지급률 : 한국 99%, 일본 28%

< 관련 언론보도 >


Economics
In Virus Relief, Tech-Savvy Korea Beats Paperwork-Heavy Japan
► 10 million Korean families get payments without even applying
► Hundreds queue for hours in Tokyo to reset online applications

(블룸버그통신, 5.21.)


중앙일보
가구 94% 재난지원금 받았다 "1분 신청, 외신도 놀이 평가"

(중앙일보, 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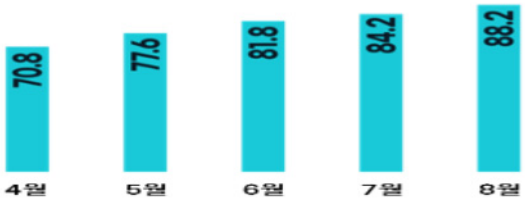
- **소비심리 반등** 및 **기업 체감경기 회복**

·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5월**부터 **소비자심리지수(CCSI)***와 **전 산업 업황BSI****가 **4개월간 연속 상승**, 경기 침체 완화에 기여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100보다 크면 낙관적)

**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한 지표(긍정보다 부정이 많으면 100이하)

< '20.4~8월 소비자심리지수 >



8월 소비자동향조사(한국은행, 8.25.)

< '20.4~8월 전(全) 산업 업황BSI >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한국은행, 8.26.)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현황

- 총 **2,216만 가구, 14조 2,357억원** 지급 완료

· 지급수단별 신청·지급 현황

구분	계	현금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가구수	2,216만 (100%)	287만 (12.9%)	1,464만 (66.1%)	173만 (7.8%)	292만 (13.2%)



□ 신속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

○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부담 등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추경예산 편성**

- 역대 최대규모인 65.7조원, 649회(단체별 평균 2.7회) 추경예산 편성(11.26.기준)

※ ('15) 36.5조 → ('16) 40.7조 → ('17) 45.0조 → ('18) 40.1조 → ('19) 52.2조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재정 총력 투입**

-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비 12.4조, 지방비 2.1조 투입
- 자치단체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6.8조 규모 예산편성

□ 재정분권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1단계 재정분권** ('19년~'20년)

- **(재정격차 완화)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 상생발전기금 등**

※ **(지역별 가중치) 현행 유지**(시도 소비지수에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 = 1:2:3) 적용)

※ **(상생발전기금) '20년부터 지방소비세 인상분**(10%p)에서 출연

- **(기능이양) '20년부터 3.5조원 내외 규모 지방으로 이양**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25%p 인상**

※ (기존)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 → (개정)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

- 1단계 재정분권 완성으로 '20년부터 **지방소비세율 21%로 확대**, 국민세 부담 없이 **연간 약 8.5조원**의 지방세수 확충

-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10%p 단계적 인상** ('19년 4%p+'20년 6%p)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지방소비세* 10%p)**

  * 1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19년 4%p '20년 6%p)되면서, 인상분에 대한 안분기준(10%p)도 '20년에 새롭게 규정

  ※ (기존) 부가가치세의 11% → ('19년) 15% → ('20년) 21%

  ※ 입법예고(12.9.)→ 법제처 심사(12.16.)→ 차관회의(12.17.)→ 국무회의 상정(12.22.)

○ **2단계 재정분권** ('21년~)

- **2단계 재정분권 및 재정형평화 적극 추진으로 실질적 재정확충**

  ·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한 지방세 확충*,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복지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등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마련

  * 1단계 재정분권으로 국세:지방세(76:24) 구조개선 → 70:30 추진

  · **보통교부세**의 기초수요 산정방식 변경 검토, 보정수요 정비, 자체노력 조정* 등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하여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

  * 지자체별 재정효과 분석을 통한 패널티·인센티브 적용 가중치 재조정 등

  · **지방보조금** 총칙·교부·관리·제재 등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관리·운영 도모

  * 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강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근거 마련,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전·사후 제재수단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강화 등

❖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기금법 등 재정분권 관련 법령 개정(~'21.하)**

□ 주민참예산제도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 (**법령개정**)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제1항 제10호의2를 **신설**하여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투명성 제고**(1.29)

- 자치단체에 **개정 사항 알림** 및 **후속조치**(조례 개정 등) **협조 요청**(3.6)

※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개정, 1.29)

○ (**공시편람**) 「**'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편람**」 개정(6.24)

- 재정공시편람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추가**

○ (추진계획) 「'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통보(3.27)

- '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 방향 제시, 홍보·컨설팅 계획 등

※ 지역특성 반영, 실질적 주민 참여, 포용적 사회가치 실현, 소통·협업 강화 등

○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 365」 개편하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 구축(~6월)

- '주민참여예산현황' 에 모든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웹주소) 연계

※ 개편 계획 수립(6.8), 자치단체 웹주소 검색·자료 제공(6.17, 재정협력과)

□ 주민참예산기구 구성 및 예산반영 현황 증가

○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목표(234개) 달성(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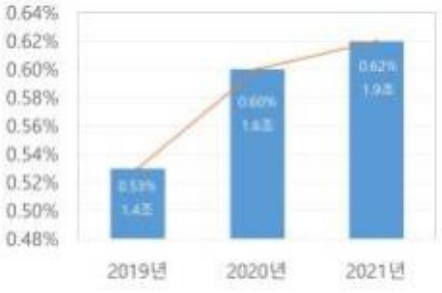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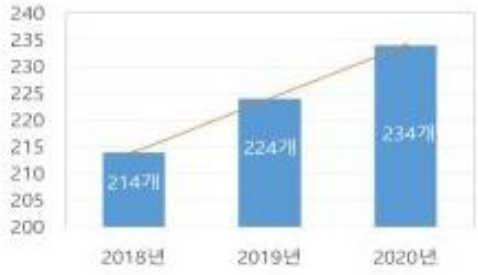
※ (목표) '18년 214개(↑증 12) → '19년 224개(↑증 10) → '20년 234개(↑증 10)

- '20년 12월 현재, 전년대비 **10개 증가한 234개** 구성 완료(96.3%)

○ (예산반영 현황) 자치단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 비중 증가

- '21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전년대비 **0.3조 증가한 0.62%**(1.9조)(100%)

※ '19년 0.53%(1.4조, ↑증 0.3조) → '20년 0.60%(1.6조, ↑증 0.2조) → '21년 0.62%(1.9조, ↑증 0.3조)

예산반영 현황	주민참여예산기구 수
	

□ 지역균형 뉴딜 및 '경제 전시상황' 대응을 지원하는 교부세 제도 개편

○ **(보통교부세) 재난안전·일자리 투자 확대** 지자체에 교부세 증액, 세입 확대를 위한 **수입 자체노력 인센티브 규모 확대** 방향으로 제도 개편

○ **(교부세감액)** 과도한 **징계적 감액 제도**를 **컨설팅 지원형** 제도로 **전환**

- ①위반법령 강행규정 확인 → ②실질적인 재정 손실유무 → ③수입징수의 용이성 → ④교부세위원회 소명기회 부여(지자체 요청시)

※ (사례) 인천시 지하도상가 대부료 과소 산정
- 대상 476억 → 실무검토 16억(③적용) → 분과위 8억(④적용, 적극적 조례개정 노력 50% 경감)

○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의 **재난대응 기능 강화**하여 **현안특교 추가지원**[*] 및 **재난특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 개선

* 호우·태풍피해 지역 지역현안사업 긴급 지원(83개 지자체 516억원)

⇒ **교부세 제도 혁신으로 지방재정의 포용성 강화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 적극적 자금 운용 및 신속집행을 위한 자금 운용 및 제도 개선

○ **코로나19**로 인한 **세수감소** 및 **방역사업비 과다 지출**로 자치단체의 자금 상황 **악화,** 당초 상반기 계획 대비 **2조 9천억원(3월, 4월, 6월) 당겨 배정**(71.9%)

○ **과다한 이·불용액에 대한 패널티 확대** 방향으로 제도 정비

⇒ **자치단체의 적극적 재정운영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부양 도모**

□ 교부세 업무 효율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 최초 구축

○ **(내용)** 자치단체가 직접 시스템에 자료 입력,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부동산, 감액 및 조정교부금) 전체 산정자료 및 특별교부세 신청 등 관리 가능

○ **(효과)** ①**온라인 산정자료 수집 및 활용**으로 인력·비용·시간 소요 감소
②**지방재정·지방세 시스템 연계**로 자치단체 업무 효율성 향상
③산정자료 시스템 등록에 따른 **정확하고 투명한 산정 지원**

⇒ **'21.1.부터 전체 절차 시스템 운영,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교부세 업무체계 확립**

□ 지방계약제도 개선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7.14.)

1) **한시적 특례**(7.15.~12.31.)*를 **통해 계약절차를 효율화**함으로써, 지역 중소업체의 공공계약 수주기회 확대 및 경영상부담 완화

*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정(7.15.)

	특례 사항(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금액한도 **2배 확대**(§25③),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토록 절차 완화(§26③)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 **50% 인하**
소요기간	검사기간은 **14→7**일로(§64①), 대가지급기간은 **5→3**일로(§67①) **단축**

2) 감염병·재난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 확대***

* ❶감염병 발생 및 유행 시 ❷재난안전인증제품(재난안전조명 등) 구매 시

3) 하자 담보책임 기간 기산점 조정*, 입찰공고 시 원가산정 기준 공개** 등 **입찰참가자 보호 강화**

* **(기존)**전체목적물 준공 시점 → **(개선)**먼저 인수·사용한 부분은 인수·사용 시점

** **(기존)**총액 → **(개선)**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지자체 혁신조달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1.3.)

1) 조달사업법령 개정에 맞추어 **자치단체에서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혁신제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정비

2) 클라우드컴퓨팅법령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를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 예시 : 클라우드서비스(인터넷을 통해 서버·소프트웨어 등 임대·제공하는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원격근무, 화상교육·회의 등) 등

○ **공정거래 조성·지역기업 보호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입법예고(10.14.~12.23.) 후 법제처 심사 중(11.26.~) → 개정 완료(12월 말 예정)

1) **공정거래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정당 제재를 받는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및 과징금부과율 강화***

* **(제한기간)** 2~4개월 → 5~7개월 / **(과징금)** 4.5% → 9%

2)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한도 상향**(5억→10억 원 미만)으로 지역중소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투명·공정한 공법 선정을 위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예규) 제정 추진**

※ 관계부처·업계 의견 조회(8월) → 제정안 마련(~10월) → 의견 수렴(11.10.~11.20.) → 규제 심사 등 절차(~12월) → 공포(12월 말) 및 시행('21년 2분기~)

- 자치단체 공사계약 시 신기술·특허공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공법 선정의 절차 및 기준**을 정한 예규 제정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기준」 제정(안) 주요내용

- 공법 선정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 → 신규 개발 기술의 **시장진출 기회** 확대
- 외부전문가가 사전에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기술보유자에게 정보제공 요청 → 공법 적용의 **적정성** 제고
- '공법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투명성** 확보
-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평가항목 및 방법 선택·적용→ 발주기관 **재량권** 부여

○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공사·물품의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마련 추진

※ 관계기관 T/F 운영('20년 1월~) → 「대형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품질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12월) → 시행('21년~)

1) 지역우수업체 가산점 부여, 공사지역 소재업체 설계비 보상 확대 등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대형공사(300억 원 이상) 평가세부기준 마련

* 현재 국가계약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국가와 지방의 차이로 인한 한계 존재

2) 물품계약(2,000만 원 이상) 시, 환경우월성 등 **비가격요소의 반영** 및 교복·앨범 등 **계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

○ 지역기업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개정(6.10.)

- 공공계약 참여 업체에 대한 **원가 보장 및 대가지급** 방안*,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 방지** 방안** 등 마련

*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부담금의 원가 포함, 현장 반입 자재 기성 인정 확대, 설계공모 당선자와 공고금액으로 계약 체결토록 명시 등

** 발주기관 사유로 계약이행 일시정지 시 계약상대자 서면통보 허용, 지연배상금 부과가 제외되는 불가항력 사유 인정범위 국외까지 확대 등

○ 투명성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4.13.)

- 사회적 약자·환경 보호 등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기업에는 가산점** 부여, **반하는 기업은 감점 확대** 등 낙찰자 결정에 공익적 가치 반영

※ (가점) 동반성장지수, 건설재해 예방활동, 에너지효율·녹색건축 인증실적 우수자 등
(감점) 임금체불 명단 공개 대상자,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자 등

○ **효율적이고 투명한 계약절차 마련을 위한 예규 정비 지속 추진**

1)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위축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21년 6월)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6.12.)·시행(6.22.)

2)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방법·대상 변경(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300억원 이상 공사 및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9.1.)

3) 종합-전문건설 간 업역 규제 폐지(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시공실적·경영상태·하도급 적정성·신인도 평가방법 마련 추진(~12월 말)

□ ´20년도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 및 관계법률 정기 개정 추진

① 다양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제안·건의 수렴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학계, 관계부처 및 주민공모 등 개정사항 취합*

  * 총 1,035개 개선과제 취합(자치단체 982건, 타부처 10건, 주민제안 9건, 세무사회 8건, 학회 12건 등)

-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및 「지방세발전위원회」*를 통해 과제 채택 및 채택과제에 대한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심층적 분석 수행**

  * 정부위원 1명(지방재정경제실장), 학계·변호사·회계사·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28명

②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입 관계법률*(5법) 개정계획 마련 및 개정 추진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주요 개정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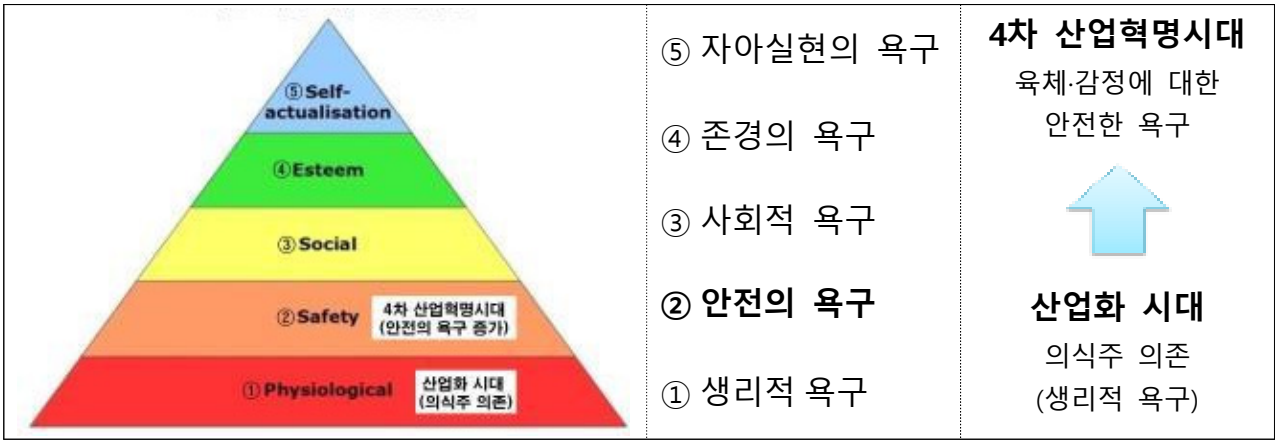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기산일 명확화 등
지방세징수법	•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근거 마련 등
지방세법	• 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 등 주요 세목 합리적 개선
지방세특례제한법	•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지방세지출 재설계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 등

5 국민과 함께 안전사고 사전예방

□ 국민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 기술의 발달에 따른 소득의 증가로, **과거 의식주(생리적 욕구)에 의존**하던 **국민 생활 의식이 점차적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안전의 욕구)**으로 변화

<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



○ 국민들의 안전한 사회에 대한 기대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적**으로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이 필요**

□ 안전정책 협의체 운영

○ 대형·이슈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 협의·조정 역할 수행**이 필요

- 관계부처 및 지자체뿐만 아니라 청와대, 총리실 등과 수시 업무조정
- 중요 재난안전 현안 관련, 해결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중앙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전달하던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우수한 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논의의 장' 마련** 운영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법」 정비

○ 복잡·다양한 형태로의 재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법령의 지속적인 정비가 중요

□ 부처 내 안전관리 역량과 협업 성과 창출

○ 재난안전본부 핵심업무 등 중요 정보 공유를 통해 간부 등 구성원 역량 강화 및 부서별 협업체계 구축

□ 안전정책 대국민 홍보

○ 수시로 변화(개선)되는 정부 안전정책에 대한 대국민 정책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책 수용도 향상 도모

□ 불합리한 안전제도 개선방안 마련

○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총리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 7.2)

- **(추진배경)** 무신고 숙박영업 근절을 위해 복지부 등 7개 부처 합동 대책마련(대통령 지시사항)
- **(주요내용)** 무신고 운영에 대한 처벌규정 상향, 합동단속 정례화, 소방·가스 점검 강화 등

○ **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방안 마련**(’ 20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9.2)

- **(추진배경)** 물류창고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
- **(주요내용)** 물류시설법령에 창고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규정 마련, 물류창고 화재안전기준 신설,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강화 등

○ **안전관리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20년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 9.2)

- **(추진배경)** 환경부, 국토부 등 18개 부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규정 전수조사·분석을 토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개선방안 선제적 마련
- **(주요내용)** 안전관리계획이 없는 분야 신설, 의견수렴 절차, 심의 등 명시, 계획수립 이후 공개·환류 강화

□ 안전기준 통합관리

○ 각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등록 안전기준* 310개 추가 등록**(제10회 안전기준심의회 서면개최 11.12)

※ 안전기준 등록추진 경과 : **('17년) 443개 → ('18년) 680개 → ('19년) 1,328개**

* 각종 시설·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할 **기술적 기준으로**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에서 통합 등록·관리

- **(부처별) 국토부 152건,** 산업부 25건, 환경부 19건, 행안부 19건 등
- **(분야별) 교통·교통시설 136건,** 건축시설 46건, 환경·에너지 39건 등

□ 지속가능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기반 마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 체계적인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서영교 의원 법안발의, 11.24)

- 21대 국회 입법 재추진을 위하여 20대 국회 발의 법안 정비*(~'20. 8월)

  * 전문가 자문(2회), 관계법령 및 유사입법례 분석을 통한 법체계 및 자구 정비 등

- 기본계획 수립, 진흥시설·단지 조성, 전문기관 설립, 신기술·제품 인증 및 사업화 지원 등 재난안전산업 진흥 제도 운영 근거 및 절차 등 규정

안전산업 육성제도 발굴 및 브랜드 개발

○ 재난안전산업 육성 **중장기 추진 계획**(Roadmap) 수립

- 자발적 시장형성 한계의 안전산업 문제점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 도출 및 로드맵 제시
- 안전산업 핵심분야*, 유망기술**, 유망기업*** 육성 등 중점 전략투자 분야 선정 및 단계별 육성 세부 전략 구체화

  * 풍수해, 지진, 폭염, 미세먼지, 보건(감염병) 등 재난을 중심으로 분야 선정

  ** 4차 산업혁명기술(빅데이터, AI 등), 비대면(Untact)·무인(Unmanned) 안전기술 등

  *** 선도기업(앵커기업) 중심의 육성 전략으로 연관 기업 동반성장 도모

- 기존 지원사업간 연계방안 및 장·단기 지원정책 제시, 수요자 중심의 신규 사업 및 제도(법·규정 등) 개선사항 발굴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0. 8월~ 12월 * 수행사 : 산업연구원
√ (주요내용)
① 안전산업 육성 제도 발굴, 전략수립 및 로드맵 제시
② 기존 지원사업 연계 및 신규사업발굴
③ 산업 대표 브랜드 개발 및 활용 등

○ 재난안전산업 **대표 브랜드(BI) 구축**

- 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 및 산업 여건을 고려한 재난안전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 브랜드* 구축('20. 12월 확정 예정)

* "안전산업"이라는 한글 네이밍을 직관적이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로 형상화

- 우수한 제품·기술·기업 등에 대표 브랜드 부여하여 재난안전산업의 이미지 제고 및 글로벌 시장 개척 활용



착수보고회(9.14)



중간보고회(11.20)



산업대표 브랜드(BI안)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 재난안전산업 관련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추진(5.~12월)

-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 10. 29.(목)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0. 5월~ 12월 * 수행사 : 한국갤럽, 울산과학기술원 공동연구
√ (주요내용)
① 국내 소재 안전산업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일반현황 조사
②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방안 도출
③ 재난안전기업 유통망 조사를 통해 생태계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6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피해 최소화

□ 호우·태풍 피해 특교세 지원 확대를 통한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9.25., 10.22)

○ 피해 지자체에 국고 지원이 됨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교세 최대한 지원(총 3,248억원)

※ 특별재난지역선포 지자체가 복구비 부담으로 인해 시급한 주요 지역현안사업 차질이 우려되어 지역현안 특교세도 최초 지원(총 516억원)

○ **(효과)**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로 조기 주민 생활안정 및 경제 회복 도모

□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적기 교부(연중)

○ **(산불대책·집중호우·태풍·ASF·코로나19 등)** 연중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지자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

○ **(폭염·한파 등)** 계절별 특성 및 기상 전망 등에 따라 재난대책비 지원

□ 현장 위험요인·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책 수요에 다각적 지원(11.26.)

○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설치)**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통제 지연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부산 초량동)함에 따라, 근원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위험등급이 높은 '지하차도 자동화 사업'에 우선 지원

※ 지하차도 통합 운영프로그램 구축비 1개 지자체 별도 지원 ⇨ 개발 이후 전국 공동활용

○ **(어린이·노인 보호 구역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및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사업비 지원으로 교통사고 유발요인 집중 해소를 통한 재난 취약계층 보호 등

□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발굴한 창의적 선도사업 적극 지원(12월)

○ 재난예방 효과가 크거나 지자체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그간 재정투자에서 소외되었던 사업이나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지원

※ 자체에서 신청한 사업 중 자체평가 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11개 사업 확정

○ (효과) 사업 시행 후 타 지자체 확산을 통한 재난안전 시너지 효과 창출

• **재난관리기금('20년) 6조 7,870억원 운영**
코로나 19, 집중호우·태풍, AI, ASF 등 지자체의 재난예방을 위해 사용, 월별 집행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기금의 안정적 운영 추진

□ 코로나19 , 풍수해 등으로 기금 수요 급증에 따라 지자체 적립집행상황 지원

○ **(집행실태 관리)** 매월 재난관리기금 집행실태 파악을 통한 지자체의 코로나19 적극 대응 독려 및 지원

○ **(신속한 유권해석)**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집행 상의 의문점(질의)에 대한 즉각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 코로나19 신속 대응 지원

○ **(기금 확보)** 재난관리기금 집행 시 태풍·호우 등 코로나19 이외의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 확보 조치

- '20년 법정적립액(7,000억원) 정도는 별도 확보하여 겨울철 대설·한파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상시 기금관리 실태 모니터링

• **자연재해대책법, 교부세법 등 행정지원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재난관리기관 정책 수요 반영한 법령 개정 추진

○ 우수유출저감시설 범위 확대,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 명칭 변경,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조항 신설 등

□ 지자체 기금 집행 어려움 해소위한 기준 완화 [재난안전법 개정] (9.2)

○ **(중대본 심의·의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유례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인한 피해로 지자체의 복구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중대본회의, '20.8.13.)

○ **(특례 규정 개정)**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5조의2('20년 호우·태풍 피해복구) 개정·공포(9.2.)

- '20년 호우·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 예치금액 사용 허용

□ 항구복구사업에 재난안전 특교세 지원토록 기준 마련 **(교부세법 개정)** (9.9.)

○ **(주요내용)**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수립·확정한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에 대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항구복구사업에 대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복구계획 수립 주체에 기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외 '재난관리주관기관'까지 확대

○ **(개정효과)** 산림청 산불·산사태 복구사업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수립·시행하는 복구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추진 (9월)

○ 풍수해·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발생 및 예측하지 못한 신종 재난 등에 지자체가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적기 지원

○ 기존 확정된 사업을 축소 또는 조정하여 재난 긴급대책·응급복구·항구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지원 확대 및 적기 지원

□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추진

○ 2단계('16~'20)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상 내진율* 계획 49.3% 대비 실적 69.6%로 **20.3%p 초과 달성**

* 실적(계획) '19년 67.2%(47.3%) → **'20년예상 69.6%(49.3%)**

○ 3단계('21~'2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안) 마련(12월중)**

- 33종 시설별 분류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및 내진실태 현황, 시설물의 중요도, 내진율 등 우선순위*를 고려한 체계적 내진보강 추진

* 국가 주요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 기술 개발('17~'19 / 단국대 컨소시움, 10억원)

○ 중앙·공공 및 지자체 **내진업무 담당자 온라인 교육**(12.17.)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및 인증비용 지원 안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실무,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 활용법 교육 실시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국비22.5억)

* 내진성능평가비 90%(국비 60%, 지방비 30%), 인증수수료 60%(국비 30%, 지방비 30%)

- 인증지원사업 국비 2,997백만 원중 **1,385백만 원(46.2%) 집행(12월예상)**

○ 민간건축물 **62건*** **인증 완료**, 46건 추진 중, 22건 인증준비(11월말 기준)

* '19년 실적 5건 대비 **약 12배 이상 실적향상**

○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홍보매체 선정을 통한 맞춤형 홍보 추진

- 광범위한 가시권과 시각적효과가 뛰어난 도심전광판* 홍보영상 표출(~7월)

* 동대문 APM빌딩, 삼성 슈페리어 건물, 잠실 대우유토피아, 서울역, 부산역 등

- 아파트 승강기 미디어보드* 및 모바일앱** 홍보 영상 및 이미지 송출(10~11월)

* 전국 501개 아파트 8,688기 엘리베이터 1일 100회 30일 노출

** 네이버 부동산 및 부동산114 모바일앱 노출**(4주간 약 4백만회 노출, 클릭수 18,598회)**

7 사회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안전수준 향상

□ 사회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화 추진

○ 범국가 사회재난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지자체 중심의 예방·관리제도 확립을 위한 (가칭)**「사회재난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감염병, 화학사고 등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처 중심 관리체계에서 사회재난 전반을 포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 추진

구분	현재(As is)		개선(To be)
관리체계	■ 주관부처별 분산 관리 ■ 중앙부처 중심 관리체계	⇨	■ 범국가 사회재난 관리체계 구축 ■ 현장 중심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마련
법·제도	■ 개별법에 따른 재난유형별 관리 ■ 사회재난 특성을 반영한 제도 미비	⇨	■ 모든 재난유형에 공통제도 마련 ■ 사회재난 대응 맞춤형 법률 제정

- 법률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법 제정 T/F팀 구성·운영(2회)
- 법 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서면) 및 지자체 의견수렴(영상회의, 12.1.)

□ 사회재난 예방·관리에 필요한 핵심제도 마련 추진

○ 지자체 주도의 사회재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성 분석제도** 도입 추진

< 사회재난 위험성 분석 및 예방계획 수립 절차 >

1 단계

■ 지역 재난특성을 반영, **위험요인*** **발굴·분석**

* 시설물 노후도·위험도, 화재·위험물 등 안전기준 위반사항 등

⇨

2 단계

■ 지자체별(시군구) **사회재난예방 종합**(5년)**·시행**(매년)**계획 수립**

※ 부처 등 他 기관에서 관리하지 않는 사각지대 발굴

⇨

3 단계

■ 사회재난 고위험 구역은 **「특별방재구역」**으로 **지정, 집중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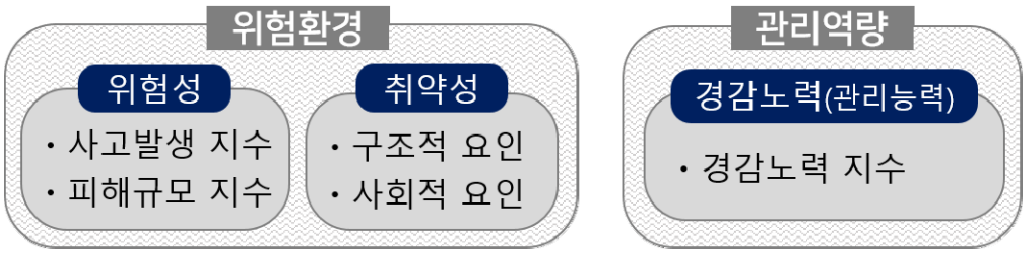
※ 정비 사업에 국고보조 등 지원

○ 사회재난 정비사업 등에 포함될 사업 발굴 등을 위해 **「지자체 사회재난 대응·예방사업 발굴 및 지자체 지원제도 연구」** 용역 추진('20.6~12.)

○ 지자체 대상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제도 마련 및 지원체계 정립

-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모델 개발 및 지자체 시범진단」** R&D 연구를 통해 안전도 진단을 위한 기초모델 및 진단지표 개발('19.7.~'20.7.)

<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모델 >



- 시군구별 사회재난 위험요인과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비교하여 재정지원(재난특교세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자발적 개선 노력 유도

-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지표 고도화 및 진단 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역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지능형 플랫폼 개발」** R&D 연구 추진('20.11.~'22.7.)

* 사회재난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사회재난 분석 및 진단결과 자동화 기술 개발 추진

□ 재난관리 기관 간 협력 대응을 위한 사회재난 정책협의회 운영

○ 비상시 재난관리 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실무급 협력체계 강화

- 행안부·주관부처·지자체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재난정책 분과협의회 운영 활성화(산불, 사업장 인적사고, 가축질병 등 분과협의회 12회)

- 분과협의회 중심 현장지원단 구성, 지자체 대응·수습활동 지원 등

※ 현재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산불,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13개 협의회 운영 중

- 평시에는 재난관련 **정보 공유** 및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 논의**

※ 빈발 재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검토,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 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추진배경)** ’20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코로나19에 대한 총력 대응을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연기(2.3., VIP-총리 주례회동) 결정하였으나,

- 최근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4.29)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 생활 위험·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에 따라 긴급 추진

〈 ’20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요 〉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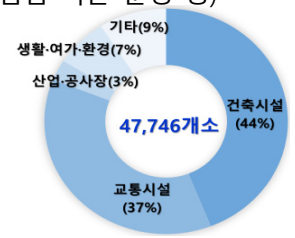
❖ 기　　간 : ’20. 6. 10(수) ~ 7. 10(금), 31일간

❖ 참여기관 : 27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 지자체는 재해취약시설 · 유원시설 · 전통시장 등 제한적 참여

❖ 점검대상 : 건축물·시설물 등 47,746개소

❖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 및 확인점검 실시



○ **(참여 연인원)** 합동점검방식으로 연인원 109,762명*이 점검에 참여

* 공무원 69,799명, 민간 전문가 25,642명, 공사·공단 직원 등 14,321명

○ **(주요 지적사항)** 행정처분 776개소 (과태료 124개소, 시정명령 633개소, 영업정지 등 19개소), 보수·보강 6,898개소, 정밀안전진단 52개소 등

○ **(국민 참여)** 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건수는 159,801건**으로 전년도 91,653건 대비 74.4% 증가

※ (’17년) 36,082건 → (’18년) 58,530건 → (’19년) 91,653건

□ 정부합동점검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안전점검 추진

○ **정부합동안전단을 통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기간 / 대상 : ’20.1.~.11 / 총 47개소(확인점검 28개소, 수시점검 19개소)

▸(확인점검) 총 28개소 : 물놀이(2), 여객선(11), 대학·연구실(2), 여객자동차터미널(3), 야영장(6), 경기장(2), 전통시장(2)

▸(수시점검) 총 19개소 : 여객자동차터미널(7), 영화관 등 복합건축물(12)

○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합동점검 추진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기간 : ’19.6.1.(월) ~ 8.31.(월) ※ ‘사전대비’(4.15~5.31), ‘특별기간’(7.13~8.15)

- 주요내용 : 물놀이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안전환경 개선(위험구역 전수조사 및 안전시설 설치), 내수면 안전관리 추진(안전요원 배치, 비상근무) 등

□ 신기술 적용을 통해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 확대

* 범부처 재난 R&D(18년 대비, 21년 2배↑): (18년) 8,988억 → (20년) 1조 3,020억 → **(21년) 1조 8,599억**

※ 행안부 R&D(18년 대비 21년 2배↑): (18년) 436억 → (20년) 654억 → **(21년) 880억**

○ 국민·지역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민생활안전, 지역문제해결, 기후재난 대응, 재난안전산업육성 등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분야 투자 확대**

○ 사회복합재난대응, 자연재난정책연계, 취약계층안전사고, 재난피해복구역량 강화, 지능형상황관리 등 **신규 5개 사업(166억원) 추진**

○ IoT센서 기반 재난모니터링*,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예측**, 인공지능기반 상황관리 의사결정지원*** 등 **연구과제 예산확보**

* 광센서 기반 지하시설물 및 초고층 건물 통합안전관리기술 개발('21년 10억)

** 빅데이터 기반 사회재난 취약성 분석 및 피해영향분석기술 개발('21년 8억)

*** 분석예측-원격감시-의사결정 연계 지능형 상황관리 기술개발('21년 12억)

○ 지자체·부처 협력을 통한 재난안전 기술개발 강화와 국민 제안 **기술개발 지속 투자를 위해 계속사업 증액**

※ 지역맞춤형기술개발지원사업(증37억), 부처협력사업(증31억), 국민수요맞춤형(증28억)

□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고도화 및 신종재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 국가핵심기반 지정권고 법적 근거 마련

- 국가핵심기반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자산에 대하여 **행안부 장관이 지정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6.4. 시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5항 신설

○ 국가핵심기반 지정 확대

-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구·문화재 지정분야 신설('19.8.27.)
- 국가핵심기반 일제정비를 통해 **공동구 28개, 문화재 5개 최초 지정**(6.23.)

※ 일제정비(안) : 308개 → 340개 (32↑) / 신규지정(34), 변경지정(4), 지정취소(2)

○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고도화를 위한 분야별 수립지침 마련

-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고도화를 위해 지정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분야별 보호계획 수립지침(9종) 및 절차서(9종) 작성·배포(3.13.)

○ 드론 테러 등 신종재난에 대비한 국가핵심기반의 선제적 대응

-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드론공격 등 새로운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는 드론 테러에 대한 선제적 대책 필요

- 드론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한계에도 불구, 국가핵심기반은 드론을 위험요소로 인지하는 초보적 단계라 할지라도 선행적 조치

  *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지침 및 절차서에 對드론 대책 포함(3.13.)

《 국가핵심기반 對드론 대책 》	※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방안
① 관측 초소 및 핫라인 유지	② 군·경·국정원 등 신고 및 조정자 위치 추척
③ 증거 확보 및 위법 행위 확인	④ 군·경과 협조체계 구축
⑤ 드론비행 금지 게시판 부착	

○ **국가핵심기반 중장기 로드맵 및 세부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

- 국가핵심기능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 인프라의 보호 및 복원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 마련(6.18.~11.15)

○ **국가핵심기반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6.16.~6.25.)

- 전년도 평가 미흡기관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호계획 수립 전문성 제고

○ **정부합동점검 및 이력관리를 통한 종합적 안전점검체계 구축**

- 분야별 전문기관 참여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중점관리위험에 대한 위험관리전략 점검 등 정부합동점검 실시(8.11.~8.20.)

8 국민보호를 위한 비상대비 · 민방위태세 확립

□ 비상대비·민방위 업무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틀 마련

○ 비상대비업무 전반(계획, 자원, 교육·훈련 등)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정부*·의원입법**) 추진

* 제명 변경(비상대비관리법), 비축지정 승인권자 조정(대통령→총리), 비상대비교육 의무화 등

** 충무자체계획 근거 마련, 비축물자 사용범위 확대 등 (전체회의 상정 '20.11.16.)

○ 민방위 업무 활성화 및 유사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정책 제도개선' 방안** 마련('20.10.22.)

* 5개 분야 25개 과제 : ① 민방위 조직·편성 ② 민방위 교육·운영 ③ 민방위 동원·지원 ④ 민방위 시설·장비 인프라 ⑤ 민방위 관리 및 국제협력

- 민방위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따른 민방위기본법 개정계획 작성('20.12.)

* ① 적 침투·도발에 따른 주민 피해 지원 근거 마련 ② 지원민방위대 설치 근거 신설 ③ 민방위 담당자, 대장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 등 7개 조문

□ 비상상황에 맞는 동원자원 집행체계 구축

○ 동원자원으로 지정된 1,508개 품목을 생산하는 7,186개 업체의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자원조사*** 실시

* 현지방문조사 및 서면조사(1차 : '20.2.11~3.20, 2차 : '20.5.18~26)

○ 비상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동원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별 확보 물자 및 수량 등을 조정하기 위해 동원자원 **소요심의회 개최**

○ 비상시 감염병 등으로 인해 국민 보건위생상태 악화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제조업체 **전수조사 및 동원업체 추가*** **지정**

* '20년 1개 업체 →'21년 31개 업체

□ 비상대비 비축물자 현실화 및 현장점검 실시

○ 최근 증가하는 비전통적 위협 이외에 사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단·장기 비축물자 현실화 방안*** 수립 및 시행

* 단기 : 수도복구자재(9종) 비축해제, 전시 구호물자(2종) 비축 최소화, 의약품(1종) 품질검사 강화 및 신형대체 추진

장기 : 철교·도로자재(38종) 신형대체, 발전·가스자재(143종) 품목 최소화 등

○ 비축물자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리부실 기관(5개) 및 비축물자 현실화 필요기관(9개)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행안부·주무부처)** 실시

※ 14개 기관(22개 장소)에 대해 점검 실시(11.2~11.13), 비축기준 마련, 실제 훈련을 통한 개선 등 23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조치를 통한 비축관리 개선

□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충무계획 수립 및 비상대비훈련 실시

○ 실체적 안보위협(드론 공격, 생화학 테러 등)에 대비한 **'21년 충무기본계획***(4월) 및 **충무집행**(7월)·**시행**(9월)·**실시계획**(11월) 수립

* '드론 공격 대비 국가중요시설 방호',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 비축' 등 총 76건 개정

○ 코로나19 상황 고려, **국가 비상사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

- 중앙부처, 시·도의 비상대비부서 중심으로 **'비상대비태세 훈련*' 실시**

* 정부종합상황실 운영, 상황 전파·조치(225건) 등 전시임무 숙달 (10.28.~30.)

- 시·도의 충무계획, 비축물자 등 **현장점검* 위주의 '충무훈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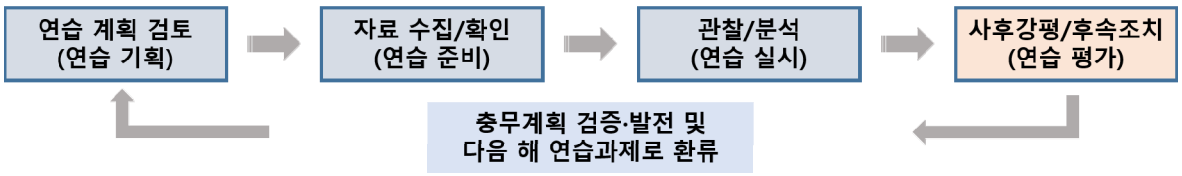
* 충무계획의 종·횡적 연계, 비축물자 관리부실 방지 대책 등 개선사항 총 36건 도출

※ 제주(9.21.~22.), 광주·전남(10.15.~16.), 대전·세종·충남(10.21.~22.)

○ 충무계획 및 정부연습 발전을 위한 **사후강평회의* 최초 실시**(11.24.)

* 토의방식으로 충무계획 보완소요 도출 및 '21년 을지태극연습 발전방안 마련

<연습평가단 운영 프로그램>



□ 국지도발 시 주민보호를 위한 위기대응체계 강화

○ 주민보호 총괄기구의 실행력 및 근거 강화를 위한 훈령 제정('20.12)

*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5장 20조) 1장 목적 및 범위, 2장 설치·운영, 3장 상황관리, 4장 지원 및 협조, 5장 보칙

○ 매뉴얼 실행력 및 체계 확립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 실무매뉴얼 개정

* 실질적 조치목록 강화,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지자체의 '지주본' 운영 반영 등

○ 국지도발 대비 위기대응체계 점검 및 훈련 실시(9회)

* 토의형 4회(중주본·지주본, 서울상황센터 등), 도상형 5회(행안부, 인천, 옹진군 등)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11~19년 227개소/ '20년 6개소 32억)

□ 신속·정확한 경보발령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전달체계 강화

○ 적 탄도탄 공격 시, **軍**(탄도탄관측)**과 행안부**(민방위경보) **간 시스템 자동연계**로 대국민 **경보발령의 신속성** 및 **정확성 확보**

* (기존) 화상전화로 경보발령 수동 요청(3분) → (개선) 시스템 자동연계(10초)

○ 민방위경보시스템(행안부)과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과기정통부) 간 자동연계를 통해 **민방위경보 방송매체 확대**

* (기존) 주요 18개 방송사 → (개선) IPTV, 케이블TV 등 164개 방송사

○ 민방위경보 전달의 사각지대인 **다중이용시설**(대규모점포, 영화관 등) **건물 내 경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기술적 기반 마련**

- **경보단말 의무설치** 및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 17개 시도 다중이용시설 **건물용 경보통제시스템 구축***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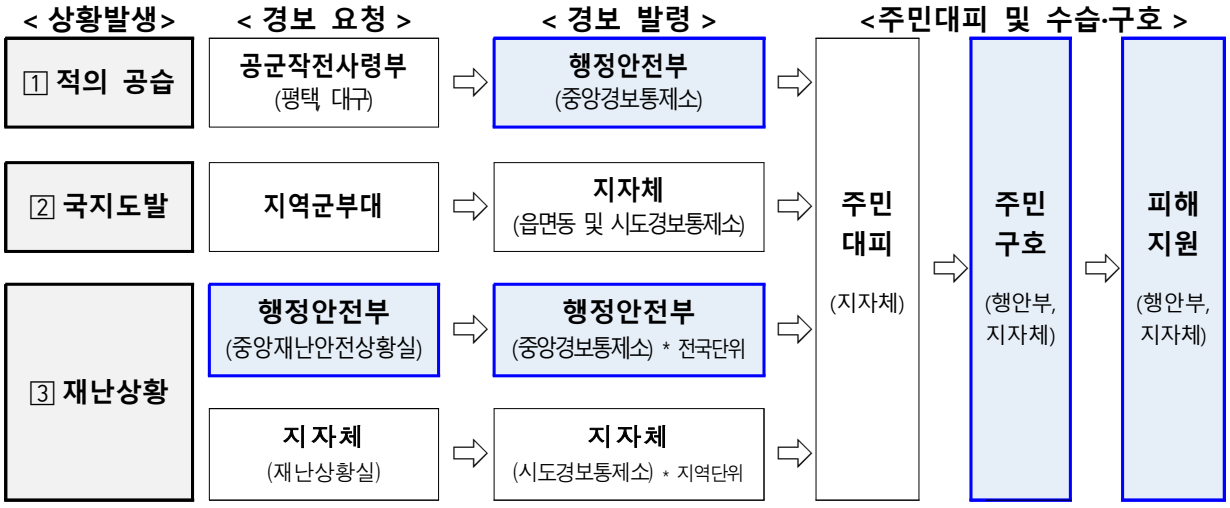
  * 사업수행방법(보조율) / 소요예산 : 국고보조사업(30%) / 289백만원

○ 풍수해 기간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제방붕괴·하천범람** 등 긴급한 주민대피가 필요한 경우 **민방위경보시설을 적극 활용**

  * 과거 15년간 총 31회(연 평균 2회)에 비해 35일간 총 41회 발령하는 등 적극대응

< 민방위사태(비상사태, 재난 등) 시 경보발령 및 주민대피 체계 >

❖ 민방위사태 시 경보발령 및 주민대피 체계



❖ 경보발령 전달매체 및 주민대피시설 현황

- 경보발령 전달매체 : 경보단말(2,637개), 라디오방송, TV자막, DMB, CBS, 전광판(28,764개)
- 주민대피시설 : 정부지원(233개소), 공공용(17,287개소)

9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정책성과 극대화

□ 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총괄·지원기능 강화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및 예산의 적정 편성·집행》

○ 2021년 세출예산 57조 4,451억원을 확보하여 '20년 55조 5,471억원 대비 1조 8,980억원 증액(3.3%↑)

- 특히 사업비는 '20년 2조 9,590억원 대비 2조 3,482억원(79.4%↑) 증액된 5조 3,072억원

■ **(규모) 행안부 사업비 규모가 '20년 3.0조원 대비 2.3조원 증액으로 사업비 5조원시대 개막**
■ **(위기극복)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사업, 일자리사업 등에 중점 투자**
■ **(지방부담) 지역사랑상품권(1조522억), 재난대책비(8,200억) 등 국고보조사업 증액으로 지자체 부담 경감**

《효율적 조직운영 및 체계적 산하기관 지원》

○ 체계적·효율적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 수립 및 시행

- 거시적·종합적 인력수요를 반영한 「**중기인력운영계획('20~'24)**」 **수립**(4월)

※ 자치분권·균형발전, 국민안전·재난대응, 사회·정부혁신 등 인력수요 반영

- 자체 조직진단 및 의견수렴을 통한 「**2021년 소요정원**」 **확보**(4~8월)

※ **(반영) 2과 1센터 33명** / (제출) 3센터 9과 262명 / (요구) 4센터 17과 1추진단 682명

-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2020년 재배치 추진계획**」 **수립·시행**(4월~)

※ 신규·현장수요 발굴분야 중심으로 총 37명(본부 14, 소속기관 23) 재배치 추진

○ 효율적 조직·정원 관리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총 6회)

- 2020년 소요정원 확보 기구 및 인력 등 반영(2.25.)

※ +2지소(충남지소·경북지소) +43명(본부 24, 소속기관 19), 공무수행근로자 지원 인력 +10명, 전직대통령의 배우자 비서관 등 감축 △2

- 디지털정부혁신 선도를 위한 전자정부국 조직개편(4.28.)

※ 디지털정부국 +3과, 정부혁신조직실 △2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과

- 벤처형조직 설치 및 총액인건비 직급조정 기간 연장(6.26.)

※ +1과(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 +2명, 직급조정 기간연장 11명(~'22.9.30.)

- 디지털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국가기록원 조직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관 등(8.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관) △2과 △34명 / (지자체 · 지방공공기관 공무직 정책지원) +2명

-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확대 개편*,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 등(9.29.)

* 1단 3과 → 1단 5과(재정정보화사업과,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 +11명

《부내 체계적인 입법 추진》

○ (양적측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활발한 대국회(의원, 입법조사관, 행정실) 설명 및 입법지원 활동으로 주요법안의 통과

구분	19대('12년)	20대('16년)	21대('20년)
국회통과법안	9건	14건	27건**

* 21대 국회 개원('20.5.30.) 이후, 법무담당관 및 소관부서 국회에 방문(약 70회 이상)하여 원활한 법안심사를 위한 설명 진행

○ 국회 행안위(1·2소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법안심사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등 우리부 주요법안 27건('20년 전체 76건) 통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 환경 제공》

○ **(IT기기 보안강화)** 단종된 윈도우 서버·PC OS* 전환, 부내 프린터·복합기(468대) 망분리 및 보안취약점 조치 지원, 서울청사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실시**

* (서버) 윈도우서버 2000, 2003, 2008 → 윈도우서버 2012 이상 / (PC) Win7→Win10

** 네트워크 스위치 30대(L2 10대, PoE 20대)

○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 사업 수행과정 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한 착수보고회(7.3.), 중간보고회(10.20.) 및 완료보고회(12월 말) 개최

○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모바일 업무서비스 통합매뉴얼 제작·보급

《적재적소 인사운영과 인적역량 강화》

○ 인사공감 게시판을 통한 **실시간 고충 상담 및 토론**

- 익명으로 타 기관 전출입과 같은 개인 고충 상담을 비롯하여 제도개선 건의 등 인사 관련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담 및 토론 가능

※ '20. 11월 기준 접수 68건 중 처리 64건(4건은 '21년도 정기인사 시 반영 등 지속 검토 필요)

○ 인사 고충 상담실 운영으로 상시 대면상담 가능

- 고충 및 건의 사항 접수(유선 또는 대면) → 피드백(1개월 이내)

※ '20. 11월 기준 접수 171건 중 처리 132건(39건은 '21년도 정기인사 시 반영 등 지속 검토 필요)

< 인사 고충 처리 사례 >

▸ 사례 1 : 자녀 양육을 위한 수도권 내 전보 희망 → 수도권 내 소속기관 전보
▸ 사례 2 : 노모 봉양을 위한 수도권 내 전보 희망 → 수도권 내 파견
▸ 사례 3 : 배우자 질병 치료를 위한 인사교류 희망 → ○○도 파견

○ 직무의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주요직위를 총 정원의 10% 내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 후 중요직무급 지급('20년 하반기 359명, 270백만원)

○ 고충·기피·격무부서에서 성과를 창출한 직원(5명)에 대해 가점(0.5~1점) 부여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 (즉시 소통) 익명게시판(소곤소곤)을 통한 실시간 의견수렴 및 피드백

- 직원복지, 복무, 차량, 별관청사 시설 등 관련 민원사항 신속 답변 12건

○ (체계적 소통) 직원 관심 및 현안 사항 온라인 설문조사·간담회 등

- 2020년 업무용 수첩 만족도 조사(9.29.~.10.8.), 2021년 업무용수첩 디자인 선호도 조사(10.26.~10.30.), 제2별관 당직근무 시행관련 간담회(9.22.) 제2별관 당직근무 시행 관련 설명회(10.27.) 등

○ (배려와 협력) 코로나19 부내 대응, 임신·출산 공무원 지원 등

- (코로나19) 부내 비상 대응체계 수립 및 전파, 사무실 소독, 손소독제·비접촉 체온계 지원, 현장 대응 직원 마스크 지원, 상황 발생 시 신속 보고 등(수시)

- (임신·출산 직원 지원) 마스크 지원, 모성 보호 물품 및 출산선물 지급 42명

□ 수요자 중심의 성과창출로 정책만족도 극대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관리·평가》

○ **2020년 특정평가**(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대응**

- 2020년도 부내 특정평가 설명회 개최(7.20.)
- 특정평가 부문별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9.2., 정책기획관 주재)

○ **우리부 소관 국정·일자리과제 이행현황** 주기적 점검 추진

- '20년 상반기 국정·일자리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7.30., 정책기획관 주재)
- '20년 국정·일자리과제 대면심사 대비 점검회의 개최(10.28., 차관 주재)

  * 과제별(10개) 추진실적 발표, 질의응답을 통한 보완필요사항 점검

- '20년 2·3분기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보완사항 점검(7·10월)

《정부청사 시설관리 및 입주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 **(코로나19 관련)** 정부청사 코로나19 대응 방역 소독 실시(8.1.~), 정부청사 생활방역 3행(行) 3금(禁) 캠페인 실시(9.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입주부처 관계관 영상회의 개최(11.26.), 정부청사 단계별 대응기준 공유·시행(11.27~), 코로나19 정부청사 협업 방역 캠페인 실시(12.1.~4.), 청사별 방역협의회 운영(매월 셋째주 수요일) 정부청사관리본부 코로나19 백서 유관기관 배포(12.8~) 등

○ **(소통강화)** 세종청사 옥상정원 단계적 개방 실시(11.2), 청사본부, 찾아가는 청사 운영 혁신 서비스(10.22./11.6.), 국유재산 무단경작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10.20.), 정부청사 12월 서비스 캘린더 게시(11.30.) 등

《정부청사 보안 관리 개선》

<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시스템 개선 및 실태점검 >

○「청사별 출입보안매뉴얼」 개정(11.11.)

- 각 청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입보안매뉴얼이 관계법령이나 상위 훈령인 청사보안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향후 제개정시 협의 후 개정 추진

○「지방합동청사 일반경비원 근무복 기준」 확정(12.2.)

- 기관별 상이한 일반경비원의 근무복재질, 색, 군장 등 악세서리 등 기준 통일

○ 정부청사 청원경찰 분사기 사용기준 및 관리지침」제정(8.16.) 「정부청사관리본부 현업공무원 지정기준 및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시행(9.24.)

- 현업공무원과 비현업 공무원의 지정이 위원회가 없이 인사이동에 따라 지정되어 복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를 개설하여 운영

○ 청사별 출입보안매뉴얼」개정(11.11.)
- 각 청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입보안매뉴얼이 관계법령이나 상위 훈령인 청사보안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향후 제개정시 협의 후 개정 추진

○ 지방합동청사 일반경비원 근무복 기준」확정(12.2.)
- 기관별 상이한 일반경비원의 근무복재질, 색, 군장 등 악세서리 등 기준 통일

○ 정부청사 청원경찰 분사기 사용기준 및 관리지침」제정(8.16.)

□ 대내·외 협력을 통한 외연확대로 기관 신뢰도 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체계적 정책홍보 추진》

○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전략적 홍보 실시

○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한 여론동향·홍보성과 분석하여 효과적인 기획홍보 추진 환경 조성 및 내년도 주요 과제에 대한 홍보 전략 수립
- 주요 과제에 대한 여론분석을 통해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메시지(슬로건 등) 개발을 통해 효과적 기획 홍보 추진

○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트렌디한 안전콘텐츠 보급 확대
- 유튜브, 카카오TV 등 영향력 있는 민간채널과 연계하여 채널 접근성 강화

※ **유튜브 구독자 수 5만 명 돌파('19.10월 3만명 → '20.9월 5만명)**, 다음 포털 메인화면 노출 등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콘텐츠**로 **안전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

○ 주요정책, 정책배너, 카드뉴스 등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책 홍보 추진

※ 주요정책 홍보(총 557건) : 정책홍보 배너(116건), 사진·동영상(339건), 카드뉴스·웹툰 등 홍보자료(102건)

○ 대내·외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접근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공공행정의 전 세계적 확산 및 범정부 행정한류 확산 지원》

○ 우리나라 주요 정책 및 사례에 대한 홍보 및 국내·외 공공행정 협력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위해 주한 외교사절 대상, 공공행정 우수사례 현장설명회 개최(11.12.)

- 대사 3명 포함 9개국 9명 참석*, 코로나19 대응 관련 우수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을 방문하여 K-방역 소개

* 키르기스스탄·과테말라·오만 대사 참석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 최소화

○ 우리나라 공공행정 발전경험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대응하여 한국의 행정경험을 종합적으로 소개·홍보하기 위한 '범부처 행정한류 우수 콘텐츠 소개집(영문책자) 및 e-book(국·영문본)' 제작

- 외국정부의 관심도 및 활용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새롭게 홍보가 필요한 우수 신규 콘텐츠 등 4개 분야 18개* 선정, 제작

* 온나라 및 문서24시스템, 안전신문고, 관세통관시스템, 특허행정정보시스템 등

○ 코로나19 대응사례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국제사회에 홍보

-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중단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부·지자체에서 대응한 방역 경험 및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약4분 내외 3개 언어(국영스페인어) 제작

* 긴급사용승인제도,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선별진료소(드라이브스루 등), 생활치료센터 등

《우리부 국제협력 활성화 및 재난관리분야 국제적 위상 강화》

○ (사업관리 강화) 계획수립 단계부터 평가까지 ODA 전 과정 분석 및 점검

- 계획수립 단계부터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해 **필수 고려요소*** **반영 여부 분석·보완**으로 **사업 타당성**을 **선제적 사전검토·조정**

* 기본요건(수원국 사업요청서·수요 입증자료 등), 중복·유사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ODA 정책부합성(신남방·신북방,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 사업 타당성 검증 통해 ODA 예산 반영 비율 상승 기대

- 주기적 평가보고회* 개최와 평가결과의 대외적 공개 강화 및 의견수렴 등

* 세미나·간담회·토론회 형식의 평가보고회의(ODA사업 성과·제도개선 등 포함)

○ (지자체 지원 확대) 지자체 ODA 역량강화 및 상시소통·협의 확대

- 지자체 시·도 국제협력담당관 협의회(영상회의) 개최(10.15.)

지자체 국제협력담당관 협의회 논의 의제

① '22년 무상협력 신규사업 발굴 가이드라인·행안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부평가지침 안내
②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관련 공동조사 적극 대응
③ ODA 사업 통계자료(DB) 및 국제협력 성과 정책홍보 자료 제출 협조 요청 등

- '20년 지자체 ODA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참석 및 발제(11.16.)

*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와 파트너십, KOICA를 통한 사업참여방안, 대구·경북 ODA 현황과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 주요 업무, 지자체 ODA 현황과 참고사항 등 토의

《주민불편·기업애로 해소 등 국민생활 중심 감사 구현》

○ 현장방문 사전컨설팅 실시

- 인·허가 및 법적기준이 모호한 민원을 현장에서 의견청취하여 처리

방문일	방문지	쟁점	컨설팅 의견
'20.08.04.	인천 강화군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거부 가능 여부	원상복구명령 철회시 신고 가능(인용)
'20.10.21.	충북 음성군	특교세 재원 공유재산 매각 가능 여부	용도폐지 필요성 검토후 매각 가능(인용)

○ 시·도별 사전컨설팅 실적 관리('20. 9월말 현재)

- 정기적으로 지자체 사전컨설팅 실적을 관리하여 정책효과 점검 실시

구 분	2019년 3분기 까지	2020년 3분기 까지	증 감	%
접수	814건	861건	증 47건	5.8
처리	763건	860건	증 97건	12.7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하는 공직감찰》

○ 공정사회 구현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채용비리, 특혜제공 등 생활속 불공정 행위,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민원방치 등 소극행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총 57건 적발

○ 하계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비위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시기 집중감찰로 금품향응수수, 복무위반 행위, 기타 업무처리 부적정 등 총 34건 적발, 9,476천원 환수조치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공정사회 구현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특혜제공 등 생활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통해 총 65여건 적발, 212백만원 환수·부과조치

《재난안전관리 책임성 제고》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실태) 청소년수련시설의 대형 인명피해 사고 이후, 법·제도는 개선 강화되었지만, 안전사고는 반복해서 발생*(취약계층보호)
→ 제도의 현장작동 실태 및 관리지침의 준수, 운영자 안전관리 부적정 등 점검

○ (도로·교통 안전시설 관리) 각종 사고유형 중 인명피해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교통사고* 및 겨울철 반복되는 도로 결빙사고의 예방 필요(국민제안)
→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 지방도로의 안전시설 관리실태 및 제설대책 점검

* 화재 · 추락 등 23개 유형 사고 사망자(5,727명)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66%(3,781명) ['18재난연감]

- 방호울타리 부실시공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미비 등 13개에서 70건을 적발하여, 11명 문책 및 8개 사업을 재시공 등 조치하고, 시행중인 제설대책의 실효성 제고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관계부서에 제시

2.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국민 중심의 열린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추진

□ 소통·참여·디지털 기반의 '정부혁신' 추진

<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한 정부혁신 추진 >

○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정부혁신어벤져스, 혁신현장이어달리기 등 공직사회 변화와 세대간 소통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 핵심 아젠다와 연계한 「도전.한국」 과제 발굴 및 지자체 확산

○ 정부혁신 이행력 확보 및 확산을 위한 평가·컨설팅 추진

○ 정부혁신박람회, OGP 글로벌서밋 등 선도형 정부혁신을 통한 국내·외 모범 사례화 추진

< 문제해결력 높은 유능한 정부 구현 >

○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촉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중심* 서비스 제공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

* 협업과제 발굴-숙성-추진-평가-확산 전(全) 과정에 국민참여 기제 마련

○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정보공개활성화 및 행정문서의 효율적 개선 >

○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개선, 시스템 정비를 통한 정보공개 강화

- 국민 중심 정보 공개 위한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교육 강화, 운영 매뉴얼 개정·배포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화 제고

-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공기관 종합평가를 통한 정보공개 수준 확대
-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국민 이용 편의 강화

* 총 3단계 사업 중 1, 2단계 완료('20년), 3단계 진행 예정('21년)

○ 「온나라 문서시스템」·「문서24」 활용 확대 및 기능 개선을 통한 행정 업무 혁신 및 효율성 제고

- 최신 정보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사업 추진
- 온라인문서시스템 기능 개선 및 확대 지원, 문서24편의성 강화

○ 편리성, 책임성, 활용성 강화를 위한 행정 업무 효율화 추진

- 행정효율협업규정 개정, 큰글자 서식 적용 확대,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편리성 및 책임성 강화
- 행정문서의 데이터로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 국민과 이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 >

○ 생애주기 통합제공 서비스 확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맞춤형으로 제공

* ('20년) 7종(맘편한 임신·온종일돌봄)→ ('21년) 14종(재기·어르신)→ ('22년) 16종

** 공유누리 고도화(위치기반·맞춤형서비스 등) 개편 오픈('21.2.), 공공자원 개방 공유서비스 지자체 평가 우수지자체 및 우수사례 발굴, 특교세(6억원) 지원 등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개선 및 확산

* 국민제안, 지자체 건의사항, 권익위 민원정보 분석 등으로 개선과제 발굴, 공공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활성화 >

○ 정책공론장 운영에 국민참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지자체와 포럼 공동개최 등 범정부 대표 공론장으로의 운영 내실화

○ 부처·지자체 참여플랫폼간의 연계, 참여플랫폼의 국민제안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국민참여플랫폼의 활용성 제고

< 국민편의 중심의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

○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민원 제도 불편사항을 발굴 ·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개선 추진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민원 서류의 신청·발급·제출까지 가능한 전자증명서 발급·이용 확대로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구현

* 주민등록등·초본 등 100종('20.12월) →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21.12월)

□ 국정성과 창출 및 공공서비스 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조직 관리

<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장공무원 충원 및 인력 재배치 >

○ 국민 접접분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 일자리로드맵 달성을 위해 분야별 진단을 거쳐 '22년 충원규모 책정

○ 현장인력 충원에 따른 서비스 개선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충원인력 성과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인력 효율화·재배치 추진

<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정부조직진단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조직진단 및 컨설팅으로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 신설기구·신규인력 등 조직운영의 성과관리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 및 효과성 제고

○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해 기관역량을 강화하고 성과향상 지원

< 국가 주요현안 대응을 위한 수행체계 지원 >

○ 국가 주요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 기능 수행체계 개편 지원

○ 코로나19 등과 같은 범국가적 재난대응 강화 및 경제회복 등 현안대응 강화를 위해 긴급대응반 운영 확대 지원

○ 새로운 기술·지식·방식을 활용해 기존 정책·서비스 혁신하는 창의·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벤처형조직 설치·운영 지원

○ 국가 균형발전과 정책결정과정에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지역 의견수렴 체계 강화

○ 민간위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법」 제정* 및 「행정권한 위임·위탁규정」 정비** 추진

* 법률안 제정을 위한 법안 취지·내용, 행안부 입장 등에 대해 국회 설명

** 부처별 요구사항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위임·위탁 규정 개정 추진

□ 기록관리 혁신으로 국가기록물 체계적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촉진

< 미래지향적 국가기록관리 체계 구축 >

○「공공기록물법」개정 및 신규 수요조사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법률 개정에 따른 입법공백이 없도록 신속하게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법률개정 연계과제 3개, 입법미비사항 과제 9개 등 총 12개 과제 개정 추진

- 기록관리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표준 개발 및 정비

※ 비밀기록물 관리, 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등 5건(제정 1건, 개정 4건)

○ 기록관리 연구개발 추진 및 주요성과 대내외 공유·확산

- ’21년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 연구개발(R&D) 사업 9개 연구과제(9.1억)* 추진

  * 전자기록분야 5.68억, 비전자기록분야 1.12억, 기록활용분야 2.3억 연구 수행

- 기록관리 정책방향 및 연구개발 설계를 위한 포럼·연구세미나 개최(총 4회*)

  * 주제: (포럼) 국가기록원 중장기 전시 전략 개발(상반기), 디지털화 사본의 원본 인정에 대한 제도·기술(하반기) / (세미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기록관리시스템 개발·보급 전략(상반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경과와 향후 정책방향(하반기)

- 대국민 기록관리 저변 확대를 위한 전략적* 기획·홍보 추진

  * 최신 연구 성과 및 기록관리 분야 정보 등 온·오프라인 병행 홍보

○ ICT 신기술 등 기록관리 환경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기록관리 혁신

-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한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 온나라-eRMS 통합 확산(5개 기관), 표준AMS 기능개발, 국가기록원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1.6만종)의 기록관리 절차·방법·도구 개발 및 적용

  ※ 시범구축·표준모델 마련(～’21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표준모델 확대(’22～’23년)

- 문서·장기보존포맷 변환체계 개선,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 실행전략 마련

- 지능화 기술 적용 전자기록관리체계 개선

<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 >

○ 각급기관에 체계적인 기록관리 지원 및 현장과의 협업체계 구축

○ 가치평가를 통한 주요기록물의 선별·수집으로 기록정보 자원 축적

○ 국가 중요기록물의 매체수록 및 보존복원 처리로 안정적 보존성 확보

< 국민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 >

○ 기록물 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절차 개선 및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운영 내실화로 알권리 강화

○ 사료적·증빙적 가치가 높은 소장기록물의 관리정보 입력을 통한 검색·열람 강화

○ 소장기록물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대국민 서비스 확대

○ 원문의 전문(full text) 및 웹페이지 검색 색인을 통해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온텍트 시대를 반영한 기록관리 교육으로 기록인의 체계적인 양성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실행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핵심분야에 중점을 둔 전략적 교육 운영

2 세계를 선도하는 개방과 소통의 디지털정부 구현

□ 언제 어디서나 공유·협업하는 업무환경 구현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

○ 스마트 통합 행정업무환경 구축 및 컴퓨터 이용환경 개선
- 공통업무시스템 통합 및 공무원 컴퓨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결과에 따라 본격 추진

○ 현장 완결형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고도화 추진
- 모바일 행정 서비스 전면개편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추진하여 모바일 소통 플랫폼 구축 추진

○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업무환경 지원시스템 강화
- 사용자 급증에 대비하여 메일, PC영상회의, G드라이브 등 공통업무시스템 성능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한 디지털정부 핵심과제 추진》

○ 성과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성과 환류 체계 적용
- 매년 다수의 사업이 이월되면서 성과점검 시기도 하반기로 순연되어 성과점검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곤란함
- 사업계획 조기 검토, 과업 조정 등을 통한 '20년 사업 이월 최소화 및 종료 시기 단축으로 '21년부터 상반기에 조기 성과점검 추진

○ 지원대상의 정체성 약화 등에 따른 추진체계 재정립 필요
- 개별부처 수요중심의 사업 발굴·추진에 따라 지원사업의 정체성 모호
- 디지털 전환, 정부혁신 등 전자정부 환경변화와 범정부 정책·계획을 반영한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등 추진체계 재정립

○ 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을 통한 만족도 향상 추진

- 사업선정, 예산확보, 사업관리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관기관의 불편 및 번거로움 해소
- 지원사업에 참여한 주관기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점 보완
- 행안부에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주관기관의 불편사항 접수 및 해소

□ 안정적 · 효율적 디지털정부 인프라 강화

《디지털 정부혁신 성과 창출》

○ 범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체계 내실화
- 워킹그룹 및 범정부 TF 운영 개선을 통해 부처 간 협업 강화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기술 동향 분석 등 부처 정책결정 지원

○ 디지털 정부혁신 신규과제 발굴 및 대국민 홍보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신규과제 발굴
- 전자정부의 날을 계기로 디지털정부의 미래 비전 공유

○ 디지털 정부혁신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추진
- 법제도TF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법적 쟁점 발굴·개선

《디지털정부 정보자원관리 혁신 및 성과관리 체계 확립》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내용연수, 클라우드 전환 난이도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전환·통합

○ 특정 기업·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소스 기반의 차세대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확산

○ 디지털정부 서비스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웹사이트 수준 점검 등을 통한 웹사이트 품질 강화 추진

○ 차년도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예비검토 및 사전협의 이행실태 점검 강화를 통한 사전협의 실효성 확보

○ 활용이 미흡한 기능에 대한 운영·유지보수 비용 정비를 통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효율화

○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개발·제공·운영하는 현행 공공정보화 방식에서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웹 등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추진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운영기반 강화》

○ 4차 산업혁명 기반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 대응, 유관기관 협업, 지원체계 강화

○ 지속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사회적 비용 감축 및 지방행정 만족도 제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데이터 발굴·공유로 민간 활용 확대

○ 현장 행정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경청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도출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통계관리 등을 통한 사용자 지원체계 강화

○ 자치분권 강화, 최신 ICT 기술도입 등에 대응한 지능정보기술기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 임산부 수혜 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출산자 혜택 제공 등 지속적인 대국민 서비스 개선·확대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

○ 알권리 증진·활용 편의 향상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정비 추진

○ 시스템 접근, 권한관리 체계 및 개인정보 오남용 사전탐지 강화 등을 통한 선제적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체계 강화

□ 국민 중심의 안전한 디지털정부 구현 및 국제적 확산 도모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

○ 공공분야 첨단 정보통신 기술 선도 도입으로 대민서비스 개선
- 인공지능, 객체인식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공공분야에 선제적 도입
- 시범사업 추진으로 첨단기술 도입 효과성, 확산 가능성 검증
- 공공기관의 첨단기술 도입 촉진으로 '디지털 정부' 확산 견인

○ 행정 효율화 등 공공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새로 서비스 모델 발굴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및 사회 안전이 강화되는 사업 집중 발굴
- 민·관협력 기반의 창의적 문제해결 방식 마련 및 첨단기술 도입
- 전문기관 및 기술자문을 통한 첨단기술 적용의 적정성 철저하게 검증
- 첨단기술 도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지원

○ 성과가 검증된 공공서비스의 타 기관·지역 확산으로 지역정보화 견인
-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검증된 첨단 공공서비스를 타 기관·지역 확산
- 우수 공공서비스 표준화·경량화로 범부처·지자체 확산 기반 마련
- 첨단기술 전문인력이 없는 자치단체 등에 불필요한 투자 예방

《디지털정부 사이버보안 및 인증체계 강화》

○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체계 강화,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 시스템 확대 등으로 지자체 사이버위협 대응력 제고 추진
- 신속한 보안대응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위협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광역시도에 적용된 인공지능 보안시스템을 기초지자체로 지속확대

○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관리 효율성 개선 및 보안인프라 지원을 통해 보안수준 제고

○ 국민 본인이 원하는 인증서로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지속적인 민간인증서 적용 확대 추진

○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신원확인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확산 추진

《국제사회 디지털정부 선도국가 위상강화》

○ 협력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체계화, 선제적·종합적 사업 제안을 통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중심 전략적 개도국 지원

○ Digital Nations 의장국 지명을 계기로 선도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다국적 선진 정책 개발 및 디지털정부 국제경쟁력 제고 기반 조성

※ 디지털정부 선도국 협의체인 Digital Nations는 '22년도 의장국으로 한국 지명('20.11월)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사회 대상 비대면 홍보·소통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행정·공공기관의 디지털정부 분야 해외진출 지원 및 산·학·연 등 민간분야와의 정보 공유·협업 확대

□ **공공부문 데이터 개방·활용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 강화》

○ 공급자(정부)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수요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국민의 서류제출 불편 해소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행정·공공기관 등 기관 간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추진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정보주체(국민)의 정보주권을 강화하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만 제공하여 국민편의 제고 및 업무처리 담당자의 일하는 방식 개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반 구축》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0.12.)에 따른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립

○ 정부 내 방대한 데이터를 행정·공공기관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데이터 지정·등록 등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 다부처 및 정책 현안 과제 분석, 기관 수요제출 과제 분석 등으로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체계 강화

○ 빅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청년 인턴십 지원, 데이터분석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행정 정착 추진

3 지방분권 · 균형발전 촉진 및 시민사회 성장 지원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정책 수준을 한 단계 도약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한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의 제도적 기반 공고화
-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된 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 추진을 통한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행정수요 대응력 제고
-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작은 단위에서의 주민참여 확대

□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추진

○ 기존 단위사무 중심에서 기능 중심의 포괄 이양 및 지역 맞춤형 이양 방식으로 실질적 자치권한 확대 추진

- 기관위임사무,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중심의 이양사무 신규발굴 및 제1차 미반영 이양사무* 등 대상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 지속 및 내실화를 통한 지방자치권 보장 강화

□ 지방공무원 인사 자율성 확대·전문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

○ 지방공무원 인사 자율성 확대를 통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인사구현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지방공무원법」및 하위 인사관계 법령 개정, 적극행정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지방공무원법」개정

○ 지방인사 책임성 강화를 통한 공직사회 신뢰 제고

- 중대비위(성비위·갑질 등) 징계기준 신설 및 강화, 수당·여비 부당수령 제재 강화(가산징수 금액 2배→5배 이내) 등 공직내 잘못된 행태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공직사회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 공직선거 관리 및 주민참여·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원

○ 4·7 재·보궐선거('21년) 및 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지방선거('22년) 지원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공직선거 추진

○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투표 확정 요건 완화 등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으로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신규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및 지방의회 운영 지원

□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및 지자체의 종합적인 자치법규 지원체계 구축

○ 주민조례 발안제 활성화 및 자치법규 지원체계 강화

-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지속 추진, 법률안 통과시 하위법령 정비, 참고 조례안 마련·배부
- 법령불일치 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 발굴, 정비대상 여부 심사 지원 및 기획정비 과제 발굴 확산

□ 혁신과 분권을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 양성교육 운영

○ 포스트코로나시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포스트코로나 리더스 아카데미」 및 MZ세대와의 리더십 함양 과정 신설·운영

○ 회복·포용·도약 등 '21년 국정과제 중심 교육운영 및 5대 핵심 국정목표 지원을 위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위한 교육 운영

○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강화, 현장 중심 교육 확대 등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지자체 HRD 콘테스트, 역량교육 관련 모형 개발 등 중앙·지방 교육기관 간 협력·연계 및 교육운영 담당 역량 강화

□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및 국내·외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 지원

○ 교육생 등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국내·외 교육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HRD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긴밀 구축

○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국정가치 중심의 시책교육 및 수요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운영

□ 중앙-지방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및 시민사회 성장 지원

○ 중앙-지방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으로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여 지자체와 국정운영의 동반자 관계 구축
-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운영, 장(차)관 민생현장 방문, 국가·지역 정책e음 운영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중앙·지방 간 협력 활성화

○ 주민등록제도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제고

- 제3자인 '채권·채무 관계인'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기준(채무금액) 강화 및 재혼가정임을 유추할 수 있는 '세대주와 관계 표시'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우편·온라인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 등 주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강화

- 국민 누구나 쉽게 공감·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추진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비 및 교육·컨설팅 지원으로 사회적 자본 구축에 기여
- 기부금의 모집·사용 투명성 제고 및 기부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사회통합 지원으로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

○ 과거사정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진실규명 조사활동 개시(진화위), 배·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검토 등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재개

- 제주4·3사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신고자에 대한 명예회복 추진

  * 추가신고기간 재설정('21.1.~6.) 및 보증인 범위 확대 등

○ 과거사 관련 화해와 치유사업 지속 추진으로 사회통합 기여

-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활동 방문치유 등 사업확대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공원 및 건축 설계 추진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제70주년 희생자 합동위령제 등 추모식 개최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등 추진

  *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타라와 지역 등), 유족 유전자 검사 등

○ 외국인주민 등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통합지원 정책 추진

- 외국인주민 등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기초인프라 조성·확충
-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관련 지자체 시책 수립 지원(외국인주민 현황통계 등)

□ 공무원직협법 개정 및 직장협의회 활성화 추진

○ 공무원직장협의회법제도 개선을 통한 경찰 직장협의회 활성화 및 정책협의체 운영으로 공무원 노조와의 소통 강화

□ 주민 주도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 강화

- 주민의 일상 속 지역문제해결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 안정적인 지역사회 혁신공간 지원을 위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추진

- 우수한 지역혁신 사례의 발굴·확산 및 지역혁신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혁신역량을 점검·강화하는 주민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노력

○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업 시너지 효과 제고

- 지역과 연계한 청년들의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추진
-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계승을 통한 주민간 연대 강화

○ 정부·관 주도의 혁신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연계하여 공동으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책 공동생산자로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사례를 지역혁신의 모델로 정립

□ 국가 균형발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원

○ 접경·도서 등 저성장지역 개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 접경·도서지역에 대한 생활 및 생산·소득 기반의 정비·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 없는 균형발전 도모
-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이 주도하여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안보·지리·역사적 요인으로 개발되지 못한 주한미군 주변지역 등 특수지역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발전 기반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
-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여

○ 주민생활공간 개선 추진

- 자전거 관련 법·제도 정비, 안전점검계획 수립, 안전문화 확산,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등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 Tour de DMZ 국제자전거 대회, 자전거의 날, 사진·UCC 공모전,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등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교환대 설치규격(안) 마련,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추진, 불법촬영 근절 활동 및 이용문화 홍보
-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 안전·편의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 실증 규제특례를 통한 신기술·신매체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기준 개선

○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 및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

-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주소체계 구축

  ※ 고밀도 입체도시(스마트시티, 지하도시 등)의 등장에 따라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건물·사물·공간을 아우르는 주소개념으로 확대

-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주소정보 융합을 통한 주소기반 新 산업 창출 지원
- 주소정보산업 산·학·연·정 협업을 통한 산업창출 방안 마련

4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2단계 재정분권 추진>

○ **재정분권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책임성 제고 및 균형발전 기반 마련**

-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국가-지방 간 합리적 기능 재조정
- 1단계 재정분권 추진결과 분석을 통한 제도적 보완 병행* 추진

  *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보완 등으로 기초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광역 간 형평성 제고

- 지방교부세율 인상, 복지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방안 복합 검토

< 2단계 재정분권 추진현황 및 계획 >

- 자치분권위 주관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 구성·운영('19.9월~)
- 총 19회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 관계부처 최종 조율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21년 방안마련, '22년 시행**

<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

○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 마련**

- 자치단체 대상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제도개선 방안 의견수렴 추진
-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실시

- 현장 의견수렴, 연구용역 추진, 관계부서 검토 등을 통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 마련

○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자치단체 예산관계자 토론회 등을 거쳐 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사항 발굴, '20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 **'코로나19' 적극적 대응을 위한 지방채 활용 자율성 확대**

- 상환이 도래한 지방채에 대해 차환채를 발행하여 상환할 경우 별도한도를 한시적(~'21년) 확대(25%→100%) 인정

< 지방재정 투자심사 법령 정비>

○ **투자심사 면제 및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규정 법에 근거 마련**

- 투자심사 면제는 중요 사항임에도 지방재정법이 아닌 시행령, 부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으로 상향
- 자치단체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한 중앙투자 심사도 시행령·부령에 규정 되어 있어 법에 근거를 마련

○ **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확대하여 중복조사 불합리 해소**

- 현행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이외에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하고 추가 대상은 시행령에 규정 위임

< 하위법령 마련 등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 및 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실적보고서 제출·검증,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등 관리방안 구체화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집행·정산·반환 등 운영과정 전반 정비·강화, 부정수급 예방 및 사후제재 수단 신설 등(제정 '21.1.12., 시행 '21.7.13.)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 지자체의 자율적 결정이 효과적인 사항 규정을 위한 표준 조례안 모델 제시

○ **찾아가는 지방보조금 현장 컨설팅 추진**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현안 인식 공유 등 공동 문제 해결 및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컨설팅 추진

※ (컨설팅단) 행안부, 민간전문가, 광역시·도 실무전문가

< 광역-기초 간 합리적 경비부담 기준 개선 >

○ 「보조금법」상 기준보조율 규정대상을 중심으로 기존사업 현행화* 및 신규사업** 추가를 통해**「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추진**

* 사업명칭 변경, 근거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보조율 조정

** 보조금법에는 있으나 지방재정법에는 없는 사업의 기준부담률 신설

- ①사업의 성격, ②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③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 마련
-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치단체·4대협의체 의견수렴 실시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심의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지방보조사업의 광역-기초 간 **재정부담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를 위한**「지방보조금법」개정 추진**

- 지방4대협의체 의견수렴, 한국법제연구원 자문 후,「지방보조금법」 개정안 마련 및「지방보조금법 개정」정부안 제출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 >

○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 개발·운영 및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

- 주민참여예산 기구 구성 및 주민참여예산 확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운영 모델 개발·발굴 등을 통한 주민참여 범위 확대

*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온라인 플랫폼 구성·설계('21년), 구축('22년)

- 지역 맞춤형 컨설팅 추진,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평가 실시,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 추진 등을 통한 소통·협업 강화

* 우수사례집, 리플릿, 동영상,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

○ 노후화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고도화를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분석) 사업 추진(~'21.5.)

· 지방재정, 지방보조금, 의사결정시스템, 대민서비스 업무 분석

· 인프라 구성 및 규모 산정 등 클라우드 인프라 분석· 설계

· 지방재정 프레임워크, 개발가이드 마련 등 개발환경 구축

· 차세대 구축 1단계 사업 완료보고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설계) 사업 착수('21.6.~'22.5.)

· 지방재정, 지방보조금, 의사결정시스템, 대민서비스 업무 설계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및 클라우드 운영관리체계 수립

· 차세대 구축 2단계 사업 중간보고

< 구축 단계별 추진계획 >

- 1단계('20.12.～'21. 5., 업무분석) : 지방재정, 보조금 및 의사결정 업무 분석
- 2단계('21. 6.～'22. 5., 상세설계·구현) : 분야별 상세설계·구현, 인프라 구축(1차)
- 3단계('22. 6.～'23.12., 분야별 구현·시범 오픈) 의사결정·대민 구현, 인프라 구축(2차)

○ **현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

-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 등 계약업무 투명성 강화

· 부정당업자 연계 및 수의계약 결격업체 관리기능 구현

- 전자결재 업무 확대 적용 및 편의성 개선

·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분야 전자결재 적용

5 국민과 함께 안전사고 사전예방

□ 안전제도 및 긴급신고전화 관리체계 강화

① 불합리한 안전기준·제도 개선대책 마련

○ **(유형별 개선)**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유형별 미비·미흡한 규정 분석 및 규정 신설·보완 등 개선 추진

○ **(현장중심 개선)** 지자체·공공기관 제안 등 다양한 경로로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 추진

○ **(안전기준 관리)** 안전기준등록관리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안전기준 데이터 정비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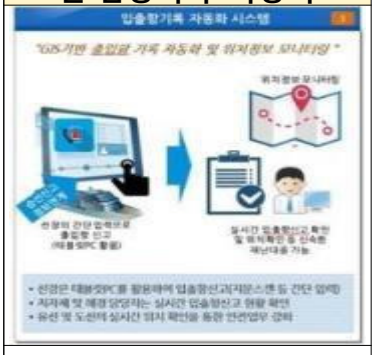
② 안전기준·제도 개선 이행관리

○ **(추진방향)**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개선대책 마련 후 과제 이행상황 부처합동 정기점검 추진

③ 유·도선 안전관리체계 강화

○ 유·도선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시범운영

출·입항기록 자동화



■ 선장이 **태블릿PC로 출·입항 신고**(출입항시간, 승선인원 등)

■ 관할관청에서 **실시간 출·입항 사항 확인 및 선박 위치정보 모니터링**(승선인원, 운항로 이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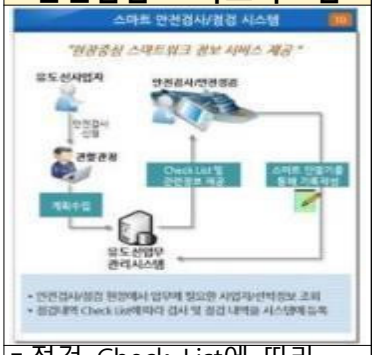
승선신고·신분확인 자동화



■ ICT기반 **신분확인 및 승선신고서 자동화**(전용 앱 ⇒ QR코드 생성⇒스캔)

■ 승선신고서 별도 작성 및 종이서류 보관 불필요, **현장 발권 신속·혼란요소 해소**

안전점검 스마트시스템



■ 점검 Check List에 따라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 점검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

■ 관할관청에서 **실시간 점검 이행 여부 및 결과를 확인** ⇒필요사항 개선 지시

○ 유·도선 이차보전사업 추진

- 선령기준 제도 도입(2016. 2. 4. 시행)으로 다량의 폐선 예상

- 선박 대체 건조시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소대책 추진

사업계획 수립 사업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평가 및 선정	대출상담 및 승인(대출시행)	이차보전금 신청, 결과보고	이차보전사업비 지급
행안부/협회	행안부/협회	협약은행	은행⇒행안부	행안부⇒은행

○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

- **(추진배경)** 국민관점 생활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공유, 의견 제시 등 민간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운영

현장관찰단 구성	활동지원	활동결과 제출	정책반영
◈행안부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등 공모 ◈위촉장 수여	◈활동계획 신청 -관할관청 연계 ◈활동자 출장조치	◈활동결과 제출 -수당·승선료 지급 ◈결과 사전검토	◈T/F회의 안건반영 ◈개선과제 선정 ◈제도개선 추진

④ 긴급신고전화 통합 운영

○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긴급기관 간 신고접수시스템*을 연계하여 공동운영 협업 체계 구축·운영으로 재난·안전사고시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 확보

* (경찰) 112신고접수시스템, (소방) 긴급구조표준시스템, (해경) 통합신고처리시스템

- **(신고이관)** 기관 간 연계시스템으로 신고이관시 사고정보 등을 원클릭으로 처리, 신속한 대응과 신고자에 대한 편의성 향상

- **(공동대응)** 신고접수 초기에 긴급기관간 공동대응 여부를 판단하여 공동대응 필요시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고대응 조치

○ **(긴급신고 통합 앱(APP) 구축)** 112·119 긴급신고 앱을 통합하여 편리한 모바일 신고체계 구축 및 안전취약계층(장애인, 외국인 등)의 신고지원 강화

○ **(긴급기관 간 GIS 데이터 공유 구축)** GIS 데이터 최신화로 정확한 지도정보(지도, 상호, 건물명 등) 제공 등 정보공유·연계 체계 구축

○ **(대국민 홍보)** 긴급기관(경찰·소방·해경·권익위) 간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T/F 구성 및 협업을 통한 통합적인 홍보 방안 마련·추진

⑤ 긴급기관(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역량 강화 추진

○ **(숙달훈련)** 가상의 긴급상황 시나리오를 통해 신고이관·공동대응 숙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 점검

○ **(교육과정)** 센터내 모의훈련시스템 활용하여 신고접수자의 전문성 강화 및 긴급기관 간 효율적인 공동대응 능력 향상

○ **(공동운영 가이드)** 공동운영 필요성 판단(단독.공동운영 처리, 비긴급(110) 이관 등), 요청/접수/처리확인 등 단계별 업무에 참고하도록 가이드 마련

□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

○ 민·관 합동으로 안전의식 개선운동 중점 전개

-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포럼 등을 통해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운동 협력방안 등 논의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선진화 등을 위해 부처·공공기관·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 공공기관, 기업 등의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과의 협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민·관 연계사업 기획·추진

  * 영상물 수어·화면해설(롯데시네마), 교통약자 대상 안내지도 배포(KEB하나은행) 등

- 안전문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유도

○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안전실천운동 전개**

- 일상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을 스스로 찾아서 정하고 실천하는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추진

- 금년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을 주제로 지자체, 안문협, 민간기업 등과 연계하여 캠페인 진행

  *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 화재 등 특정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시행

- 전 국민들의 안전수칙 참여 유도를 위한 SNS 해시태그 인증 이벤트, 안전일기 쓰기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추진

○ **몸으로 기억하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강화**

- 전국의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 안전사고에 취약한 '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

- 코로나19 일상화에 대비하여 교육영상, 체험교구 등의 교육자료 지원 및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안전교육 체계 구축

- 국민들의 안전체험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6대 안전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교육제공을 위해 국민안전체험관* 확충

  * 1차사업('17~21년, 8개소) : 완공 2(울산·제주) / 추진중(서울·인천·광주·경기·충북·경남)

6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피해 최소화

< 재난관리평가체계 제도 보완 >

○ 기존의 재난관리평가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재난유형별 역량평가 기법을 마련

- 재난유형 2개(지진, 화학사고)를 선정하여, 사고 유형별 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지표 발굴
- 사고 유형별 2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발굴된 지표를 적용·시범평가 추진, 평가결과를 통해 역량지표 보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관리>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관리

- 재난안전 분야와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하여 정책적 효과가 크고 창의적인 사업을 정책·선도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지원
-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자체 재난대응·복구를 위한 특교세 즉시 지원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 교부사업에 대해 추진상황 및 집행률을 정기적으로 관리
-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시 현장점검을 병행 시행하여 교부사업에 대한 집행률,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 건의사항 청취

< 지자체 재난관리 재정 기반 강화 >

○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난관리기금 집행규모 급증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코로나19 재난관리 등 사용용도를 반영한 운용지침 개정
-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예산 · 집행잔액 모니터링을 통해 연중 잔액이 '법정적립액'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 국가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 지원 >

○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체계 개선

- 전문인력 지원대학 선정·운영체계 등 종합 발전방안 마련

< 재난관리 국제협력 주도적 추진 >

○ 세계재난경감이행 전략인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및 재난관리분야 국제 교류 강화

- 아태지역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해 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 및 중국 일대일로 재난관리 장관 포럼 등 참석

<지진방재 종합계획>

○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9~2023)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 수립(4월), 관계부처·지자체 추진상황 점검(연2회)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 '21~'22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대학 공모·선정(5개, 8월)

※ 10개 대학(내진 6개, 지질 4개), 연간 20억원(대학당 2억×10개)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 '21년('20년도 실적)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4월)
- 「3단계('21~'25)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수립('20.12월)에 따른 중앙부처·시도별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적극 홍보 및 인증지원 사업 정기적 점검 추진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제도 인지도 향상 및 실수요자 및 업무 연관자를 타겟팅한 맞춤형 홍보 진행

* 인터넷, 유관기관 간행물, 옥외·역사 전광판, 편의점 계산대 등

<내진보강사업 적정성 검토>

○ 내진보강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선정 및 검증

- 지역, 중요도, 준공연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를 위한 대상을 선정하고 내진보강사업 관련 자료의 확보 및 검증
- 국내 시설물별 설계기준, 성능평가 요령 등에 따른 내진보강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미흡·수범사례를 담은 사례집 마련

○ 중앙·지자체 및 공공기관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추진

- 내진 담당자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직무 교육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강화>

○ **'재난대응 책임성 및 현장 작동성 강화방안' 마련**

- 재난의 대형화·다양화 추세를 감안, 재난사태 선포제도의 실효성 확보안 마련 등 현장의 재난대응 실행력 확보

○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민관협력 재난대응체계 강화**

- 민간 자율방재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확대(시군구 단위 구성 → 읍면동 단위 구성)
- 민간의 재난관리 사명감 고취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유공자 표창 추진

○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제도 운영 기반 마련**

- '재난상황 및 우려시 개인·위치정보 조회·이용 및 제공' 지침 고시 및 지대본 참고조례(안) 마련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2, 시행규칙 제19조의10 관련

○ **위기관리 매뉴얼 전주기 개선계획 추진**

- 매뉴얼 작성* 및 운영기준 보완, 재난관리주관기관 매뉴얼협의회 구성·운영, 재난대응 사례 및 훈련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 반영 등

* 기관의 특성, 재난유형의 피해양상, 대응체계 등을 고려한 매뉴얼 작성기준 마련

○ **위기관리 매뉴얼 효율적 관리 및 현장 활용성 강화**

- 위기관리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재설계 및 BPR/ISP 수립

※ 재난 상황에서 현장 활용이 쉽도록 다양한 채널(모바일, 웹)을 통해 사용자 역할에 따른 현장 매뉴얼 제공 추진 등

○ **현장중심의 재난 대응·수습체계 강화**

- 대피명령 단계 세분화 등 대피명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대피명령 단계 세분화(권고·명령·해제), 발령권자 확대(자치단체장·긴급통제단장→경찰서장 추가) 등

- 지역특성 반영, 안전취약계층 보호방안, 재난관리자원 보유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반영을 통해 행동매뉴얼의 내실화 지속 추진

○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민관협력 재난대응체계 강화**

-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능력강화·전문 교육 시행
- 민간의 재난관리 사명감 고취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유공자 표창 추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체계 개선>

○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혁신 추진**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기반마련을 위한 법률 등 제·개정

* (제정)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 /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최신 유통·물류 ICT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및 7개 시·도별*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남, 제주

-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 ①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②재난관리자원 비축 및 통합관리기준

○ **재난관리자원 관리역량 강화**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통보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추진

7 사회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안전수준 향상

□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 재난원인조사 절차 **체계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

-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및 업무편람 개선 보완**

  *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35호)

- 재난원인조사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원인조사 표준교재**」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직무과정 개설 추진

○ **관계부처 및 민간**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재난원인조사** 추진

- **기획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예방적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 기획조사대상 선정 : ①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 시스템 분석, ②일일상황보고 실적 분석, ③언론 보도 및 SNS 동향 분석, ④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조회 등

- **사전 실태조사 연구용역**(기획조사)을 통해 과거 재난사례 및 통계분석, 법제도 분석, 전문가 의견, 관계기관 개선대책 등 파악

- **수시조사**를 통해 **사회적 파장이 큰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심층조사** 실시

  * 다양한 전문가 풀을 활용한 현장조사반 구성 및 조사기관 협업체계 유지

- 재난원인조사 완료 시 조사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 보도자료, 브리핑, 카드뉴스 제작, 트위터·블로그 등 SNS 홍보

-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를 통한 조사 정책환류

○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 강화

-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 강화**를 통해 인력·기술·장비의 상호지원 및 협력 활성화

* 14개 부처 소속·산하기관 등 23개 기관 참여 협의회 구성, 위원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위원장 재난협력실장, 위원 국장급(부처) 및 본부장급(산하기관)

- 최신 동향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10월)
-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협의회 기관간 원인조사 보고서 및 전문가 DB를 공유 활용

* 기관별 중대사고 보고서 1,392건, 전문가 인력 풀 1,071건 수집 및 활용('20.12.기준)

○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권고 과제 이행점검**을 통한 원인조사 결과의 **실행력 확보**

- 국가재난조사 정보시스템(이행관리카드)을 활용한 **과제별 이행일정 관리 및 분기별 이행여부 확인·점검** 추진

* 장기(1년이상) 미완료 개선·권고 과제 이행 집중점검(3월, 9월)

- 미흡한 개선과제에 대해 안전정책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 상정을 통한 이행력 확보

□ 재난안전 R&D 확대

○ 재난안전 R&D 투자 효율화 및 중앙·지자체 등 협업체계 강화

- 재난안전 R&D의 효율적인 연구관리, 현장문제 해결 및 국민체감 제고를 위한 투자 시스템 혁신방안 이행
-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부처별 이행력 강화 및 추진전략별 성과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 재난안전 R&D 현장활용과 관계부처 협력강화를 위해 지자체 참여의 범부처 협의체 확대·개편 및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국민 체감 및 재난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R&D사업 확대 발굴

- 일상생활 속 재난위험요인 감지, 재난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지자체 참여의 재난안전기술 수요조사 및 사업 발굴

- 기후변화, 신종·복합재난 등 사회적 이슈 해결 및 지역별 안전이슈 분석을 통한 중앙·지자체 협력의 공동사업 발굴
- 재난안전 R&D 성과관리를 위한 민간 전문가 컨설팅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국민참여의 포럼, 토론회, 보고회 등 개최

□ 사회재난 사전 대비 강화

○ 사회재난 대비·대응체계 확립 및 상황관리 총괄

- 사회재난 발생 시 대책지원본부 가동으로 주관부처 지원, 대규모 재난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범정부 대응 총괄·지원
-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자치단체별 전담조직 구성 지원 및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운영, (지자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

- 재난 발생시 재난소관 부서와 공동으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대책지원본부 구성·파견, 중대본 가동 등 대응 강화로 조기 수습
- 사회재난 사전대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점검, 정책협의체 운영 등 지원·관리

○ 다중이용시설 위기 대응능력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

- 재난 취약시설 대상 위기상황 매뉴얼 정비, 위기대응 훈련 강화 등 민간전문가 현장 컨설팅 확대 운영
- 안전체험관 등 현장 체험형 시도 순회교육 도입을 통한 현장 중심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
- 시설별 매뉴얼 개선, 위기대응 훈련 등 민간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강화, 미흡사항 개선 및 모범사례 공유

8 국민보호를 위한 비상대비 · 민방위태세 확립

□ 충무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총괄·조정

○ 국가 비상사태 시 민·관·군 협력을 통한 **국가 총력전 수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 수립

○ 최근 안보정세 변화* 등을 반영한 중앙부처(28개) **전시 임무수행 계획**(기본계획, 4월) 및 **세부 실행계획**(집행계획, 7월) 수립·보고

* 감염병 등 신종위협, 미사일·방사포 등 북한의 군사력 증강

○ 충무사태 단계별 **각 기관의 주요 조치계획(160건)**에 대한 이행절차 등을 **표준화**하고 **예규화** 신규 추진(~11월)

○ 기관별 충무계획 간 **유기적 연계성 검증**과 **실효성 미흡 분야 개선**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단** 운영(~11월)

□ 국가 총력전 수행에 대비한 동원자원 관리 역량 강화

○ **현장 중심의 동원자원 관리체계 확립**

- 비상시 인력, 물자 등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동원자원 전수조사 및 평시 관리체계 확립

○ **평시 비축물자 활용범위 확대** 추진

- 비상사태 또는 재난사태 등으로 제한된 비축물자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대규모 재난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의3(비축물자 사용) 개정

○ **비상대비자원(동원자원·비축물자) 통합DB 구축**

- 비상대비 자원 보유현황 및 사용기관의 소요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 마련

※ (1단계) 전략계획 수립 → (2단계) DB구축·시범적용 → (3단계) 통합DB 운용

□ 국가 비상대비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연습·훈련 추진

○ **코로나19 상황** 및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연습·훈련 **일정** 및 **방법 조정**

- 코로나19 치료 및 백신접종 전념을 위해 범정부 역량 집중 필요

○ **을지태극연습**은 **하반기로 시기 조정** 後, 6월경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방안 최종 결정**

- 하반기 실시 및 시행방안 관련 **NSC 상정** : 3월 (1차), 6월 (2차)

○ **충무훈련**은 시·도별 동원훈련 등을 **비대면 방식**(Drive-Thru 응소, '자동차 극장식 교육' 등)**으로 실시**

□ 민방위 제도 개선 및 교육·훈련 추진

○ 민방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10차 민방위기본계획**('22~'26)**'** 수립으로 **국가 민방위 운영의 중점 추진 방향*** 설정

* 민방위대원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생활민방위** 운영 및 유사시 즉각 운용 가능한 **실질적 민방위태세 확립** 등

○ 현행 '통·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민방위대 편성 개편 추진**

- **민방위대장**(통·리장)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휘·통솔능력 저하** 및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라 **통·리 단위 편성의 실효성** 문제 제기

○ 기존 집합교육을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고, 사이버교육 시 **코로나19 백신 정보** 및 **지원활동*** 안내

* 지원민방위대를 활용한 **백신접종 접수** 및 **안내지원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 (2월)

○ **상반기**에 계획(3월 : 화재, 5월 : 민방공)된 **민방위훈련**을 **취소**하고, **민방위 태세 점검***으로 대체 및 **훈련 영상자료** 제작·배포**

* 민방위대 편성, 비상연락망, 민방위시설 등 점검 ** 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에 배포

○ **각각 다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던 민원 접수(정부24), 사이버교육(업체사이트) 등을 '**민방위종합포털**'을 구축하여 **통합 제공**

□ 국지도발 대비 위기대응 기반마련 및 제도 개선

○ **북한군 국지도발 대비 주민보호를 위한 시설 확충**

- **접경지역**에 편의시설을 갖춘 **주민시설 확충**(5개소, 32억원)

* 연평도 포격 이후('10.11월) 이후, 접경지역에 233개소('11년~'20년, 1,475억원) 확충

- **후방지역** 중요시설 인근 **다목적 주민대피시설 확충**(1개소, 192억)

* '21년~24년 전북 순창군 다목적 대피시설(국비 58억 / 지방비 134억) 구축 추진

○ **위기상황별 주민보호 훈련**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초기대응, 주민대피 및 수용사항** 등을 **중점**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훈련**

* 토의형 2회(중주본·지주본), 도상 6회(자체, 비상국, 접경지역), 현장 2회(17개 시도)

○ **전·후방 지역**의 군사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근**에 **주민대피시설 확충** 방안 강구 및 **사업계획 개선**

* 주민대피시설 확충실태분석 및 기준개선 연구('21. 5~10월)

○ 국지도발로 인한 **주민의 신체·재산피해 보상** 및 **수습·복구 자원**(인력, 장비 등)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 제정 추진**

□ 민방위사태별 위기대응 능력 제고

○ **적의 공습 대비 주민대피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 적 탄도탄 공격 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軍 탄도탄관측시스템**과 **제2경보통제시스템**(대구) 간 **자동연계 경보발령** 추진(~~수동3분~~→자동10초)

* 軍과 제1경보통제소(평택) 간 시스템을 자동연계(1차사업, '20.12월)하여 정상 운영 중

- **전·후방 지역**의 군사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근**에 **주민대피시설 확충** 방안 강구

※ '21년 전북 순창군 민방위시설 겸 다목적 생활안전시설(국비 12억 / 지방비 28억) 구축 예정

○ **재난 발생 시 민방위경보 활용 확대**

-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재난경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경보 정보**(위치, 가청범위 등)를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에 **표출**하여 **공유**
- **재난상황실**의 경보요청 절차 숙달을 위해 운영 **매뉴얼**에 **경보요청 방법을 반영**하고, **재난상황실과 연계**한 **경보발령 훈련** 추진

* 재난경보 발령 실적 : ('18년) 7회 → ('19년) 24회 → ('20년) 41회

9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정책성과 극대화

□ 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총괄·지원기능 강화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및 예산의 적정 편성·집행》

- ㅇ 국정철학 구현 및 국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주기적 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
- ㅇ '21~'25년 예산 조기집행 관리 및 예산의 적정 편성

《효율적 조직운영 및 체계적 산하기관 지원》

- ㅇ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정부 혁신의 선제적 지원을 위한 체계적·효율적 조직 및 정원 관리
- ㅇ 행정안전부 부내 정부혁신 역점과제 발굴 및 집중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
- ㅇ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결과 환류를 통한 공공부문 경영 혁신 선도 및 정부정책 전파

《부내 체계적인 입법 추진》

- ㅇ 주요 정책과제, 국정과제 등을 반영한 '21~'25년 정부입법계획 수립으로 정부입법의 계획적·효율적 추진
- ㅇ 원활한 입법추진을 통한 정책추진의 적시성·효과성 제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 환경 제공》

- ㅇ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을 위하여 부내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 ㅇ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 ㅇ 부내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부내 통계를 생산·제공하여 통계 기반 합리적 정책입안·평가 지원

《적재적소 인사운영과 인적역량 강화》

○ 인사 고충 처리결과 및 각종 건의사항을 선별하여 정책 반영
- 대면 등으로 인사 고충 상담, 제도개선 사항 발생 시 현실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

○ 차별 없는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노력
-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저소득층 공직 임용 지원을 통한 따뜻하고 균형 있는 인사 추진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 소통과 배려의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봉사로 따뜻한 공동체 조성 기여
○ 스마트한 근무혁신으로 일과 생활 균형 실현 및 사고유연성 제고
○ 서울 잔류부서 세종시 이전으로 행정비효율 제거

□ 수요자 중심의 성과창출을 통해 정책만족도 극대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관리·평가》

○ 국정과제 등 주요 대외평가의 주기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성과창출과 소통·홍보 강화

○ 효율적·체계적인 평가기반 마련 및 주요정책에 대한 환류 활성화를 통한 정책개선에 기여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행사》

○ 각종 정부행사·의전을 해당 국경일 등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개최

○ 행사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면서 참석자와 국민들이 박수치고 환호할 수 있는 감동적인 행사로 운영

《국민추천포상 활성화》

○ 공적심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국민참여위원 위촉시 역대 수상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위촉
- 행안부 직원과 심사위원이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현지조사 실시

○ 국민추천포상 제도 대국민 홍보
- 중·장년층 중심에서 젊은층까지 참여 연령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온라인 홍보 확대
- 홍보대사 박수홍·현숙을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행안부 SNS 등에 게시
-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 영상에 사전 또는 중간광고

《정부청사 시설관리 및 입주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 수요자 중심의 고객지향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후생·편의시설 개선 및 운영으로 입주공무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만족도 향상 추진

○ 정부청사 에너지효율화 기반 확충 및 에너지절약 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공공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선도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추진》

○ 신청사를 세종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함으로써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

○ 철저한 공정·안전·품질관리를 통해 적기 공사 완료 추진('22.8월)

《정부청사 보안 관리 개선》

○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시스템 개선 및 실태점검
- 청사 방호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 신기술 도입 검토
  * 드론을 활용한 청사 방호를 위하여 인력 확보 신기술 도입 검토 등
- 방호진단 및 근무·교육훈련 실태점검을 통한 방호태세 확립(연중)

○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확대

□ 대내·외 협력을 통한 외연확대로 기관 신뢰도 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체계적 정책홍보 추진》

○ 중점 홍보과제에 대한 연중 체계적·전략적 정책홍보 추진으로 국민체감도 및 공감대 확산

○ 타겟별 콘텐츠 제작 및 확산전략 수립과 함께 안전 지식튜브, 라이브 프로그램 등 온라인 특성을 활용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가능한 콘텐츠 제공

○ 온·오프라인 정책이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홍보 환류 강화

《공공행정의 전 세계적 확산 및 범정부 행정한류 확산 지원》

○ ① 신남방정책 대상이며 미개척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 ② 우리와 공공행정 협력을 지속 희망해온 바레인, 이집트, 튀니지 대상 '공공행정협력단' 파견

○ UN 등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행정한류 확산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공행정 우수사례 홍보로 행정한류의 확산과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

《우리부 국제협력 활성화 및 재난관리분야 국제적 위상 강화》

○ 외빈방문 대응, 우리부 및 지자체 ODA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공무국외출장 운영 등 부내 국제협력 강화

○ 국제사회에서의 재난협력에 적극 참여 및 재난안전 정책 홍보 등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재난관리분야 국제적 위상 강화

《주민불편·기업애로 해소 등 국민생활 중심 감사 구현》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하는 공직감찰》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감찰 강화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정책현안에 대해 선제적·예방적 점검을 강화하여 비위 사전예방

○ 공직자 비위 취약분야 중점 점검 등 상시 현장감찰체계 확립

○ 생활밀접 분야 등 적시성 있는 감찰이슈 발굴 및 감찰대상 선정을 통해 감찰자원의 효율성 제고

《재난안전관리 책임성 제고》

○ 국민안전과 밀접한 주요 분야 중 최근 발생사례, 발생빈도,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한 위험분석으로 주요 안전감찰 대상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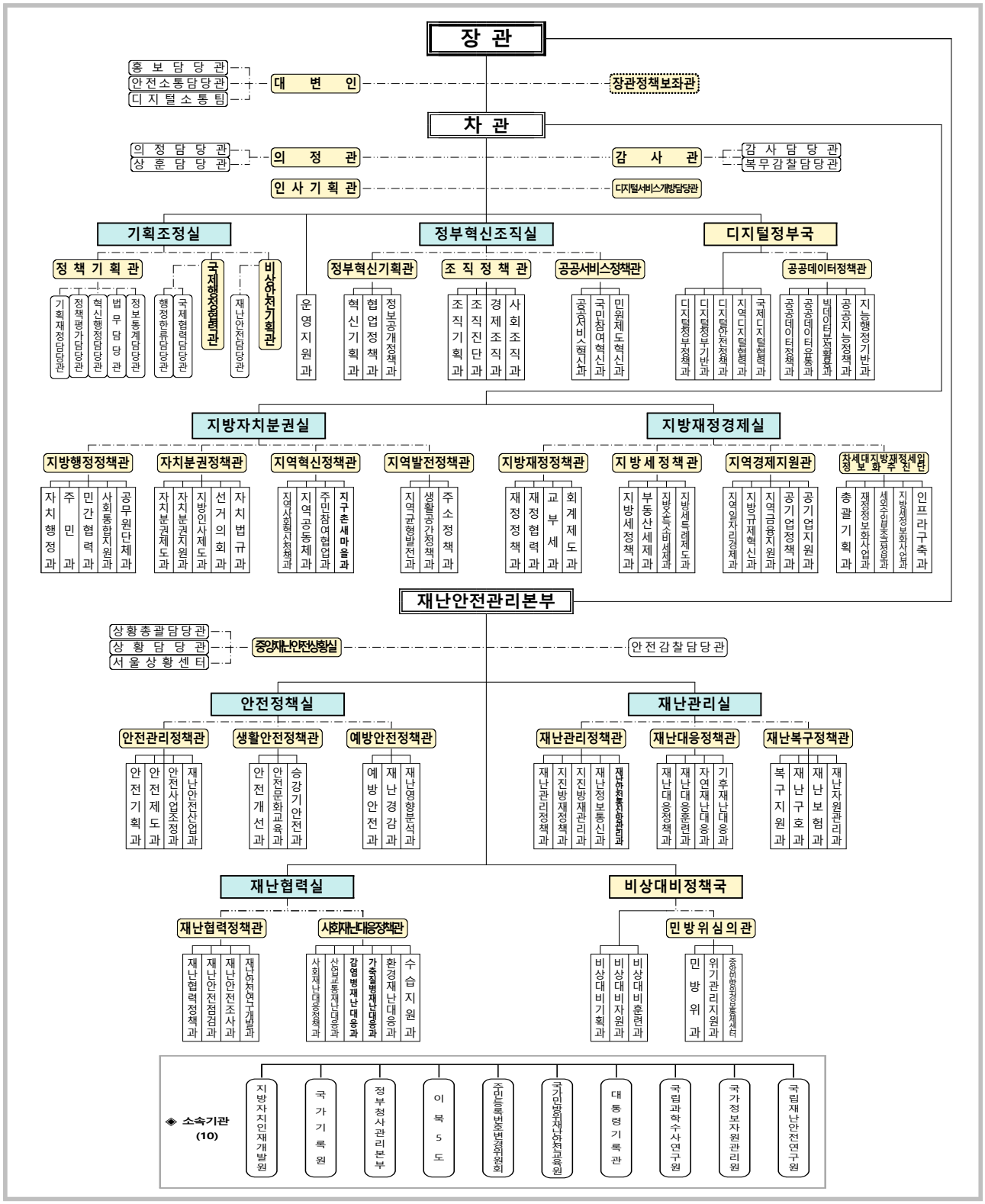
- 선택과 집중에 의해, 소수 핵심과제에 감찰역량을 집중

○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 및 공공기관 분과 신설 등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활성화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행정안전부 일반 현황

○ 1차관 1본부 7실 29국·관 1상황실 1단 117과 1팀, 10소속기관



(2) 인원

< 본 부 >

○ 현원(정원) : 1,589명(1,629명)

- 정무직(3명), 별정직(5명), 특정직(19명), 전문경력관(19명)
- 일반직(1,519명)
  . 고위공무원(41명), 3급(38명), 4급(193명), 5급(527명), 6급(441명), 7급(196명), 8급(57명), 9급(3명), 방호·관리운영(23명)
- 연구직(13명), 전문직(11명)

< 소속기관 >

○ 현원(정원) : 1,949.5명(2,132명)

- 정무직(6명), 별정직(10명), 특정직(9명), 전문경력관(21명), 전문임기제(4명)
- 일반직(1,385명)
  . 고위공무원(19명), 3급(3명), 4급(94명), 5급(158명), 6급(295명), 7급(209명), 8급(138.5명), 9급(66.5명), 방호·관리운영(402명)
- 연구직(487.5명), 전문직(27명)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	'21	'22	'23	'24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552,544	574,451	610,827	632,998	658,346
(전년대비증가율, %)		4.0	6.3	3.6	4.0
ㅇ 총계	552,544	574,451	610,827	632,998	658,346
(전년대비증가율, %)		4.0	6.3	3.6	4.0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3,089	3,445	3,635	3,890	4,162
(전년대비증가율, %)		11.5	5.5	7.0	7.0
ㅇ 기본경비	349	386	398	410	422
(전년대비증가율, %)		10.6	3.1	3.0	2.9
ㅇ 지방교부세	502,921	517,547	536,838	556,805	577,892
(전년대비증가율, %)		2.9	3.7	3.7	3.8
ㅇ 주요사업비	46,185	53,072	69,955	71,893	75,869
(전년대비증가율, %)		14.9	31.8	2.8	5.5
□ 예산					
ㅇ (총)지출	552,544	574,451	610,827	632,998	658,346
(전년대비증가율, %)		4.0	6.3	3.6	4.0
ㅇ 총계	552,544	574,451	610,827	632,998	658,346
(전년대비증가율, %)		4.0	6.3	3.6	4.0
【 일반회계】					
ㅇ (총)지출	547,384	567,462	603,121	627,190	652,607
(전년대비증가율, %)		3.7	6.3	4.0	4.1
ㅇ 총계	547,384	567,462	603,121	627,190	652,607
(전년대비증가율, %)		3.7	6.3	4.0	4.1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ㅇ (총)지출	5,160	6,989	7,706	5,808	5,739
(전년대비증가율, %)		35.4	10.3	△24.6	△1.2
ㅇ 총계	5,160	6,989	7,706	5,808	5,739
(전년대비증가율, %)		35.4	10.3	△24.6	△1.2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1) 전략계획의 주요 특성

□ 국정과제 및 법령상 기본계획 내용 등을 반영

○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기관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제시

○ 국정과제, 법령상 기본계획 및 부처 업무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연계·반영

□ 2021년 정책여건

<<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위기상황 발생>>

○ **(경제·과학기술) 경제성장 둔화, 신성장동력 발굴 필요**
- 경제활력 감소, 일자리 문제
- 데이터가 신산업 발전 원동력으로 부각

○ **(사회문화) 국민참여 확대 및 공공성 회복요구**
- 사회적 가치 중요성 공감대 확산
- 국민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방식 대두

○ **(지역여건)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요구**
- 인구·자본 등 수도권 집중, 군소지역 소멸위기
- 민선7기 출범, 중앙-지방 협업요구

○ **(재난안전) 대형재난 반복, 국민의 안전인식 변화**
- 지진, 대형화재 등 재난과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빈발
- 안전 중요성 국민의식 확대

□ 내·외부 기대 및 의견

○ **(일반국민)**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공무원의 자세 변화 및 역량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요구

○ **(전문가)** 기능적으로 전문화·강화될 수 있는 행안부 역할과 함께 정책분야별 발전방안 제시

○ **(지방자치단체)** 획기적인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주민 참여의 확대 필요

○ **(내부직원)** 부내 일하는 방식, 의사소통, 조직문화 등 전반에 있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변화 요구

□ 국정운영 기본방향과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강화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분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를 **조직의 임무**로 설정하고,
- "국민 모두가 주인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

<행정안전부 설치근거>

▪ **「정부조직법」 제34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이러한 **조직의 임무와 혁신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

○ 전략목표 Ⅰ : 국민 중심의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추진한다.

○ 전략목표 Ⅱ : 세계를 선도하는 개방과 소통의 디지털정부를 구현한다.

○ 전략목표 Ⅲ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한다.

○ 전략목표 Ⅳ :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추진한다.

○ 전략목표 Ⅴ : 국민과 함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 전략목표 Ⅵ :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

○ 전략목표 Ⅶ : 사회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안전수준을 향상시킨다.

○ 전략목표 Ⅷ : 국민보호를 위한 비상대비·민방위태세를 확립한다.

○ 전략목표 Ⅸ :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2) 전략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분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

비전 국민 모두가 주인인 대한민국

전략목표 I	전략목표 II	전략목표 III	전략목표 IV	전략목표 V	전략목표 VI	전략목표 VII	전략목표 VIII	전략목표 IX
국민 중심의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추진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개방과 소통의 디지털정부를 구현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한다.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추진한다.	국민과 함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	사회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안전 수준을 향상시킨다.	국민보호를 위한 비상대비·민방위태세를 확립한다.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성과목표 I-1	성과목표 II-1	성과목표 III-1	성과목표 IV-1	성과목표 V-1	성과목표 VI-1	성과목표 VII-1	성과목표 VIII-1	성과목표 IX-1
소통·참여·디지털 기반의 '정부혁신' 을 추진한다.	언제 어디서나 공유·협업하는 업무환경을 구현한다.	획기적인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촉진한다.	지방재정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한다.	안전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선제적 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정책을 구현한다.	체계적인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 비 군사분야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한다.	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총괄·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I-2	성과목표 II-2	성과목표 III-2	성과목표 IV-2	성과목표 V-2	성과목표 VI-2	성과목표 VII-2	성과목표 VIII-2	성과목표 IX-2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안정적·효율적 디지털정부 인프라를 강화한다.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강화 및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한다.	지방세 제도 및 세정운영 개선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현장중심의 재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사전 대비체계 구축으로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수요자 중심의 성과 창출을 통해 정책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성과목표 I-3	성과목표 II-3	성과목표 III-3	성과목표 IV-3	성과목표 V-3	성과목표 VI-3			성과목표 IX-3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국민 중심의 안전한 디지털정부를 구현하고 국제적 확산을 도모한다.	주민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의 기반을 구축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예방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복구·구호 체계를 확립한다.			대내·외 협업·소통 강화를 통한 기관 신뢰도를 향상한다.
성과목표 I-4	성과목표 II-4	성과목표 III-4	성과목표 IV-4					
기록관리 혁신으로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를 촉진한다.	공공부문 데이터 개발·활용을 강화한다.	국가균형발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지방재정세입 정보화로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대국민서비스를 혁신한다.					

(3) 전략·성과목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Ⅰ	1	4	4
Ⅱ	1	4	10
Ⅲ	1	4	4
Ⅳ	1	4	4
Ⅴ	1	3	5
Ⅵ	1	3	3
Ⅶ	1	2	2
Ⅷ	1	2	2
Ⅸ	-	3	5
계	8	29	39

성과목표	관리과제	비고
Ⅰ. 국민 중심의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추진한다.		
1. 소통·참여·디지털 기반의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2.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3.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4. 기록관리 혁신으로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를 촉진한다.		
Ⅱ. 세계를 선도하는 개방과 소통의 디지털정부를 구현한다.		
1. 언제 어디서나 공유·협업하는 업무환경을 구현한다.		
2. 안정적·효율적 디지털정부 인프라를 강화한다.		
3. 국민 중심의 안전한 디지털정부를 구현하고 국제적 확산을 도모한다.		
4. 공공부문 데이터 개방·활용을 강화한다.		
Ⅲ.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한다		
1. 획기적인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촉진한다		
2.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강화 및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한다		
3. 주민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의 기반을 구축한다		
4. 국가균형발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Ⅳ.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1. 지방재정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한다.		
2. 지방세 제도 및 세정운영 개선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3.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4. 지방재정세입정보화로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대국민서비스를 혁신한다.		

성과목표	관리과제	비고
Ⅴ. 국민과 함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1. 안전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한다.		
3. 지속가능한 예방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Ⅵ.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1. 선제적 대비 중심의 재난관리정책을 구현한다.		
2. 현장중심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한다		
3.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복구·구호체계를 확립한다.		
Ⅶ. 사회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안전수준을 향상시킨다.		
1. 체계적인 사회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사전 대비체계 구축으로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Ⅷ. 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대비·민방위태세 확립		
1. 정부 비 군사 분야 비상대비 역량 강화		
2.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보호 체계 강화		
Ⅸ. 기관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총괄·지원기능을 강화한다.		
2. 수요자 중심의 성과창출을 통해 정책만족도를 극대화 한다.		
3. 대내·외 협업·소통 강화를 통한 기관 신뢰도를 향상한다.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국민 중심의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추진한다.

기 본 방 향

◇ 주요 내용

- 성과목표 1 : 소통·참여·디지털 기반의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 성과목표 2 :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 성과목표 3 :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 성과목표 4 : 기록관리 혁신으로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를 촉진한다.

◇ 추진배경·필요성(중요성)

【성과목표 ① : 소통·참여·디지털 기반의 정부혁신】

○ 국민의 일상 회복과 경제적 도약을 뒷받침하고 국민체감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범정부적 정부혁신 추진

○ 복잡한 사회문제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협업을 통한 정부의 문제해결력 제고 및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일하는 방식을 통해 행정효율성 향상

○ 정보공개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 편리성, 책임성, 활용성 강화를 위한 행정 업무 효율화 추진

【성과목표 ② :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 국민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선제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공공서비스 개선 및 혁신 추진

○ 정책 전 과정에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무원과 국민이 양방향 소통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행정 혁신 확산

○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민원 제도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개선 추진

【성과목표 ③ : 국정성과를 뒷받침하는 정부조직 전략적 관리】

○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 지원 및 범정부 차원의 인력 효율화 필요성 증가 필요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제위기· 실업난이 가속되면서 큰정부 등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강조 추세

○ 정책환경 변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의 등장에 따른 정부기능 개편 필요

○ 정책환경의 복잡화·다양화에 대응하고, 국정 핵심과제 수행을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하는 등 전략적 조직관리 필요

【성과목표 ④ : 기록관리 혁신으로 국가기록물 체계적 관리】

○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기록관리 혁신 및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국가 주요 기록물 체계적 관리, 적극적 공개 활용 필요

○ 기록정보콘텐츠의 민관 협업 및 이용자 관점의 콘텐츠 관리 개발로 콘텐츠 품질 제고 및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 **그간 추진성과**

【성과목표 ① : 소통·참여·디지털 기반의 정부혁신】

○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20.2월)

*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40개 일반과제 선정 및 역점 추진

○ 공직 내 정부혁신 가치 공유·확산으로 확실한 혁신성과 창출

*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총 4회), 「정부혁신 어벤져스」 운영, 공직사회 소통 책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발간 등

○「제2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개최(11.24.~12.3., 온라인)

* 4개 주제관, 2개 특별관으로 구성, 10일간 총 168만여명 방문

○ 개방·신뢰 등 열린정부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

* 열린정부파트너십(OGP, 78개국) 의장국으로 선출(’20.10월 임기 개시)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순위 기록(’17년51위 → ’20년33위)
OECD 데이터 개방지수 평가 3회(’15·’17·’19년) 연속 1위

○ 범정부 협업과제 추진체계 확립 및 7대 중점 협업과제, 233개 기관 관리 협업과제 추진으로 협업성과 창출

○ 협업이음터·협업SOS 신설 등으로 협업활성화 추진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20.12.)

○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 실시('20.9~11.) 및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21.1.)

○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정보공개포털, 공무원창구, 모바일 시스템 등 전면 재구축, 빅데이터 기반의 지원서비스 제공)('19~'20년)

○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전자문서유통 통합포털 구축 및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시스템 강화 ('21년 사업예산 확보: 5,859백만원)

○ 295개 온-나라 문서 시스템 이용기관의 효율적·체계적 운영·관리

○ 「문서24」 내 웹서식(법정서식 27만 종) 제공으로 웹에서 바로 서식을 작성·제출 가능, 모바일 문서24 서비스 제공으로 문서 처리결과 확인 가능

* 이용건수: ('19년) 1,381,794건 → ('20년) 3,480,281(전년 대비 252% 증가)

○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큰글자 서식 도입 및 확산

○ 국민 공감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한 국민신청정책실명제 확대 운영

○ 쉽고 바른 공문서 작성 위한 행정명령문서 내 권위적 표현 개선

○ 기계판독 가능한 열린 공공서식 추진

* 「공공서식 재설계 방안」 정책연구용역(5~9월)

【성과목표 ② :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 국민수요가 높은 맞춤형서비스를 발굴하여 중앙 및 지자체 확산

* 생애주기 서비스 통합제공 1단계 확대(전입신고 플러스, 온종일 돌봄, 맘편한 임신, 나만의 예우) 및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 확대('19년 107개→'20년 166개)

* 공공자원 개방·공유 대국민 통합포털 공유누리 서비스 개시('20.3.)

○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온라인 위주(온라인 생중계, 채팅토론)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전환, 전년 대비 참여자 3배 이상 증가

※ '19년 총 11회 개최, 838명 참여 → '20년 총 13회 개최, 2,923명 참여

○ 온라인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광화문1번가 20만 회원 돌파('20.10.) 및 국민접근성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한 모바일 앱 출시('20.10월)

* ('20.12월) 회원수 263,532명, 일평균 방문자수 3,201명, 앱 다운로드 수: 7,952건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확대하여 국민 불편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100종 발급('20.12월)

【성과목표 ③ : 국정성과를 뒷받침하는 정부조직 전략적 관리】

○ 선진국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 로드맵('17.10.18.)에 따라 안전·복지 등 국민접접 분야의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 국가직공무원 '17년 0.7만, '18년 1.2만, '19년 1.9만명 충원, '20년 1.7만명

○ 대규모 충원 분야의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대국민서비스 품질 제고

* (경찰) 112 긴급신고 대응시간 '16년 6분51초 → '20년 5분56초(△55초)

** (소방) 구급차 3인 탑승률 '16년 31.7% → '20년 86.1%(△54.4%p)

*** (교원) 공립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 '16년 18.4명 → '20년 14.5명(△3.9명)

○ 위기극복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 지원 추진

*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본 등 전염병 대응인력 특별지원(220명)

* 코로나19 장기화 및 신종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질병관리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차관 신설('20.8월)

○ 정부조직의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관리 혁신방안 마련

* 실·국내 자체개편 자율시행, 총액인건비 활용범위 확대(5%→7%)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강화시켜 정부의 현안대처·조직운영 역량 강화

** 정원의 1%이상 재배치 상시화 등 정부조직 생산성 향상

○ 국민요구에 부합하는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참여조직진단 실시

* '20년 9개 부처 11개 분야, 국민제안사항 128건 도출

○ 효율적인 정부조직운영을 위해 기능·구조·인력을 중심으로 환경, 문화·행태, 성과 등을 분석하는 조직진단 수행

* 국정과제 추진의 장애요인을 조직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진단·발굴하여 컨설팅, 기구·인력 조정 및 지원 등 개선(연 15건)

** 업무 방식 재설계, 서비스 수행체계 개선, 부처간 협업 지원 등

○ 국가 주요현안에 대해 각 부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수행체계를 재점검하여 효과적인 기구 및 인력 재설계 지원

* ('18) 28건, ('19) 32건, ('20) 34건

○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국가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조직관리 운영의 경직성을 개선한 문제해결형 조직인 '긴급대응반', 벤처형조직' 도입('19) 및 확대 운영*

* ('19) 8개 部(부총리·복수차관) → ('20) 18개 部 전체 → ('21) 全 부처 확대

【성과목표 ④ : 기록관리 혁신으로 국가기록물 체계적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진('21.1.4., 행안부 회부)

○ 기록관리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주요성과 4건*)

* '20년 주요성과 : 기획홍보 4건(아동·여성 강제동원 기록 전시 기자단 설명회 1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경인선 완전개통 120주년 등 기념일 기념 2건,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등 업무성과 1건)

○ 기관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지원 및 중요 기록물 수집·정리*

* 전자 332만 건, 비전자 10.3만 권 수집/ 전자검수 394만 건, 비전자 정리·등록 36만 권

○ 시급성·시의성 있는 국가 기록물의 완성도 높은 보존·복원 처리

* (매체수록) 디지털화 14,931권, MF 4,830권
(복원) 6.25 기록물 원형복원, 재난기록물 응급복원, 휘발탈색 기록물 디지털 복원 8,553매

○ 기록정보 제공* 및 국가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편찬·기획전시** 추진

* 정보공개·기관협조 65만건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80~'90년대) / 국무회의록의 재발견(6~7차 개헌) / '기억해야 할 사람들 : 강제동원 김광렬 기록으로 말하다 사진집'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5.12.~12.31., 69,967명), 경인선 전 개통 120주년 기획전(11.9.~11.23., 24,198명)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	1	**4**	**4**	**12**	**3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 국민 중심의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추진한다.		① 정부 공공서비스 대국민 만족도(점)
1. 소통·참여·디지털 기반의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① 범정부 '정부혁신' 성과 확산 노력도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한 정부혁신 추진	① '정부혁신' 국민 체감도(%)(60%) ② 기관별 정부혁신 추진성과(%)(40%)
	② 문제해결력 높은 유능한 정부 구현	①「2021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과제 달성도(%) ②「2021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 과제 달성도(%)
	③ 정보공개활성화 및 효율적 문서서비스 개선	① 원문정보다운로드 건수(건) ② 행정문서혁신실적(건)
2.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①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기반 확대 노력도(%)
	① 국민과 이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	①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점) ②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품질 개선도(점)
	②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활성화	① 국민참여·소통을 위한 정책포럼 운영 실적(회) ②참여플랫폼 연계 기관수(%)
	③ 국민편의 중심의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① 국민생활 밀접 민원제도개선 건수(건) ②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점) ③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연계 종수 확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① 정부조직 분야별 기능진단
	①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및 인력 재배치	①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② 정부인력 재배치
	②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정부조직진단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① 국민참여진단 실시 및 결과활용 ②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 성과관리 노력도 ③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 성과
	③ 국가 주요현안 대응을 위한 수행체계 지원	① 부처 기능수행체계 개편 지원 ② 긴급대응반·벤처형 조직 운영 활성화 ③ 위원회 비수도권 민간위원 비율 확대 ④ 민간위탁 관리체계 구축
4. 기록관리 혁신으로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를 촉진한다.		① 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① 미래지향적 국가기록관리 체계 구축	① 기록관리 업무환경을 반영한 표준 개발·정비(%) ② 기록관리 연구·홍보 활성화(%) ③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구축 달성률 (%)
	②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	①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지원 및 협력 제공(%) ② 기록물 수집·정리량(건) ③ 국가중요기록물 보존·복원 처리건수(건)
	③ 국민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	①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 달성률(%) ② 현장 중심의 기록관리 교육 적용률(점)

전략목표1 국민 중심의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추진한다.

(1) 주요내용

□ **소통·참여·디지털 기반의 '정부혁신' 추진**

- ㅇ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고 정부혁신 성과를 본격 창출하는 '정부혁신' 추진
- ㅇ 기관 간·기관 내 협업 강화 및 일하는 방식 효율화를 통한 정책역량 제고
- ㅇ 공공기관 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 ㅇ 국민 중심의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및 행정제도 개선 등
- ㅇ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슈를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온·오프라인 국민정책 참여 활성화
- ㅇ 민원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민원제도 혁신 및 국민불편 민원제도 개선

□ **국정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인 정부조직 관리**

- ㅇ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인력 운영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조직관리
- ㅇ 정부조직관리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운영
- ㅇ 국정과제 추진과 현안 지원을 위한 정부조직·인력 적시 지원

□ **기록관리 혁신으로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촉진**

- ㅇ 지속적인 기록관리 혁신 및 기능의 분권화를 위한 법령·표준 등 제도 개선

○ ICT 신기술 등 급변하는 기록관리 환경에 대응한 연구 및 성과공유·홍보를 통한 대국민 기록관리 문화 저변 확대

○ 기록관리 현장성 강화를 위한 기록관 지원 전담체계 구축 및 현장 소통 강화와 협업 체계 확립

○ 축적된 보존·복원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 중요기록물 안정적·지속적 보존성 강화

○ 민관협업 등을 통한 콘텐츠 서비스 확대 및 국가기록포털 사용자 접근성·편의성 개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4			
정부 공공서비스 대국민 만족도(점)	신규	50	55	60	65	70	- '20년은 국민의 절반이 만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70점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목표 설정	국민 대상 외부 전문기관 조사 의뢰	조사 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정부신뢰도 및 투명성 관련 국제사회 평가 개선으로 정부혁신 추진동력 확보	• 빠른 사회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정부역량 필요
• IT 신기술 활용 및 보안을 강화한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추진	•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기피 현상
• 맞춤형서비스 및 제도개선 추진 등으로 공공서비스 혁신 경험 축적	• 문서의 형식을 중요시하는 등의 관행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흔글로 작성하는 공직사회의 문서 활용 습관
• 다수부처 공동조직관리, 재배치정원제 등 국정 우선순위에 기반한 정부조직 관리의 제도적 기반 조성	• 최신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격차 발생
• 「공공기록물법」 개정으로 국가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다수 부처·이해관계자 관련 과제는 합의 도출 어려움
	• 전자기록 전문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디지털 분야 인력·예산 등 부족
	• 기록관리 지원대상 기관의 참여·관심도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국민들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욕구 증대 •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전자문서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화) 시대적 요구 증가 • 공공서비스 혁신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 광화문1번가 등 국민참여·소통 창구에 대한 국민인지도 및 관심 증대 • 민간역량 활용 및 협업 기회 증가 • 긴축적 인력관리 기조에서 공공서비스 품질 중심의 적극적 인력관리 기조로 전환 • 지방기록원 설립,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기록관리에 대한 민·관·학 관심 및 인식 제고 • 기록물 온라인 서비스 및 기록정보 콘텐츠 (역사적 사건기록 등)에 대한 관심 증대	• 정부정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간 괴리 해소 • 기관별 업무 칸막이 등 협업 저해 문화 상존 • 정보공개 증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 대두 • 공공서비스 설계·집행 과정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 도출의 어려움 • 민간 부문 서비스 품질수준과 비교한 공공서비스 품질수준 향상 요구 • 공무원 충원 필요성에 대한 국회·언론 등의 부정적 시각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 대용량 영상 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 급증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방안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1. 국민 중심의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추진한다.		
1. 소통·참여·디지털 기반의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 정부혁신 과제의 성공적 추진 및 성과 창출을 위해 全 행정기관의 적극적 협조 필요 • 유용하고 질 높은 정보,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정보 등의 공개 요구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분과별 실적 점검 및 책임관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관리 필요 ▪ IT 신기술 기반의 정보공개포털 재구축 등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2.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 기관별·업무별 칸막이로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혼란 발생 • 국민의 관점이 아닌 정부조직과 기능에 따른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불편 야기 • 공공서비스 설계·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기관 간 갈등 발생 및 조정 필요	• 기관 간 협업으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 등 국민 특성·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서비스 설계단계부터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간 소통·정기적 협의 추진 •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소통을 위한 국민참여 제도 운영
3. 정부 조직·인력 선제적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 완수를 적극 뒷받침한다.	▪ 국회·언론 등에서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연금 등 재정부담 문제 지속 제기 ▪ 부처 간 인력·기능 조정을 수반하는 다수부처 관련 조직진단은 부처 간 이해관계로 실행이 어려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추진 시 관련 부처 반대 예상	▪ 국민·국회·언론 등 대상으로 현장 민생공무원 충원 필요성과 주요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설명 추진 • 국민참여진단, 외부전문가·부처 의견수렴 등 조직진단 투명성 확보 • 정비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 방지 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4. 기록관리 혁신으로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를 촉진한다.	• 국가기록관리 현안 등 정책추진 및 법령 개정 시, 기록관리 현장·학계 등과의 소통 강화 및 의견수렴 활성화 필요 • 기록관리 연구·기술 이슈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부족 • 기록관리 기관 간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필요성 대두	• 국가기록관리 혁신 추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이행과 법령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소통체계 구성·운영 • 연구개발 분야 국내외 학회 참여·발표, 연구단체 등과 교류협력 활성화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민·관·학 네트워크 허브 역할 수행

(4) 기타

○ 정부혁신1번가(http://www.innogov.go.kr)

○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http://www.open.go.kr)

○ 문서24 홈페이지(http://open.gdoc.go.kr)

○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http://gwanghwamoon1st.go.kr)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성과목표 Ⅰ-1 소통·참여·디지털 기반의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1) 주요 내용

□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한 정부혁신 추진

- ㅇ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계획 수립 및 추진
- ㅇ 국민참여형 사회문제해결 사업 '도전.한국' 확산 및 지원
- ㅇ 효율적 열린 혁신 추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평가 실시
- ㅇ 열린 혁신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민참여형 홍보 실시

□ 문제해결력 높은 유능한 정부 구현

- ㅇ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촉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중심 서비스 제공 및 문제해결능력 강화
- ㅇ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ㅇ 범정부 지식공유와 활용 확대를 통해 정부의 정책역량 강화

□ 정보공개 활성화 및 행정문서의 효율적 개선

- ㅇ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개선, 시스템 정비를 통한 정보공개 강화
  - 국민 중심 정보 공개 위한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교육 강화, 운영 매뉴얼 개정·배포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화 제고
  -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공기관 종합평가를 통한 정보공개 수준 확대
  -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국민 이용 편의 강화

* 총 3단계 사업 중 1, 2단계 완료('20년), 3단계 진행 예정('21년)

○ 「온나라 문서시스템」·「문서24」 활용 확대 및 기능 개선을 통한 행정 업무 혁신 및 효율성 제고

- 최신 정보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사업 추진
- 온라인문서시스템 기능 개선 및 확대 지원, 문서24편의성 강화

○ 편리성, 책임성, 활용성 강화를 위한 행정 업무 효율화 추진

- 행정효율협업규정 개정, 큰글자 서식 적용 확대,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편리성 및 책임성 강화
- 행정문서의 데이터로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범정부 '정부혁신' 성과 확산 노력도(%)	-	-	67.4	100	- '21년 '정부혁신' 성과 체감도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다 상향된 목표치 설정 ※ '20년 67.4점, '21년 70점	국민 대상 외부 전문기관 체감도 조사 의뢰(60%)	조사보고서
			신규		· 정부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혁신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고, 정부혁신평가(사회적가치 포함)의 기관별 평균점수가 73.5점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혁신성과 창출 촉진 ※ 정부혁신 평가 평균점수 - '19년 71.86, '20년 72.61	기관별 정부혁신평가 평균 점수 산출(40%)	2021 정부혁신평가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정부신뢰도 및 투명성 관련 국제사회 평가 개선으로 정부혁신 추진동력 확보 ◆ IT 신기술 활용 및 보안을 강화한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추진	◆ 빠른 사회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정부역량 필요 ◆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기피 현상 ◆ 문서의 형식을 중요시하는 등의 관행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흔글로 작성하는 공직사회의 문서 활용 습관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전자문서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화) 시대적 요구 증가	• 정보공개 증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 대두 • 정부정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간 괴리 해소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방안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1. 국민 중심의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추진한다.		
1. 소통·참여·디지털 기반의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 정부혁신 과제의 성공적 추진 및 성과 창출을 위해 全 행정기관의 적극적 협조 필요 • 유용하고 질 높은 정보,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정보 등의 공개 요구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분과별 실적 점검 및 책임관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관리 필요 ▪ IT 신기술 기반 및 보안을 강화한 정보공개포털 고도화 등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4) 기타

○ 정부혁신1번가(http://www.innogov.go.kr)

○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http://www.open.go.kr)

○ 문서24 홈페이지(http://open.gdoc.go.kr)

성과목표 Ⅰ-2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1) 주요 내용

□ 국민과 이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

○ 범정부 생애주기 통합제공 서비스 확산 기반 마련 및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확대('20년 7종(임신·돌봄 등) → '21년 13종(재기·어르신 등))

○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익 증진 및 공유경제 촉진

○ 행정절차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행정절차법」개정 추진

○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과 포용적인 도약을 위한 국민생활 밀접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개선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추진

□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활성화

○ 국민참여 대표 정책공론장인 '열린소통포럼'의 운영 내실화

○ 일상 속에서 온라인 참여플랫폼에 쉽게 접근·참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운영기반 조성

□ 국민편의 중심의 민원제도 혁신 및 서비스 개선

○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민원제도의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혁신

○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 및 디지털서비스 확산에 따라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확대

○ 디지털 민원환경에 적응력이 낮은 고령자·장애인 등 민원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 민원서비스 편의 제공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기반 확대 노력도(%)	신규	신규	100	100	온라인 완결 서비스 기반 확대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 공공자원 개방자원 정비율 95% 이상, 전자증명서 발급 종수 200종 확대 달성도를 목표치로 설정	공공자원 개방·공유자원 정비율(95%이상) (50%)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연계종수 확대 (200종이상) (50%)	공유누리포털 통계데이터 추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데이터 추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그간 맞춤형서비스 및 제도개선 추진 등으로 공공서비스 혁신 경험 축적	• 최신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보 격차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공공서비스 설계 과정에 국민의 참여 욕구 증대 • 열린소통포럼 등 국민참여·소통 창구에 대한 인지도 향상	• 공공서비스 설계·집행 과정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 도출의 어려움 • 민간 부문 서비스 품질수준과 비교한 공공서비스 품질수준 향상 요구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방안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Ⅰ. 국민 중심의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추진한다.		
1.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 공공서비스 설계·집행 과정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관계기관 간 갈등 발생 및 조정 필요 •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 참여가 활성화 될 경우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 • 국민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사항 발생	• 서비스 설계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간 정기적 협의 추진 •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소통을 위한 국민참여 제도 운영 • 민원처리과정 전반(안내→신청→처리→발급)에 대한 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Ⅰ-3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1) 주요 내용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장공무원 충원 및 인력 재배치**

○ 안전·교육·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강화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 현장민생 공무원 충원에 따른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충원성과 분석 및 홍보 강화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능 감소·쇠퇴 분야의 인력을 신규·현장 분야로 전환 활용하기 위한 정부인력 효율화·재배치 추진

□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정부조직진단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정책고객인 국민이 대민접점 서비스 현장의 조직·인력 진단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

○ 신설기구와 신규인력의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기구·인력 운영의 효과성·책임성 제고

○ 책임운영기관제도 개선을 통한 기관성과 향상 지원

□ **국가 주요현안 대응을 위한 수행체계 지원**

○ 부처가 새로운 행정수요와 긴급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기능수행체계 개편 및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지원

○ 공정한 정부조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 위촉비율 확대 및 민간위탁 제도개선 추진

※ **(전략목표와의 관계)** 현장공무원 충원 및 효율적·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정부조직 분야별 기능진단	신규	신규	4	4회	○ 분기별로 정부기능 분야별 진단 1회 실시(→ 총 4회) - 8개 분야(교육, 과학·기술, 복지, 산업·일자리, 자원·환경, 사회, 외교·안보, 경제)에 대해 2년간('20~'21년) 진단 후 향후 조직개편 등에 활용	정부기능 분야별 진단 건수	진단보고서 관련 내부문서(공문, 메모 보고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부조직 관리 역량 축적
- 다수부처 공동조직관리, 재배치정원제 등 국정 우선순위에 기반한 정부조직 관리의 제도적 기반 조성

약점(Weakness)
- 기구·인력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개선·강화 필요
- 다수 부처·이해관계자 관련 과제는 합의 도출 어려움

기회(Opportunity)
- 긴축적 인력관리 기조에서 공공서비스 품질 중심의 적극적 인력관리 기조로 전환
-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부처 간 기능 연계, 협력 등을 위한 수단 확보

위협(Threat)
- 공무원 충원 필요성에 대한 국회·언론 등의 부정적 시각
- 저성장 기조에 따른 재정여건 제약
- 행정환경 복잡성·불확실성 증가
- 거시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부기능 및 역할에 대한 변화요구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방안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1. 국민 중심의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추진한다.		
3.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 국회·언론 등에서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연금 등 재정부담 문제 지속 제기	▪ 국민체감도 중심으로 충원 성과 지표 보완 및 국민·국회·언론 등 대상으로 현장 민생공무원 충원 필요성과 주요 성과 등 적극적 홍보·설명 추진
	▪ 부처 간 인력·기능 조정을 수반하는 다수부처 관련 조직진단은 부처 간 이해관계로 실행이 어려움	• 국민참여진단, 외부전문가·부처 의견 수렴 등 조직진단 투명성 확보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추진 시 관련 부처 반대 예상	• 정비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 방지 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Ⅰ-4 기록관리 혁신으로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를 촉진한다.

(1) 주요 내용

□ 급변하는 기록관리 환경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국가기록관리 체계 구축

○ 지속적인 기록관리 혁신 및 기능의 분권화를 위한 법령·표준 등 제도 개선

○ 전자·비전자·활용 등 분야별 국가중요기록물의 관리 및 장기보존 기술 연구개발과 연구성과 및 이슈·정보 공유를 통한 기록관리 저변 확대

○ 클라우드 전환 등 정부 업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 온나라-RMS 저장소 통합 확산, 표준AMS 기능개발(2차), 클라우드 전환(CAMS 등 DB서버)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한 투명한 기록관리행정 기준 적용 및 데이터기록관리 도구,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개발·적용 확대를 통한 기록관리 역량 강화

□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

○ 기록관리 현장성 강화를 위한 기록관 지원 전담체계 구축 및 업무협의회·컨설팅 등 현장과의 소통 강화와 협업체계 확립
※ 업무지원(단위과제·보존기간 협의, 생산현황 취합·분석, 이관 협의·확정 등)/ 비밀기록 관리 개선/ 공공기관·대학 및 지자체·교육청 등 협업체계 구축

○ 가치 중심의 주요 기록물 선별·수집 및 정리·등록 추진
※ '10년도 생산 전자-비전자 기록 통합 이관·검수·등록 추진

○ 영구보존 기록물의 매체수록 및 훼손 심화 기록물 적기 복원 추진

□ 국민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다양한 기록정보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비공개 기록물 대상 공개재분류 실시

○ 행형기록*의 관리정보 입력을 통해 신속한 검색 및 독립유공자 발굴 기여

*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등 대장류 기록

○ 민관협업 등을 통한 기록정보 콘텐츠 신규·확대 구축 및 검색 조건 등의 재색인을 통해 국가기록포털 사용자 접근성·편의성 개선

○ 각급 기관 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의 기록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전문과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기록관리 교육과정 운영

※ '21년 : 26개 과정(기본 2개, 전문 9개, 특별 3개, 국제 2개, 사이버 10개) 약 184회 운영

(2) 성과지표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1년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th></tr>
<tr><th>'18</th><th>'19</th><th>'20</th><th>'21</th></tr>
<tr><td>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td><td>신규</td><td>신규</td><td>100%</td><td>100%</td><td>- ①클라우드 전환 등 정부 업무 환경 변화를 반영, 기록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온나라-RMS 저장소 통합(5개 기관 확산), 표준 AMS 기능 개발, 중앙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반 시스템 DB서버 등 클라우드 전환
- ②'21년 공공기록물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및 신규 수요 조사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과제 개선 실적
<table>
<tr><td>성과(건)</td><td>미흡(0~4)</td><td>보통(5~8)</td><td>우수(9~12)</td></tr>
<tr><td>점수</td><td>20</td><td>60</td><td>100</td></tr>
</table>
</td><td>①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3개) 완료(60%)
②제도 개선 달성도(40%)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td><td>①사업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관련 공문 및 메모보고
②추진계획서,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관련 공문 및 메모보고</td></tr>
</table>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 「공공기록물법」 개정으로 국가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행정업무관리시스템의 전자적 기록관리 및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자기록 관리 경험·노하우 축적
- 기록물 보존·복원 역량 우수 및 최신 기술 적용 연구 성과달성
- 부처전담과 창구 단일화로 전문성 강화
- 기록물 공개 및 이용 활성화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원문서비스, 공개재분류 등 추진)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유일의 교육훈련 기관으로서의 경험·인력

약점(Weakness)

- 혁신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강제권한 미비
- 전자기록 전문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디지털 분야 인력·예산 등 부족
-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생성·연계 관리 체계 미흡
- 기록관리 지원 대상기관의 참여·관심도 부족
- 기록물 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
- 교육수요 대비 교육인프라 미비(강사확보, 교육시설, 접근성 등)

기회(Opportunity)

- 지방기록원 설립,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기록관리에 대한 민·관·학 관심 및 인식 제고
- 디지털환경에서의 기존 기록관리 패러다임 변화필요 공감대 증가
- 기록관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기록관리 분야 전문 연구를 위한 R&D추진 및 정보공유 채널(웹, 세미나, 정보지 등) 다각화
- 기록물 온라인 서비스 및 기록정보 콘텐츠(역사적 사건기록 등)에 대한 관심 증대
- 기록관리 교육수요의 지속적 증가

위협(Threat)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 대용량 영상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 급증
-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전자기술환경의 급속한 발전
- 기록관리 기관 간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필요
- 중앙·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정책협의 부족, 기록관리 인프라 및 역량격차 심화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 장기화로 중요 지방기록물의 관리 위험 노출
- 공공기관, 사립대의 기록관리 인프라 취약
- 비교분야 교육훈련기관과의 경쟁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방안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4. 기록관리 혁신으로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를 촉진한다.	• 국가기록관리 현안 등 정책추진 및 법령 개정 시, 기록관리 현장·학계 등 과의 소통 강화 및 의견 수렴 활성화 필요 • 민·관 기록관리 전문 연구기관 부족으로 국가차원의 기록관리·보존·복원 기술 연구 활성화 및 연구성과·정보 공유 필요 • 디지털시대 기록관리 기관 간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필요성 증대	• 국가기록관리 혁신 추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이행과 법령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소통체계 구성・운영 •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R&D 추진 및 이슈·연구성과 등 정보 공유·활성화 • 국가차원의 민·관·학계 기록관리 거버넌스·협업체계 구축

(4) 기타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전략목표 II 세계를 선도하는 개방과 소통의 디지털정부를 구현한다.

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 성과목표 1 : 언제 어디서나 공유·협업하는 업무환경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2 : 안정적·효율적 디지털정부 인프라를 강화한다.
- 성과목표 3 : 국민 중심의 안전한 디지털정부를 구현하고 국제적 확산을 도모한다.
- 성과목표 4 : 공공부문 데이터 개방·활용을 강화한다.

◇ 추진배경·필요성(중요성)

○ 클라우드, 모바일 등 최신 ICT기술을 적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공유·협업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혁신

○ 정부·국민·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적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디지털정부 핵심 과제 추진 지원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정보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발굴·확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업무효율과 대민서비스 개선 도모

○ 디지털정부 정보자원의 활용 효율성 제고 및 공공 웹사이트 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성 도모

○ 자치분권 실현 및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디지털 지역혁신 서비스 구현 등 디지털 중심 전자지방정부 기반 마련

○ 지방행정체계를 혁신하고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최신기술을 활용, 효율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개편하여 법제도·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

○ 중앙·지자체 및 행안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정부 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선 추진

○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적극 개방 및 편리한 활용을 위한 표준화·품질 강화를 통한 혁신성장 도모

○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들과 공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그간 추진성과**

○ 스마트 통합업무환경 도입 ISP 및 공통행정시스템 운영·활성화 추진

※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가입자 253천명 돌파

※ 코로나19 이전 대비 영상회의 개설 횟수 4.6배 증가(업무망 3.6배, 인터넷망 10.6배)

○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주요 국정과제 및 핵심 디지털정부 과제 지원

※ ('04～'08)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등 130개, ('09～'12) 지식정보사회 등 188개, ('13～'16) 정부3.0 등 124개, ('17～'20) 4차 산업혁명 활용 등 98개 과제 지원

○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4개의 전략목표를 내용으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수립·발표('20.6.23.)

○ 자치단체 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 개선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촉진

※ 맘편한 임신 통합신청서비스 구축(1단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 구축 등

○ 국민 체감형 첨단기술 도입 공공서비스 구축 및 타 기관 확산 추진

※ 인공지능 수화·음성 민원안내(대전시),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제주도), 스마트글라스 원격안전점검(경기도), 스마트선별관제(부천시, 성동구)

○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광역시·도 구축완료(14개 광역시도)

○ 국민 간편로그인을 위한 디지털원패스 서비스 이용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 기틀 마련 및 창업 등 국민 이용 확산

※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15, '17, '19) 세계 1위 달성

※ '13년 대비 데이터 개방은 10.5배, 국민이용 1,497배, 서비스 개발은 62배 증가

○ 국제기구 디지털정부 평가 적극 대응으로 디지털정부 글로벌 위상 강화

※ OECD 디지털정부평가 1위, UN 전자정부평가 참여지수 1위, 발전지수 2위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	1	**4**	**10**	**11**	**24**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 세계를 선도하는 개방과 소통의 디지털정부를 구현한다.		①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1. 언제 어디서나 공유·협업하는 업무환경을 구현한다.		①스마트 통합업무환경 계획수립 달성도(%) ②시스템 이용 운영 달성률(%)
	①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	①온-나라 PC영상회의 개선 진척도(%) ②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만족도(점)
	②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한 디지털정부 핵심과제 추진	①사업관리 적정성(%) ②사업계획수립의 신속성(일)
2. 안정적·효율적 디지털정부 인프라를 강화한다.		①차세대 디지털정부 과제 발굴(건) ②공공서비스 민간개방 대상 발굴 및 추진(건)
	① 디지털 정부혁신 성과 창출	①디지털 정부혁신 가속화 노력도(%)
	② 디지털정부 정보자원관리 혁신 및 성과관리 체계 확립	①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 노력(%) ②디지털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③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운영기반 강화	①지방행정공통시스템 기능개선 수요조사 반영률(%) ②대국민 서비스 및 시스템 편의성 개선(건)
3. 국민 중심의 안전한 디지털정부를 구현하고 국제적 확산을 도모한다.		①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추진 실적(건) ②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보호대책 이행률(%) ③국제사회 디지털정부 확산을 위한 노력(건)
	①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	①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만족도(점) ②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성과목표 평균 달성도(점)
	② 디지털정부 사이버보안 및 인증체계 강화	①디지털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안 수준(개선실적)(점) ②모바일 기반 디지털정부 인증체계 추진율(%)
	③ 국제사회 디지털정부 선도국가 위상강화	①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실적지수(%) ②디지털정부 협력사업 만족도(점) ③디지털정부 국제사회 협력 활동건수(건)
4. 공공부문 데이터 개방·활용을 강화한다.		①공공데이터 활용 건수(누적, 개) ②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률(%) ③공동활용데이터 등록 기반 고도화(%)
	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 강화	①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 준수율(%) ②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점) ③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노력도(개)
	②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점) ②행정정보공동이용 월평균 증가율(%) ③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자 만족도(점)
	③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반 구축	①분석결과 정책활용률(%) ②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운영(%)

전략목표 II 세계를 선도하는 개방과 소통의 디지털정부를 구현한다.

(1) 주요내용

□ 전략목표의 주요내용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조사를 통해 수요자(국민) 관점의 성과 측정

- 국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 전반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용목적, 활용수준, 주요 서비스 등 파악
- 국가승인통계로서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공포, 서비스 개선과 정부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매년 10월
- 조사대상 : 전국 만16세~74세 일반 국민
- 자료수집방법 : 표본(만16~74세 일반국민 4,000명)을 추출하여 가구방문 면접조사

※ 국가승인통계로 지정(제110029호, '12.10월)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85.8	86.7	87.5	87.6	88.9	91.0	최근 3개년 간 실적치 평균을 기준으로 목표치 상향(1.0%p)하여, '22~'24년 예상 실적치에서 1.0%p 상향한 91.0% 달성을 '25년 목표치로 설정	만16~74세 일반 국민 4,000명 대상 가구방문 면접조사 실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생산자: 행안부, NIA 생산시기: 익년 3월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세계 최고수준 디지털 인프라 구축 • OECD·UN평가 1위의 디지털정부 추진 경험 • 높은 수준의 디지털정부 서비스 구축 경험 • 첨단 IT기술에 대한 높은 사회적 수용도	• 공급자(정부) 중심의 서비스 개발 • 부처 간 데이터 공유 미흡 • 민간 우수 서비스의 도입 제약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정부의 강력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의지 •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 국민의 디지털정부에 대한 높은 관심·신뢰 • 코로나로 비대면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하여 디지털 전환요구 증대	• 첨단기술의 출현과 민간서비스와 격차 심화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시급 • 지능화되는 사이버위협 증가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방안

전략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II. 세계를 선도하는 개방과 소통의 디지털정부를 구현한다.	▪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른 공급자 위주의 정책	▪ 지속적이며 다양한 방법의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정부 서비스 구현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신기술 확산에 따른 사이버 위협 발생	▪ 첨단기술 활용 보안시스템 적용,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 기반 마련
	▪ 부처 이기주의 등 협업 저해 조직 문화 상존	▪ 정보화 담당관·책임관 협의회, 범정부 TF 운영 등을 통해 기관 간 협업체계 공고히 구축
	▪ 빠른 IT기술 발전속도를 대응할 수 있는 정보화 조직 운영의 한계	▪ 관련제도의 신속한 재개정을 통한 디지털정부 거버넌스 정비 ▪ 급격한 정보화 환경의 변화를 선도하고 디지털정부로의 전환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민간소통 강화

(4) 기타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추진경과

○ 개별 전자정부시스템 대상 인지도·이용률 및 만족도조사 최초 실시('07~'08년)

○ 개별 시스템에서 전자정부서비스 전반으로 조사대상 및 내용 변경('09년)

○ 국민 전체의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웹 조사와 전화조사 병행 실시('09년)

○ OECD 등 국제기구의 조사체계에 부합하도록 조사대상 변경('11년)

- **(기존)** 만 19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 **(변경)** 만 16세~74세 인터넷이용자

○ 조사대상 변경(인터넷이용자→전국민) 및 국가승인통계 지정('12년)

○ 조사대상을 기존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14년~)

<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현황 >

<table>
<tr><th>구분</th><th>'10년</th><th>'11년</th><th>'12~'13년</th><th>'14~'16년</th><th>'17년</th><th>'18년</th><th>'19년</th><th>'20년</th></tr>
<tr><td rowspan="2">조사 대상</td><td rowspan="2">만19세 이상</td><td>만19세이상 (공표)</td><td colspan="6" rowspan="2">만16세~74세</td></tr>
<tr><td>만16세~74세 (조사)</td></tr>
<tr><td colspan="2">인터넷 이용자</td><td colspan="6">일반국민</td></tr>
<tr><td>조사 방법</td><td colspan="3">인터넷(웹메일) 조사</td><td colspan="5">가구방문 면접조사</td></tr>
<tr><td>표집틀</td><td colspan="3">인터넷 패널 (조사업체 보유)</td><td colspan="2">'10년 인구주택 총조사기준</td><td>'15년 인구주택 총조사기준</td><td>'16년 인구센서스 조사기준</td><td>'17년 인구센서스 조사기준</td><td>'18년 인구센서스 조사기준</td></tr>
<tr><td>조사 인원</td><td>1,500명</td><td colspan="2">2,000명</td><td colspan="5">4,000명</td></tr>
<tr><td>표본 할당</td><td colspan="2">인터넷 이용 비율을 고려한 지역·성·연령 비례할당</td><td colspan="6">각 시도 가구 수를 고려한 제곱근비례 할당</td></tr>
</table>

성과목표 II-1 언제 어디서나 공유·협업하는 업무환경을 구현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 주요내용

○ 클라우드, 모바일, 5G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업무환경 도입·확산

○ 메일, 메신저, 영상회의, G드라이브 등 비대면 업무환경을 지원하는 공통행정시스템 안정적 운영 지원

○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정부·국민·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적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핵심 디지털정부 과제 추진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①스마트 통합업무환경 계획수립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100	'21년 스마트 통합업무환경 추진계획 수립·추진 완료 여부(%)	계획 수립·보고 완료 시 100% 달성	계획수립·완료 보고서
②시스템 이용 운영 달성률(%)	신규	신규	89	92	'20년 실적(89%)을 감안하되,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3% 상향된 92%로 '21년 목표치 설정	■ (측정대상) - '20년 추진사업 ■ (측정산식) - Σ(대상과제별 운영목표 달성률① / 평가 대상 사업수② ■ (측정기간) - 시스템 운영 개시부터 성과점검 시까지 ■ (측정방법) ① 운영목표 달성률 ※ 시스템별 이용자수 목표 달성률×0.5 + 시스템별 이용건수 목표 달성률×0.5 ②성과점검 전에 시스템 운영이 개시돼 성과 측정이 가능한 사업	과제별 성과점검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과제로 스마트 업무환경 도입·확산 부각 ◦ 코로나-19 확산방지 일환으로 비대면 업무환경 이용확대 ◦ 클라우드, 모바일 등 최신정보기술을 활용한 공통행정서비스 확대 ◦ 행안부·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은 다년간 대규모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여 노하우 및 역량 보유	◦ 스마트 업무환경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의 기술개발 능력 한계 ◦ 잦은 유지보수 사업자 변경으로 사용자 요구사항 적시 반영 어려움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사업자, 주관기관별 사업추진 역량 편차가 커서 사업추진에 위험 요인 상존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라, 기존 전자정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디지털 정부혁신 방향성 정립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행정수요 급증 ◦ 4차 산업혁명으로 지능형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한 기술적 여건 조성	◦ 비대면 공통행정시스템의 사용량 급증에 따라 서비스 한계 도달 ◦ 코로나-19 확산방지 일환으로 재택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 감소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지연, 계약유찰 등에 따라 이월사업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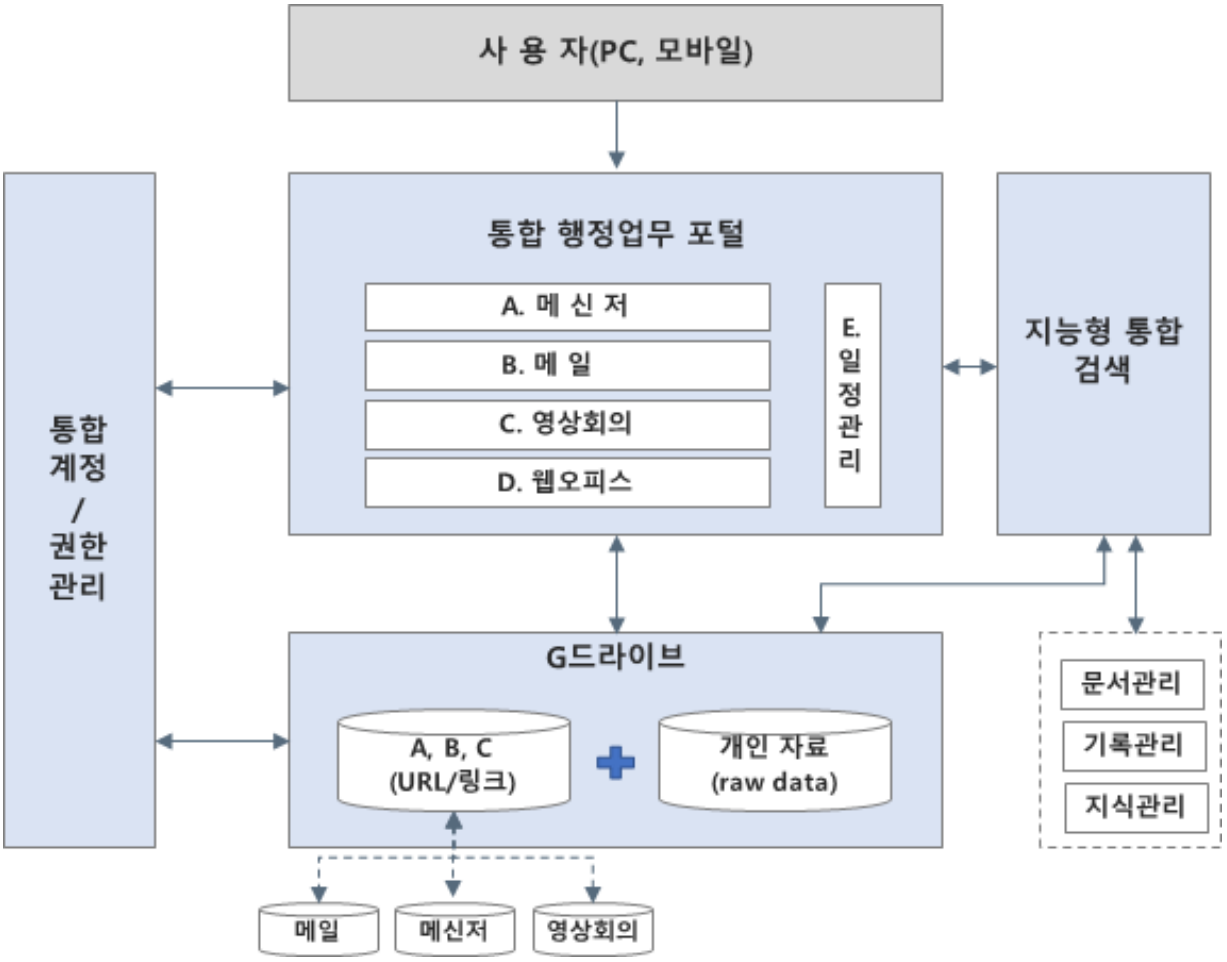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방안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Ⅲ. 세계를 선도하는 개방과 소통의 전자정부를 구현한다.		
1. 언제 어디서나 공유·협업하는 업무환경을 구현한다.	▪ 코로나 19 단계별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활성화로 인하여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가 점차적으로 감소	▪ 단계별 거리두기로 이용 가능한 좌석을 제한하여 코로나 19 종식까지 안전한 이용 방안 마련
	▪ 다양한 공통행정시스템 성능 및 기능이 사용자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 및 운영
	▪ 공통행정시스템 이용 불편 및 기능 어려움	▪ 공통행정시스템 매뉴얼 정비 및 사용자 교육 강화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규모, 다수 이해관계자(주관기관, 사업자 등) 참여 등의 특성에 따라 사업관리의 위험요인 상존	▪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수·발주자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외부 전문가의 면밀한 사업 검토 및 사업관리 지원으로 사업의 품질 제고

(4) 기타

□ 「스마트 통합 행정업무환경 구축」추진일정

○ 1단계 추진 (2022년) : 스마트 통합 행정업무 플랫폼 구축



○ 2단계 추진 (2023년) : 모바일 서비스 및 개인업무환경 고도화

○ 모바일 협업체계 구축

○ 개인 업무환경 구축

○ 개인정보 사전 필터링 체계

○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

○ 음성인식 회의록 관리 구축

○ 외부 환경 접속 개선

성과목표 II-2 안정적·효율적 디지털정부 인프라를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중점 추진

○ 차세대 디지털정부 과제 발굴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동력 확보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신규과제 발굴
-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기존 디지털정부 서비스 개선

○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으로 디지털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접근성·이용편의성 증대 등 민간개방 효과가 높은 공공서비스 발굴
-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웹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OpenAPI 형태로 서비스 개방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클라우드를 디지털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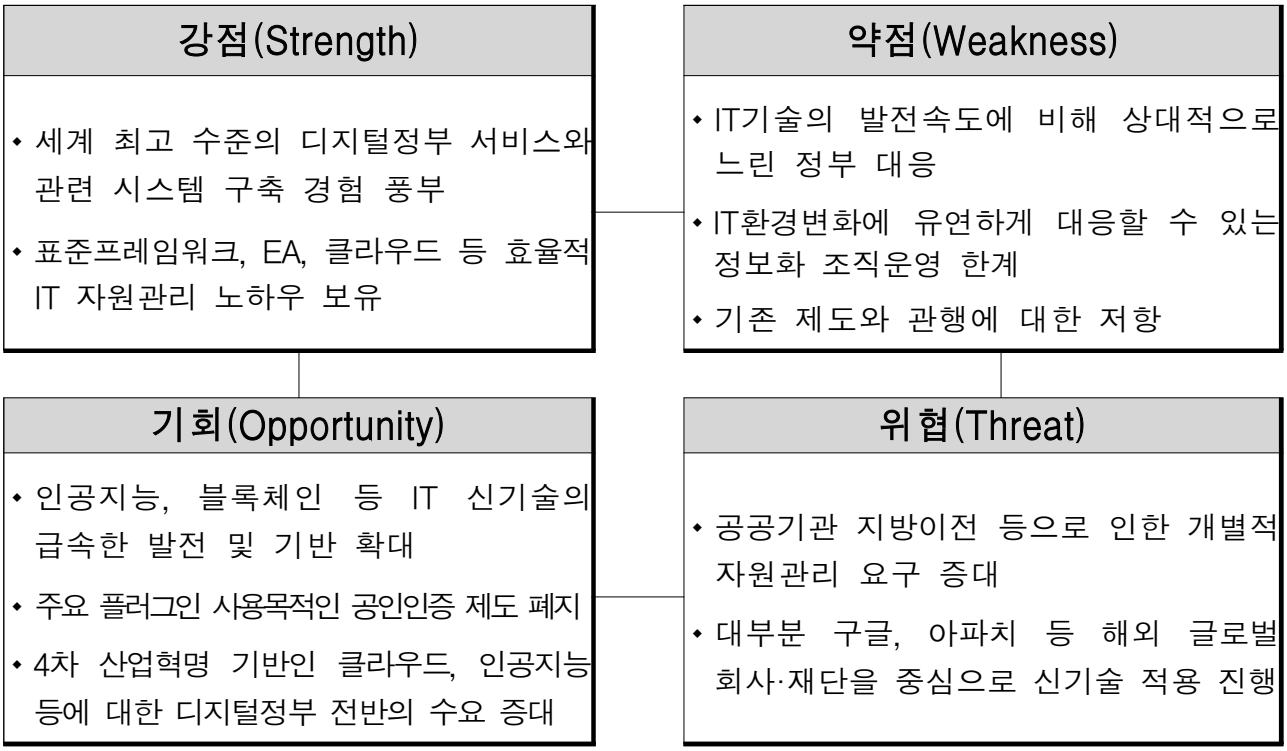
○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 관리로 공공정보 접근성 강화 및 이용 편의성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①차세대 디지털정부 과제 발굴(건)	신규	신규	신규	6	디지털정부의 미래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디지털 신기술 활용, 서비스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정부 과제 발굴·추진	차세대 디지털정부 과제 발굴·추진 건수	과제수행계획서 등 관련 자료
②공공서비스 민간개방 대상 발굴 및 추진(건)	신규	신규	신규	4	'21년 민간개방 효과가 높은 공공서비스 4개를 발굴, 향후 개방지원 플랫폼 구축시 시범사업으로 추진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대상 발굴 수	관련 보고서 및 공문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Ⅱ. 세계를 선도하는 개방과 소통의 디지털정부를 구현한다.		
2. 안정적·효율적 디지털정부 인프라를 강화한다.	▪ 부처·부서 이기주의 등 조직 문화	▪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 및 민간 전문가 참여 워킹그룹을 통해 부처·민간 협업체계 지속 운영
	▪ 빠른 IT기술 발전속도에 비해 느린 정부 대응	▪ 급격한 정보화 환경의 변화를 선도하고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소통 강화
	▪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른 공급자 위주의 정책	▪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플러그인 제거 방안 도출
	▪ 신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부처별로 독자적 플랫폼 구축, 기술 종속성 및 예산 낭비 우려	▪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개발 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II-3 국민 중심의 안전한 디지털정부를 구현하고 국제적 확산을 도모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발굴·확산함으로써 행정기관 업무 효율화, 대민서비스 개선 도모

○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관제시스템 확산으로 지능화·고도화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여 디지털정부 사이버보안 기반 강화

○ 공공기관 통합로그인 기반의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하여 공공웹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대면 시대,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신분증을 도입하여 디지털정부 혁신 추진

○ 한국형 디지털정부 서비스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①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추진 실적(건)	신규	신규	5	5	매년 과제 발굴·선정되어 추진되는 공공서비스 대상 건수 * '21년 첨단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 건수 : 5건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 건수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등
②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률(%)	96.36	97.46	96.88	96.9	○ 산출근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을 목표치로 설정 - 최근 3년간 실적치 : ('18) 96.36 → ('19) 97.46 → ('20) 96.88 -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 96.9 ○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 매년 102개 기반시설별 취약점 진단을 통해 도출된 취약점을 바탕으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기반시설이 대부분 지자체 사무로 실질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 인력 여건이 열악하고 소관 기반시설이 대다수 노후화 되어 취약점 조치가 불가능한 장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최근 3년 실적치의 평균으로 설정	(∑기관별 보호대책 이행률/보호대책제출 기관수) (102개)×100	2021.12월말까지 기관별 보호대책 이행실적 결과 취합 및 평가를 통해 측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③국제사회 디지털 정부 확산을 위한 노력(건)	10	11	17	17	- 과거 실적 및 추세와 '20년 실적 17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실적과 동일하게 17건을 목표치로 설정 ※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K-방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OECD 1위, UN평가 2위 달성으로 인해 과거 대비 높은 실적을 보임	한국형 디지털정부 모델 발표 실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보고서 등 문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 지속적 사업 추진에 따라 효과높은 첨단 정보기술 도입·활용 경험 풍부
- 민·관·산·학·연과 협조를 통한 체계적인 첨단 기술 검증·사업선정 체계 보유
-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19.9.) 수립에 따른 범국가적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기조
- 다양한 디지털정부 우수사례 보유
- UN 및 OECD 평가 최상위 달성
- 디지털정부 선도국 위상 획득

약점(Weakness)

- 부처·지자체 등 첨단 정보기술 도입 수요 대비 한정된 예산으로 제한적 사업 추진
- 중앙부처↔지자체간 사이버보안 역량격차 존재
- 정보시스템 인프라 확충·고도화 대비 적용을 위한 법적근거, 제도적 장치 미비
- 디지털정부 인증체계 개선을 일부 공공사이트에서 제한적으로 체감
- 공공기관 일부 웹사이트 보안적용(HTTPS) 미흡
- 외교부 무상원조(ODA), 기재부 유상원조 사업과 디지털정부 수출 간의 연계 부족
- 해외 디지털정부사업 관련 범정부적 협업체계 부재

기회(Opportunity)

- 첨단 정보기술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수요 대폭 증가
- 부처·지자체의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기술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가속
- 지능정보 및 생체인증 기술 등 ICT 활용 기술의 발전
- 정보보호 필요성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
- 데이터·클라우드·AI 등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추진
- 비대면 행정 등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확산 추세
-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 대응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벤치마킹 수요 증가

위협(Threat)

- 부처·지자체의 첨단 정보기술 도입 관련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독창성 필요
- 민간 시장 침해 등 비판적 여론 존재
- 성과중심의 평가체계에 따라 시범사업 도입 취지 훼손 우려
- ICT신기술 발전에 따라 사이버위협 지능화·고도화
- 보안이 열악한 지자체를 경유하여 중앙부처 주요 시스템 해킹시도 증가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협력 대면업무 제약
- 해외진출 사업 관련 타 디지털정부 강국 및 글로벌 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Ⅱ. 세계를 선도하는 개방과 소통의 디지털정부를 구현한다.		
3. 국민 중심의 안전한 디지털정부를 구현하고, 국제적 확산을 도모한다.	▪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구축 이후 모든 산출물이 주관부처에 무상 양도됨에 따라 운영상문제점 개선, 예산 확보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관부처의 책임운영에 한계	▪ 주관기관 책임운영제를 도입하여 현장 및 주관기관 대상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주관기관의 적극적 이용·관리 독려
	▪ 첨단 기술 도입을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	▪ 전문기관 및 첨단 기술보유 민간 기업 주도로 문제해결 솔류션 및 해커톤 추진 등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유도
	▪ 지자체 사이버보안 강화 추진을 위해 중앙-지자체 간 사이버보안 역량 격차 존재	▪ 지자체 정보보호 발전 방향 연찬회, 정책설명회, 정보보호 전문교육 및 인프라구축 지원 등 주요 현안 공유, 제도적·기술적 개선 협력
	▪ 디지털정부 비대면 인증체계 확대를 위해 웹서비스 제공 부처의 개선 의지 필요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중점과제로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주기적 추진계획 공유 및 연계 독려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관계기관 간 협업 및 민관협력 강화 필요	▪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공동활용, 기관 대상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등 타부처 지원 확대 ▪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의회 개최 ▪ 온라인 기반 민관 통합 협업·소통 환경 마련

(4) 기타

○ 디지털정부 온라인 홍보관(www.dgovkorea.go.kr)

성과목표 II-4 공공부문 데이터 개방·활용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 주요내용

○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으로 이용자 만족도 및 데이터 활용도 제고

○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全 단계별 중점 지원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활성화 촉진

○ 업무처리를 위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통해 국민 편의 증진 추진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정보주체(국민)의 정보주권 강화

○ 정부 내 방대한 데이터를 행정·공공기관간 연계·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기반 고도화 등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① 공공데이터 활용 건수(누적, 개)	3,677,195	5,592,234	7,707,142	8,863,213	최근 3년 증가율 둔화 감안('17→'18) 85%, ('18→'19) 52%, ('19→'20) 37.8%), '20년 실적치(7,707,142건) 대비 15% 향상된 수치를 목표로 설정	공공데이터포털에서의 파일데이터 다운로드 건수와 오픈API 활용 신청 건수 합계 ※'(~16년) OpenAPI 개발 활용신청건수 측정, ('17년~) 전체 활용건수 측정	시스템통계
②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률(%)	신규	신규	100	100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는 3단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년 구축사업에 이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목표로 마이꾸러미 서비스 확대	공공 마이데이터 근거법 마련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40%) + 공공 마이데이터 마이꾸러미 11종 구축 (60%)	개정안, 보도자료 등 관련 자료
③공동활용데이터 등록기반 고도화(%)	신규	신규	신규	100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20.12.)으로 공공기관간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등록·활용할 수 있는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설정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사업계획서 및 사업 결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요구 증가 및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 범정부 차원의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근거 마련 •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한「데이터기반행정법」제정·시행	• 데이터 보유기관 간 협력 및 표준화 등 복잡한 절차로 데이터 이용 불편 •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 인식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데이터 3법 통과로 공공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 코로나19 등 공공 마이데이터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가 •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의 중요성 부각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문제 대두 • 공공 마이데이터 근거법에 대한 개념 및 인식 부족 •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데이터 등록 등 기반 체계 부족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방안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Ⅱ. 세계를 선도하는 개방과 소통의 디지털정부를 구현한다.		
4. 공공부문 데이터 개방·활용을 강화한다.	• 데이터 3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 포함 공공데이터의 발굴·개방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인정보 포함 공공데이터 개방에 제약 존재	• 개인정보 포함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제공·활용을 위한 가이드 마련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 부족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적극적인 홍보 추진
	•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 체계 마련 필요 •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필요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 프로세스 마련, 시스템 고도화, 공공기관 교육 등을 통한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4) 기타

○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http://www.data.go.kr)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hare.go.kr)

전략목표 III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한다.

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 성과목표 1 : 획기적인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촉진한다.
- 성과목표 2 :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 및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한다.
- 성과목표 3 : 주민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의 기반을 구축한다.
- 성과목표 4 : 국가균형발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 추진배경·필요성(중요성)

○ 기능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 등 지방자치 강화 및 실질적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기반마련

○ 능력과 성과 중심의 지방인사관리 기반 조성 및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및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여건 마련

○ 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 및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이행 등으로 4·7 재·보궐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 재·보궐선거 추진 : 20명(광역단체장 2, 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8, 기초의원 8)

○ 지방의회 관련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지방의회 전문성·책임성 강화 등 충실한 역할 수행 기반 마련 필요

○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지방행심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및 국내·외 교육기관의 역량 향상 지원 필요

○ 가시적인 국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

○ 생활에 밀접한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행정사 제도 개선 및 국민 편익 증진

○ 미해결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보상 등 후속조치를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과거와 미래의 포용적 사회통합 추진

○ 사회주체간 협업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사회혁신을 확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필요

○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와 주민 간 갈등, 각종 지역사회 문제로 인하여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대

○ 주민을 비롯한 지역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현안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역량 강화 지원 필요

○ 코로나19 이후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등 생명살림운동의 중요성 재인식 및 새마을운동 개발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개도국 빈곤퇴치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접경·도서지역에 대한 주민생활 및 생산·소득 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소외 없는 균형발전 도모

○ 군 관련 특수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저성장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지역간 불균형 해소 도모

○ 이용자 편의 중심의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시미관을 위한 정비 및 실증 규제특례를 통한 옥외광고산업 진흥,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

○ 주소정보를 이용한 생활안전(긴급구조 등)·생활 편의(배송 등)를 제고하고,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산업(드론 및 로봇 배송, 자율주차, 실내 내비게이션 등) 지원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 확보

◇ 그 간 추진성과

○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월 국회통과, '22.1월 시행)으로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의 자율성 강화 및 실질적 자치권 보장

- 장기 미이양 사무의 신속한 이양 및 이양 사무 수행에 따른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공포 '20.2.18, 시행 '21.1.1.)
-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의 자치권 침해소지 사전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운영('19.7.1.~)

※ (운영경과) '19.7.1.~'20.12.31. 기준 총 2,587건 접수, 검토완료된 2,426건 중 99건의 개선의견 제시(개선권고 62건, 보충의견 37건) 및 해당 부처와 협의 완료

○ 지방자치단체 인사 자율성·책임성 확대 및 공직역량 제고

- 시·도 의회의장에게 임용권 부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직류 신설, 전문경력관 사전협의 절차 폐지 등 지자체 특성·여건에 맞는 인사 구현
- 지자체별 인사운영 통계 공개 및 확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합리화, 출장시스템 개선 통한 부당여비 수령 예방 등 책임성·공정성 확보 기반 마련

○ 제21대 총선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및 철저한 방역지침 이행으로 감염사례 미발생 및 k-방역 우수사례로서 국격 제고

* 제21대 총선 투표율은 66.2%(사전투표율은 26.69%)로 2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선거시스템 및 대응 경험을 해외 각국에 공유(미국, 5.29. / 웨비나, 7.8.)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

* 정례회·임시회 등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등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및 지자체의 종합적인 자치법규 지원체계 구축

- 주민조례청구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법률 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20.7.3.) 완료
- 스마트 주민조례 제정·개폐청구 전자시스템 도입방안 마련
-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추진('18~'20년 : 15,113건)
-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 추진('17~'20년 : 71개 지자체)

○ 혁신과 분권을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 양성교육 운영

-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교육 공백 최소화
- 위기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환경 기반 마련
- 지자체 역량 배양을 통해 변화를 선도하는 문제해결형 리더 양성
- 지자체 HRD 우수사례 공유 등 개방·소통·협력의 열린 교육 추진

○ 지방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 및 국내·외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

- 위기 상황 속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국정과제 성과창출 지원을 위한 교육 운영

○ 중앙-지방 소통 강화를 위해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지자체와 주요 국정현안 공유

- 시도지사간담회 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12회

- 장·차관의 민생현장 방문 및 면담으로 지역 현안 및 난제 해결 지원

- 지방행정 정책 참고자료집(지자체 우수시책) 전 시·도 공유·확산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 주민등록증 보안요소 강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등·초본 교부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강화를 통한 시민사회 성장지원

- '20년 자원봉사 시행계획 수립 등 자원봉사 활성화 제도 정비 및 재난복구,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주도 자원봉사 지속

*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자 171만명('20.12월말기준) / 폭우피해복구 봉사자 138,202명(8.3~8.25.)

** 명절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 : 설명절 총 895회, 23,708명 참여 / 추석명절 총 1,186건, 22,439명 참여

-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관련 지침 개선

* 의무자부담 개선, 사업비목 확대 등 자율성 확대, 사업비 정산 간소화 등

- 기부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개통 등 기부 활성화 기반 마련

* 기부정보 통합공개 및 모집등록절차 전산화 시스템 구축, 대국민 서비스 실시

○ 과거사 문제 해결 노력 및 화해·치유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

- 과거사정리법 개정,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으로 과거사 문제 완결적 해결 기대

☞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06~'10년) 종료 후 답보상태에 머물던 미해결 과거사 전반에 대해 진실규명 재개(신청접수 1호 : 형제복지원 사건, '20.12.10)

- 제주4·3사건 제6차 추가신고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완료('18~'20년)

-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 화해와 치유사업 추진으로 국민통합 기여

※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사업, (가칭)민주인권기념관 조성 실시설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 수여(19명) 등

○ 공무원직협법 제정 21년만에 경찰·소방공무원에게 협의회 가입 허용('20.6.~) 등 상생 협력적인 협의회 활성화 도모

- 경찰·소방 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등으로 협의회 규모 확대(2.4만→19만)

○ 현장중심 지역문제해결 지원

-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5개소)

* ('18년 선정) ①강원 춘천, ②전북 전주 / ('19년 선정) ③대전, ④제주 / ('20년 선정) ⑤충남 천안

- '20년 지역자산화 사업(12건) 추진을 통한 지역활성화 금융지원

※ (지역자산화 업무협약체결) '19.10.21. (기관별역할) 행안부-사업총괄/ 신보-보증재원 10배 (375억원)보증 / 농협-보증재원(37.5억원) 출연

* ('20년) 12개소 57억원 (서울 ·전북 2,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충남·전남·제주 1)

- 공공 유휴공간을 주민참여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 7개 시·도에 43개 사업('19년 19, '20년 24)을 추진하여 공동체 활동, 주민 소통, 문화예술 등을 위한 21개 공간 조성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 확산

- 공공기관·주민·지자체·대학 등 민관협력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확산

※ 8개 지역(광주·대구·대전·강원·충북·충남·전남·경남) 475개 기관 참여, 122개 의제 실행, 28,000여명의 주민 참여

- 공공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반영

※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지표에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예시 반영

○ 다양한 혁신 사업을 통한 혁신 분위기 제고

-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국민 공감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홍보 채널 활용을 통해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 재도전을 지지·격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민간·공공기관 자율기획(9개소), 지역박람회 개최, 홍보 다각화* 등

* 언론보도 556건, TV광고 361회, 콘텐츠 제작 703건, 기획기사 1건, 방송 4회 등

- 주민참여·민관협업 및 디지털·과학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 디지털기술 활용과 주민참여로 지역맞춤 혁신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 (발굴) 9개(지역격차완화·시민안전확보) / ** (확산) 4개(공감e가득)

※ 연구자-주민 소통 및 부처 등 협업*으로 실질적 문제해결 협력기반 마련

* (행안부(지자체)-과기부) '20년 본과제 10개, '21년 문제기획리빙랩 15개

○ 청년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 증진

- 청년마을* 및 역량강화**를 통한 인구유출지역의 청년정착 지원

  * 문경 '달빛탐사대' / ** 창업 교육, 청년활동가 리더십 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등

- 지역 활동을 원하는 청년공동체 발굴·육성*('20년 16개팀), 지자체 역할 강화 및 사업규모 확대('21년 100개팀)를 위한 사업 방식 개선**

  * 과업수행비, 멘토·전문가 컨설팅 등 / ** 용역사업 → 지자체 보조사업 전환

- 지역공동체의 교류·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 조성 지원(마을공방 8개소)

○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마을기업 발굴·지원* 및 우수사례 선정(16개소), 유통지원센터(2개소)·상생샵(2개소) 조성 등을 통한 마을기업 판로 확대 지원

  * 신규 마을기업 138개, 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108개 지정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반 여건 개선

  ※ 사회적경제 정책자료집 발간(4월), 평가지표(정부합동, 지방공기업경영) 개선

○ 새마을운동 현대적 계승·발전으로 함께 잘사는 지구촌 실현

- 생명살림운동 추진*을 통한 탄소중립사회 구현 촉진

  * 새마을운동 대전환('18년 6월)에 따른 생명살림국민운동 추진 /유기농 태양광 발전소 운영(발전규모 70.4Kw/h), 양삼식재 412개소, 전회원 에너지 30% 감축

- 개발도상국(라오스, 동티모르 등) 대상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으로 다함께 잘 사는 지구촌 실현

  * 초청연수('20년 35국 1,506명), 시범마을조성('20년 8국 35마을)

-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지구촌 및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 지구촌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컨퍼런스(11.25.~26.)

○ 접경·도서 등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 남북관계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19.1.), DMZ 평화의 길 동서횡단 최종노선(안) 확정, 통합브랜드(BI)등 디자인 개발('20년)
- '17년부터 제정 추진해온 고향사랑 기부금법안 국회 심의 및 행안위 의결('20.9.22.) 및 인구감소지역 정의·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완료(20.11.19. 본회의 의결)
- 섬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과 체계적 관리 위한 '한국섬진흥원' 신설위해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완료('20.12월)
- 서해5도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 확정('20.7월)

-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LPG 배관망 확충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 추진

* ('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2,064억원, 접경권 발전지원 439억원, 섬발전협력사업 27억원

○ 군사적 특수상황에 따른 피해·소외지역 지원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서해5도 생활환경 개선,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
- 지역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청년층 지원,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추진

* ('20년) 미군공여구역 800억원, 평택지원 241억원, 서해5도 발전지원 76억원, 인구감소 20억원(특교세)

○ 안전하고 편리한 주민생활환경 조성

-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정비개선사업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 적극 추진으로 '17년부터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지속 감소
- 공중화장실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및 홍보물 제작, 불법촬영 근절 지속점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및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 지원사업 추진
- 옥외광고물 법령개정('20년, 4건) 및 실증 규제특례 추진('20년, 7건)

○ **주소체계 고도화 기반 마련 및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

- 도시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주소정보를 활용한 혁신성장산업 지원 및 그간 제기된 불편 사항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20.12.8. 공포, '21.6.9. 시행)
- 주소체계 고도화* 및 산업화 시범사업**(공모) 추진

  * 잠실역 입체주소 도입, 소공원 사물주소 부여, 터널 내 기초번호판 부착

  ** 드론 배송, 자율주행로봇 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장소*에 주소 부여(9종)

  *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진해일긴급대피장소 등
- 자전거길에 도로명 부여 및 인접 건물*에 주소 부여

  * 공중화장실, 자전거길 인접 건물(휴게소, 관광건물 등)
-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대
- **도로명주소 사용 국민 불편사항 정비***를 통한 사용환경 개선

  * 미전환 공적장부 정비, 건물군 해체, 긴 도로명 정비 등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1	**4**	**4**	**20**	**5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한다		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수
1. 획기적인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촉진한다		① 자치분권제도 교육 실시(건)
	① 지방분권 체계 구축	① 자치분권 기반마련 ②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마련
	② 국가기능의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	① 자치분권 사전협의 내실화 노력도 ②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③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및 지방인사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①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 현황 공개 ② 지방인사 운영 지원 만족도
	④ 공직선거 관리 및 주민참여·지방의회 역량강화	① 법정 선거사무 지원 ② 주민직접 참여제도 개선 ③ 지방의회 역량강화 지원
	⑤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및 지자체의 종합적인 자치법규 지원체계 구축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②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정비율
	⑥ 혁신과 분권을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 양성교육 운영	① 교육수료생 집합 및 비대면 교육만족도 ②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 ③ 교육수요자 맞춤형 교육 운영
	⑦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및 국내외 지방공무원 역량향상 지원	① 교육환경 만족도 ② 국내외 지방공무원 역량향상 지원 만족도 ③ 지방공무원 국정성과 창출 지원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강화 및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한다		①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및 시민사회 지원 노력도(%)
	① 중앙-지방간 소통 및 협력 강화	①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노력도
	② 주민등록·서명확인(인감)·행정사 제도 개선 추진	① 주민등록 법령 및 지침 개정 등 노력도(70%) ②본인서명확인서 이용 활성화 실적(20%) ③ 행정사법령 개정 노력도(10%)
	③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① 실제 자원봉사 참여인원 ② 비영리민간단체 역량 강화 ③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목표액
	④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을 통한 사회통합지원 강화	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②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 운영성과 ③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초인프라 확충 조성사업 진척도
	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① 노사관계 협력도
	⑥ 남북 평화번영 시대를 대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①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결연 실적 ② 사회통합 교육과정 확대 및 대체율 ③ 이북도민 기업체 등 취업률
3. 주민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의 기반을 구축한다		①지역혁신 기반 구축 실적
	①지속가능한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	①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운영 실적(개소/명) ②주민체감형 혁신 우수사례 발굴 대비 확산 달성률(%)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②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①신규마을기업 발굴(개소) ②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실행(건수) ③청년공동체 발굴(팀)
	③주민참여 기반의 지역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①실패박람회 숙의토론 발굴과제 정책반영도(%) ②디지털 지역혁신 주민 참여율 및 만족도(%) ③청년마을 청년참여자 만족도(점)
	④새마을운동 지원	①생명살림 지도자 양성 교육이수 인원수(공통) ②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초청 및 현지연수 인원(공통) ③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중점 육성 시범마을 수(공통)
4. 국가균형발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① 접경지역 지원사업 정책만족도
	① 지역개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① 주한미군 이전 평택 지원사업 만족도 ② 위험도로 구조개선 전후 교통사고 발생 감소율 ③ 온천이용자 만족도
	② 주민생활공간 개선 추진	①자전거 이용자 만족도 및 자전거 사고위험 지역 정비개선효과 ②공중화장실 이용 만족도 ③옥외광고 산업분야 규제완화 실적 및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③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	① 도로명주소 정보 활용도 ② 주소정보 연계 공공·민간 기관 수 ③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한 주소부여대상 확대 및 시범사업 추진 실적

전략목표 III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한다.

(1) 주요내용

□ 획기적인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능 중심의 지방이양 및 자치분권 사전 협의제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강화 및 시민사회 성장

○ 중앙-지방 간 최고위 정책 협의체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제화

○ 과거사 진실규명 등 후속조치로 과거와 미래의 포용적 통합 지원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사회 성장 지원

□ 주민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 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 다양한 혁신주체 참여로 사회적 난제 해결 및 지역혁신 모델 정립

○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로 개도국 빈곤 퇴치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국가균형발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원

○ 접경·도서 등 저성장지역의 생활 및 생산·소득기반 정비·확충

○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소외 없는 균형발전 도모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수	신규	신규	95	408	626	75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626개소를 감안하여, '25년도 750개소로 확대 실시를 목표로 설정	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수(80점) ②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개정(20점)	주민자치회 관련 공문 등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19	'20	'21	'22	'23
Ⅲ-1. 획기적인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자치분권 제도 관련 교육 실시	신규	30	30	30	30
Ⅲ-2.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 및 시민사회 성장을 지원한다.					
・중앙-지방간 소통 협력 및 시민사회 지원 노력도(%)	100	100	100	100	100
Ⅲ-3. 주민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의 기반을 구축한다					
・지역혁신 기반 구축 실적	100	100	100	100	100
Ⅲ-4.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정책 만족도(점)	74.5	75.9	76	77	78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강점(Strength)

- 행안부-지자체간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
- 지방과 긴밀히 연결된 국정지원 역량
- 지방자치의 성숙에 따른 국민의 관심 증대
- 지방행정에 대한 다양한 경험·지식과 신속한 대응력 축적

약점(Weakness)

- 현안업무로 인한 새로운 기능수행 여력 부족
-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 부족
- 법·제도적 근거 및 예산 없이 추진되는 업무
-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 등 지역간 격차 확대 및 낙후지역의 저발전 구조화

기회(Opportunity)

-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 필요성 증대
-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중앙·지방간 공감대 형성
-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요구 급증
- 은퇴세대의 건전한 시민사회 육성 참여 확대

위협(Threat)

- 행·재정적 지원이 없는 지자체 협조 한계
- 지방자치의 심화로 지방을 대변하는 입지 축소
- 지방자율성 확대에 따른 정책혼선 우려
- 양극화, 계층 간 갈등 등 심화되는 사회문제
- 중앙부처간, 지자체 부서 간 칸막이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전략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Ⅲ.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한다	• 정책(사업) 추진 예산 부족 및 관련 기관 이해관계에 따른 비협조	• 정책(사업) 필요성 적극 홍보 및 관계부처 협의 강화 • 정책(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 사무 지방이양에 대한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부진	• 중앙, 지방, 관련 협의체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및 지방분권 관련, 자치단체와 지속 협의
	•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주요 국정시책 추진 차질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 협력강화
	▪ 양극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복잡한 사회문제 심화	▪ 건강한 민간단체 육성 등을 통해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

성과목표 Ⅲ-1 획기적인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촉진한다.

(1) 주요 내용

□ 획기적인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능 중심의 지방이양 및 자치분권 사전 협의제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지방인사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 범정부적 대응을 통해 공명선거 및 안전선거 추진 지원,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정 역량 강화

o 실질적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례 발안 제도 기능 강화 및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자치법규 지원체계 구축

o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및 국·내외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자치분권 제도 관련 교육 실시(건)	신규	신규	30건	30건	현재 운영 중인 자치분권, 주민참여 제도 운영 및 '21년 개정 추진 예정인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등 개선 제도, 자치분권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설명 실적	① 자치분권 관련 제도 설명회,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 등 (30건 이상, 100%)	제도개선 및 운영 관련 설명회 등 계획, 공문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민선자치출범 이후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추진의 기반 마련 •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20여년 간 축적된 지방자치 경험 • 지방자치의 성숙에 따른 지자체 조직·인사 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 증대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으로 정부 제·개정 법령안의 자치권 침해 예방 수단 보유 • 행안부·선관위 등 선거 관련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지방공무원 교육 중추기관으로서의 높은 위상과 전국적인 네트워크	• 지방의 실질적 권한 미흡 • 자치단체 도덕적 해이와 자치역량 부족 • 사무배분 기준의 구속력 미흡 • 선거 시 후보 비방, 공직사회 내 불법 선거 관여 행위 등 발생 • 잦은 순환 보직, 교육투자 미흡 등으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이 부족 • 국정과제 공유, 컨설팅 등 지자체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으나, 조직·인력 등 내부적인 한계로 전문적 도움에 제약 발생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국민의 권리의식·참여욕구 증대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지방분권 요구 및 논의 활성화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과 시·도간 협력 필요성 증대 • 보충성 원칙 등을 통한 사무배분 및 자치권의 공감대 확산 • 주민 중심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역량 및 자율성 강화 요구 급증 • 범국민적 공명선거 추진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	• 지방 자율성 확대에 따른 법령 불일치 자치법규 확산으로 주민혼란 초래 • 일반 국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 신뢰도 저조 • 중앙과 지방의 사무이양에 대한 소극적 태도, 지방의 실질적 권한 미흡 • 주민참여제도 개선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들의 부정적 시각 • 지방 인사운영 비정상적인 관행 지속, 지방공무원의 낮은 전문성으로 국민 신뢰 저하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Ⅲ.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한다.		
1. 획기적인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대통령 개헌안 무산 • 국회의원선거 등 외부요인 의한 국회 논의 지연	•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정책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관계 법령 제·개정 추진 • 전문가, 유관 기관, 대국민 등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한 국회 논의 유도
	• 지방 이양에 대한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부진 • 사무배분 기준의 구속력 미흡으로 인한 지방자치권 침해사례 발생	• 중앙, 지방, 관련 협의체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및 지방분권 관련, 자치단체와 지속 협의 •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 하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 여부 사전 검토를 위한 '자치분권 사전 협의제' 안착 지원
	•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국가선거 대비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 • 주민투표·주민소환의 제도적 장벽으로 실질적 주민참여 효과 미미	• 투표율 제고를 위해 관련 기관 합동 홍보체계 구축 및 다각적 채널을 통한 투표참여 적극 홍보 추진 • 제도개선 및 자치단체·시민단체 간담회·워크숍 등을 통한 주민참여 제도 이해도 제고 및 제도 활성화 유도
	• 주민조례발안법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통과 지연 발생 우려 • 법령불일치 자치법규의 제때 미정비로 인한 주민 혼란 초래 발생	• 쟁점사안의 조기 파악과 대안 제시 및 홍보로 입법기간 단축 •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및 정비실적 관리 등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 독려

(4) 참고자료 : 해당없음

성과목표 Ⅲ－2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 및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한다.

(1) 주요 내용

- ㅇ 중앙-지방간 최고위 정책 심의·조정 협의체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 제도화 및 운영 추진
- ㅇ 국정운영의 통합성 확보 및 중앙-지방간 쌍방향 회의체로서의 역할이 강화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운영 활성화
- ㅇ 주민등록 관련 민원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 ㅇ 미해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과 그에 따른 보상 등 후속조치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과거와 미래의 포용적 사회통합 추진
- ㅇ 자원봉사 활성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사회 성장지원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ㅇ 공무원단체 및 유관기관에 대한 협력·지원체계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및 시민사회 지원 노력도(100%)	신규	100%	100%	100%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활성화와 시민사회 지원를 위해 장(차)관 소통 노력도를 목표치로 산출 - '20년 장(차)관님 소통 노력을 위한 현장 방문이 32회인 점을 감안하여 '21년 목표를 6.3% 상향한 34회로 설정	장(차)관 현장방문 횟수(현장방문 횟수/34회)×100	현장방문 계획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지방행정에 대한 다양한 경험 · 지식과 신속한 대응력 축적 ◦ 오래전부터 유지해 온 행안부-지자체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의 능동적·적극적 참여	◦ 광범위한 업무 영역으로 많은 업무가 법적 ·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 ◦ 복잡 다양한 지방업무의 특성상 긴급한 현안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 됨에 따라 새로운 기능수행을 위한 여력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22.1.)을 앞두고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 대두 ◦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사회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국민적 요구 증대 ◦ 오랜 경험과 지방자치의 성숙으로 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 인식	◦ 자치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 위주의 행정 추진으로 지자체간 갈등 발생 우려 ◦ 예산 등 행 · 재정적 지원이 없는 사안에 대해 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데 한계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계층·집단 간 갈등 심화 등으로 지역사회 통합이 어려움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방안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Ⅲ.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한다.		
2.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 및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한다.	▪ 중앙-지방간 입장 차이,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 우려 ▪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주요 국정시책 추진에 차질 ▪ 양극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복잡한 사회문제가 심화	▪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활성화, 장·차관 현장 방문 등 중앙-지방간 협력채널 다양화·활성화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 협력강화 ▪ 건강한 민간단체 육성과 기부문화 확대, 과거사 정리 및 후속조치를 통해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

(4) 참고자료 : 해당없음

성과목표 Ⅲ－3 주민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의 기반을 구축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주민의 일상 속 지역문제해결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으로 지역사회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
- 주민과 지역의 사회단체 활동에 필요한 공간 구입비 등을 융자 지원하는 지역자산화 사업을 통해 주민주도의 지역사회문제해결 활동 지원
-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혁신 활동을 지원·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 마을기업 발굴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0개 지역(기존 8, 신규 2)에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 및 단계별 민·관 협업 플랫폼 전국 확산
-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및 지역활력 제고

○ 주민참여 기반의 지역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 실패박람회 전국 확산 및 연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재도전 응원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주민참여·민관협업과 디지털·과학기술을 활용한 현장중심 지역맞춤 문제해결 기반 강화 및 부처 협업의 지역혁신 모델 발굴·안착
- 인구유출지역 대상 청년마을 확대 및 이주 청년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 장기정착 지원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공공 유휴·저활용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 주민소통 등 주민이 필요한 공유공간을 조성하여 지역활력 제고

○ 새마을운동 지원

- 생명살림국민운동 추진 확산으로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연계강화
- 개도국 마을주민·공무원을 우리나라에 초청, 새마을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새마을 지도자 육성
-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빈곤 퇴치·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구축 지원 및 수원국 중심의 새마을운동 자생적 확산 기반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지역혁신 기반 구축 실적	신규	100	100	100	주민 주도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기반 구축 실적(100%) - 지역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실적(30%) - 자치단체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혁신평가 실시(40%) - 활동가·전문가 등 다양한 혁신 주체와 민관협업 체계 구축(30%)	① 지역혁신 관련 지원 법령 제정 추진 실적(30%) ② 전 자치단체 혁신 평가 실시(40%) ③ 지역혁신 관련 활동가·전문가 간담회 등 10회 이상(30%)	구축 실적 관련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등 확인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 핵심 국정과제로 정부의 추진 의지 강력
- 지방자치 성숙에 따른 지역문제에 대한 지자체·주민의 적극적 참여 의지
- 행안부-지자체간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

약점(Weakness)

- 지역사회혁신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지도
-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 등 지역간 격차 확대 및 지역별 현안 상이
- 지역사회혁신 추진 근거법령 부재

기회(Opportunity)

- 국민들의 정치·행정 참여욕구 및 역량 증대
- 디지털 기술 발달 등 국민이 신기술을 활용하여 난제 해결할 수 있는 여건 성숙
- 지역현장의 자생적 공동체 활동 확산 및 공동체 관련 정책 요구 증가

위협(Threat)

- 예산 등 행·재정적 지원이 없는 사안에 대해 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데 한계
-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공동체 해체 위기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방안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Ⅲ.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한다.		
1. 주민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의 기반을 구축한다.	• 주민 주도의 지역혁신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 ▪ 주민 주도의 지역혁신에 대한 지자체·주민의 낮은 인지도·관심도 ▪ 양극화, 계층간 갈등 등 지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문제 심화	▪ 정부는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등 지원 역할에 집중 및 주민 참여 채널 다양화·활성화 추진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및 혁신 성과·우수사례 확산 추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시민사회 역량 강화

(4) 기타 : 해당없음

성과목표 Ⅲ－4 국가균형발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접경·도서지역 등에 대한 주민생활 및 생산·소득 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소외 없는 균형발전 도모

○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및 활성화, 옥외광고산업 진흥,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등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

○ 주소정보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국민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주소체계를 고도화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전략목표와의 관계

○ 지리적 여건, 국가안보, 인구감소 등에 따른 저성장 지역 지원을 통해 지역격차 해소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균형발전 도모

○ 자전거, 옥외광고, 공중화장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 실현

○ 드론·드로이드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필요한 주소인프라를 구축하여 배송인프라가 미흡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접경지역 지원사업 정책 만족도	73.3	74.5	75.9	76	'19~'20년 실적치를 산출평균하여 0.8점을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산술평균	접경지역 시군 주민 대상(300명 이상) 직접 설문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1월) 등 인구감소지역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지자체의 능동적· 적극적 참여 확대 ◦ 자전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규제개선 전문성 확보, 공중화장실 민간협력체계 구축 ◦ 각종 정보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주소정보의 실시간 갱신·유통 체계 구축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부문별 종합발전계획의 변경 필요성 대두 ◦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 등 지역간 격차 확대 및 낙후지역의 저발전 구조화 ◦ 새로운 옥외광고물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 미흡, 공중화장실법의 민간적용 한계 ◦ 현 도로명주소 체계는 2차원 개념으로 3차원 입체복합건축물의 위치표현 한계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주민주도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 역량 및 경험 축적 ◦ 낙후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포용적 성장 공감대 확산 ◦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추세,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옥외광고 산업발전 가능성 ◦ 사람과 기계가 연결되는 초연결사회 도래로 언어로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주소의 역할 증대 가능	◦ 대북관계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추진 환경의 급변 가능성 상존 ◦ 지속적인 공중화장실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 위치식별자로서의 주소의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관련 기술 미비 ◦ 청년층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인구감소 위기 심화 및 수도권 인구 집중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외활동 축소 및 경기침체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방안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Ⅲ.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한다.		
4. 국가균형발전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 지역발전사업 추진시 예산부족,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른 비협조로 지연되는 경우 발생	• 도서, 접경지역 등 국가안보 기여 지역 지원의 필요성 적극 홍보 및 관계부처 협의 강화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 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출 및 인구감소로 인한 공동체 붕괴	▪ 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 ▪ 주민이 마을공동체를 구성·운영하는 특성화 사업 추진
	▪ 도시미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증가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 대비 높은 광고효과, 점포주 간의 경쟁 등으로 불법 광고물 난립 계속	▪ 효과적 정비·관리를 위해 제도 및 정책 개선, 민간참여 확대, 지자체 전문역량 강화 등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방안 마련·추진
	▪ 지자체 등 협업으로 불법촬영 상시점검 및 안전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 지속	▪ 지속적인 안전개선 노력 및 국민 인식개선 홍보와 함께 점검 매뉴얼 개정 및 교육 등을 통해 현장의 체감도 제고
	▪ 도로명주소로 대략의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불만 여론 존재	▪ 도로명 부여·변경 시 지역명을 도로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도로명을 듣고 도로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스토리텔링 등 홍보 강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전략목표 Ⅳ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추진한다.

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 **성과목표 1 : 지방재정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한다.**
- **성과목표 2 : 지방세 제도 및 세정운영 개선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 **성과목표 3 :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 추진배경·필요성(중요성)

○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는 지방세입 기반 강화

○ 고용·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시스템 혁신 등

◇ 그간 추진성과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지방재정 운용

- '코로나19' 총력 대응,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추경예산 편성(11.16. 기준)

※ 추경규모(조원) : ('16) 40.7 → ('17) 45.0 → ('18) 40.1 → ('19) 54.7 → ('20) 83.7

- 경기반등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 달성(11.30. 기준)

※ 집행규모(조원) : ('16) 247.5 → ('17) 264.8 → ('18) 280.3 → ('19) 328.4 → ('20) 385.8

○ 지역균형 뉴딜 추진기반 마련

- 한국판 뉴딜의 실현·확산으로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결합하여 지역발전을 추구

※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10.13.)
한국판 뉴딜 160조원 중 지역 투자규모 75.3조원('21년 13조원) + 자체 뉴딜(α)

- 중앙-지방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행안부 주관 지역균형 뉴딜 분과* 운영(제1차 회의 개최, 10.29.)

* (분과장) 행안부 장관, (위원) 관계부처 실장급, 시·도 부단체장

○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1차, 14.5조원) 신속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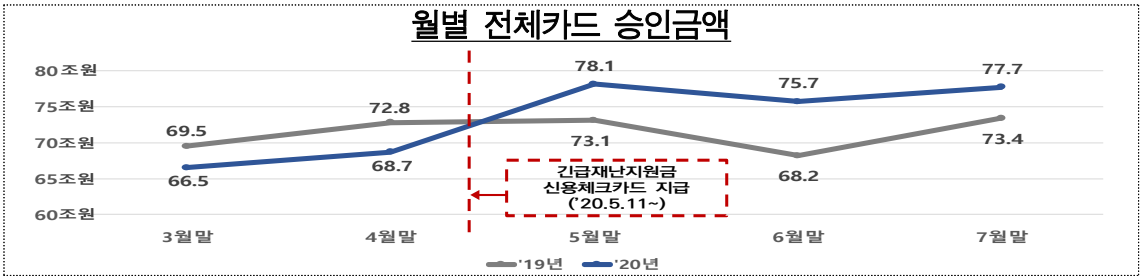
- 온라인 신청, 기존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등을 통해 예산 통과 후 한 달 만에 대부분 지급(4.30.~5.31., 94% 지급)

※ 美 블룸버그, 재난지원금 지급에 IT를 접목한 한국이 서류작업 위주의 일본에 비해 지급속도·효율성 면에서 탁월하다고 평가(韓日 모두 4.30.예산통과 / 5.19기준 韓 80%, 日 19% 지급)

- 지급 후 소비자·기업 체감경기지수 상승*, 카드사용액 증가**

* 소비자심리지수 : (3월) 78.4 → (4월) 70.8 → (5월) 77.6 → (6월) 81.8 → (7월) 84.2 → (8월) 88.2
全산업 업황BSI : (3월) 54 → (4월) 51 → (5월) 53 → (6월) 56 → (7월) 62 → (8월) 66 [한국은행]

** '20.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 222.5조원, 전년동기 대비 3.9% 증가 [여신금융협회]



○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환경·경제여건 변화 등 복잡·다변화되는 조세환경을 반영한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

○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추진

-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전 자치단체 배치 완료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원년의 성공적 시행과 지방세외수입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징수효율성 제고

- 명실상부 독립세로서 첫발을 내딤, 소득관련 조세 업무처리 기반 구축, 지자체·세무서 동시신고를 통한 민원편의 개선
- 세외수입 징수 효율화를 위한 분류체계 정비, 제도개선 등을 통한 관리체계 개선

○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단계적 축소 및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정기반 마련

- '20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12.4%(추계)로 법정감면율(14.3%) 달성

※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 '16년(14.6%), '17년(14.3%), '18년(13.9%), '19년(13.3%)

- 신설 감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일몰도래 감면에 대한 사후심층평가 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시 반영

○ 감면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법령 개정 추진

* 영농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자경농민 재촌거리 기준 완화(20km→30km),
재산세의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합리적 세정운영 제고 등(11건)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희망근로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안정 도모

- 지역 일자리책임관 회의*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정책 공감대 형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 극대화

  * '20년 국장급 이상 회의 주재 10회, 과장급 이상 회의 주재 4회

○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지방규제혁신 추진

- 지역 현장에서의 의견수렴과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지방 건의 규제애로 해소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매 출 증가를 도모하고, 부정유통 단속·관리로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 단위금고에 대한 적극적 관리·감독 및 경영평가 하위등급 금고 대상 컨설팅·경영개선요구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

○ 지방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력 총력대응 체계 마련

-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 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지방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 확대
- 지역과 함께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 및 경영평가 운영체계 개편

○ 지방공공기관 포용과 상생의 일자리 정책 추진

- 청년 신규채용*, 청년체험형 인턴** 등 청년 일자리 확대 적극 추진

  * (공사·공단) '18년 4.7%(2,451명) → '19년 5.4%(2,903명) → '20년 6.4%(3,510명)

  ** (공사·공단) '19년 266명 → '20년 216명 → '21년 500명(목표)

- 여성관리자 확대, 성평등 경영공시제 도입* 등 실질적 성평등 실현

  ※ (여성관리자 비율) '18년 6.9% → '19년 9.1% → '20년 10.6%

  * 지방공기업 성별 경영공시 항목 추가(임금, 채용) 및 통합공시기준 개정

○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및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제도개선

- 맞춤형 지방공공기관 설립·인사 지원, 제도개선 과제 적극 발굴
-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참여 제도개선 TF 상시 운영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으로 지역 역할 강화 및 지방 자율성 확대

○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의 신뢰받는 유능한 정부 구현 기여

○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고용상황 회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업의 신속·확대 추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극대화 등 지역경제 지원 대책 추진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16**	**4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Ⅳ.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추진한다.		①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1. 지방재정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한다.		① 재정분권 관련 법령 개정
	①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제도개선 및 재정분권 추진	①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령 개정(50%)
		②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제도개선(30%)
		③ 투자심사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20%)
	② 지역균형 뉴딜 성과 조기창출 지원	①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사업 지원 건수(100%)
	③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등의 관리체계 개선	① 하위법령 마련 등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제도개선(40%)
		② 광역-기초 간 합리적 경비부담 기준 개선(40%)
		③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20%)
	④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 및 경제위기 대응 운영	① 지방교부세제도 혁신 추진(60%)
		②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교부세 적시 집행(40%)
	⑤ 2021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	①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률(60%)
		②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회계계약제도 개편 추진(40%)
2. 지방세 제도 및 세정운영 개선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① 지방세입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추진
	① 지방세 제도개선·운영을 통한 지방세입 기반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① 지방세 공통 기본사항 등에 관한 제도 및 운영 개선(30%)
		② 지방세 체납징수제도 개선 및 운영 실적(3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③ 자주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지원(30%)
		④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 이행 및 지방세 소송지원 실적(10%)
	② 부동산세제 개선을 통한 과세 형평성 제고	① 취득세·재산세 등 제도 및 운영 개선(40%)
		②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혁신(30%)
		③ 지방 세정운영의 체계적 관리(30%)
	③ 지방소득세·지방세외수입의 신고 및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세입확충	①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설치율 (30%)
		②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모바일 안내문 발송(30%)
		③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관리효율화(40%)
	④ 지방세 특례의 합리적 재설계	①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40%)
		②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사후심층평가 실적(30%)
		③ 현장 중심의 지방세 감면 제도 개선 추진(30%)
3.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①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회복 지원 실적
	①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회복 지원	① 지역일자리 창출 실적(50%)
		② 지역 우수 시책·사례 발굴·확산 실적(20%)
		③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노력도(10%)
		④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20%)
	② 현장 고충 해결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① 지방규제혁신 과제 중점 추진 건수(50%)
		② 민생규제혁신 과제 개선 건수 (30%)
		③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실적(2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③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	① 지역사랑상품원 판매활성화 및 부정유통 단속 강화(40%)
		②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30%)
		③ 새마을금고 경영실태 평가 1,2등급 금고91% 이상 및 하위 등급 금고의 경영 개선 노력(20%)
		④ 착한임대인 새마을금고 적금 가입 실적(계좌수, 납입액)(10%)
	④ 지방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력 총력 대응 체계 마련	①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30%)
		②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역할 확대(30%)
		③ 지역과 함께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20%)
		④ 지방공기업 역할 강화를 뒷받침하는 경영편가 운영(20%)
	⑤ 지역사회와 상생, 성장하는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① 청년채용,, 여성관리자 확대 등 일자리 정책 추진(35%)
		② 지방공공기관 공공성,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설립·운영 지원(35%)
		③ 지방공공기관 재정집행 제고 및 경영 투명성·신뢰성 강화(30%)
4. 지방재정세입정보화로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대국민서비스를 혁신한다.		①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 세스템 구축 추진
	① 지방재정 정보화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투명성 확대	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80%)
		② 현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20%)
	② 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혁신 및 세입확충	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추진(50%)
		②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30%)
		③ 현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20%)

전략목표 Ⅳ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추진한다.

(1) 주요내용

□ 과제개요

○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으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

○ 지방세입 기반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 고용·소비 축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시스템 혁신

□ 추진계획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

○ **(코로나 위기 극복)** 적극적 추경 편성으로 확장적 지방재정 운용 지원

○ **(2단계 재정분권)** 지방재정 자율성·책임성 제고 및 균형발전 기반 마련

○ **(지역균형 뉴딜)** 지역균형 뉴딜 적합성* 기준을 고려하여 대표 사업·창의적 사업 발굴로 지역균형 뉴딜 확산

*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신신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효과성, 계획의 구체성

○ **(지방교부세 개편)** 국가적 시책에 반응할 수 있는 교부세 체계 구축

○ (**지방재정 관리체계 혁신)**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사업별 관리체계 확립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선

<지방세입 기반 강화>

○ **(세입 확대 추진)** 대기오염·사고위험 등 외부불경제 발생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및 지방세입 체납징수 강화

○ **(납세자 권익 증진)**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지속 활성화 추진 및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강화

○ **(부동산세제 혁신)** 지방세 과표 운영체계 합리화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운영 개선

○ **(지방세 특례의 합리적 재설계)** 법정 감면목표 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세 지출 효과성 제고

※ 예비타당성 조사·사후심층평가 등을 통한 지방세 감면 심사·평가체계 내실화 추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일자리사업 추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청년 고용역량 향상 지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확대

○ **(지역경제 회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확대 및 내실화, 상생문화 확산 지원을 통한 지역 상권 회복지원 등

○ **(규제개혁 추진)** 자치단체 법규 정비를 통한 생활 속 규제 완화,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대상 확대 및 현장 소통 강화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시스템 혁신>

○ **(지능형 지방재정 구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능형·능동형 지방세입 환경 구축

○ **(세무행정·서비스 혁신)** 지방세 데이터 통합관리 및 과세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으로 국민 맞춤형 편의 세비스 제공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8	'20	'24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100%)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00	지방재정 자율성·책임성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 마련(정성평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실적 (정성평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실적 보고서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지역경제 흐름을 실시간 주시하고,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 지역경제 회복 지원 대책 마련 시 관계부처·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지속 추진

성과목표Ⅳ-1 지방재정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 지원

○ **코로나19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 지원

- 코로나19 지속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 추경 편성** 독려로 **확장적 지방재정** 운용
-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투자사업, 보상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국외연수, 반복적 보조금 등) 구조조정 후 코로나 대응 등 현안 활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회계 간 **여유재원의 예탁·예수** 적극 활용하여 탄력적 재정 운영 독려

□ 2단계 재정분권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 재정확충**을 지원

-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국가-지방 간 합리적 **기능 재조정**
- 1단계 재정분권 추진결과 분석을 통한 **제도적 보완 병행*** 추진

  *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보완 등으로 기초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광역 간 형평성 제고

-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기존 국고보조사업(3.6조원)의 보전기한('22년) 이후 관리방안 마련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정부안) 마련(6월) → '22년 시행 목표로 추진

< 2단계 재정분권 추진현황 및 계획 >

- 자치분권위 주관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 구성·운영('19.9월~)
- 총 19회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 관계부처 최종 조율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21년 방안마련, '22년 시행**

□ **지역균형 뉴딜 추진**

○ 한국판 뉴딜 성격에 부합하는 **창의적 지역사업을 발굴**하고, **행·재정적 집중지원**을 통한 조기 성과 창출

- 지역균형 뉴딜 적합성 기준*을 고려하여 **대표사업·창의적 사업 발굴로 지역균형 뉴딜 확산**

*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신신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효과성, 계획의 구체성

- 행·재정적 지원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하고 현장중심의 규제·애로사항 등 **제도개선 과제 지속 발굴**

- 대표사업 선정 후 지역주민 입장에서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인지도 향상 추진

□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용**

○ 예비비 관리 철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활용 등 계획적 재정운용

○ 분석범위 확대, 재정계획성 지표 도입 등 재정분석 전면 재설계

※ 전년도 결산중심 분석에서 탈피, 당해 연도 재정운용현황 분석을 위한 개선 방안 검토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검토 및 자치단체 컨설팅 확대 실시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지방재정 운영 강화

* 주민자치회 등 지역주민 대표기구 활용, 자치단체 컨설팅단 운영 등

○ 지역균형 뉴딜,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시책에 즉 반응할 수 있는 교부세 체계 구축

○ 경제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연말 집중집행 관행 개선, 이월·불용 최소화** 등을 위한 **전략적인 재정집행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재정분권 관련 법령 개정		신규	100	100	· 재정분권 관련 법령 개정	개정안 마련	재정분권 관련 법령 개정안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재정분권 관계 기관 간 협의·조정 애로에 따른 정책 시행 지연 우려

- 지방세 확충액, 기능이양 규모, 기초연금 부담완환 방안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및 **공조체계 구축** 필요
- 과제의 취지·필요성·시급성 등 **관련 논거를 보강**하는 동시에, **수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전략 모색

○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침체 상황에서 **민간소비 위축을 보완**하고 **경기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추진 필요**

(4) 기타 : 해당없음

성과목표Ⅳ-2 지방세 제도 및 세정운영 개선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o 지방세 제도개선·운영을 통한 지방세입 기반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주민공모 및 다양한 지방세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개선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

-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집행을 위해 제도개선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추진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 마을세무사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활성화 추진

o 부동산세제 개선을 통한 과세 형평성 제고

- 조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취득세·재산세 등 제도·운영 개선 및 지방 세정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통일적 운영 추진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의 혁신으로 과세대상의 적정가치 평가를 위한 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의 합리적 개편 추진

o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성공적 안착과 독립세 인식 강화

- 시각적 디자인을 활용한 홍보 다양화를 추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성공적 안착과 독립세 인식 강화
- 국세청과 협업을 추진하여 과세자료 연계 확대 등 비대면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간편 전자신고 환경 구축

o 지방세외수입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징수효율성 제고 기반 마련

- 중복·유사 세입과목 통폐합* 등 관리체계 정비 추진

* '21년 통·폐합 수요 파악 및 정비 추진(기존 2,226종 → '20년 1,980종 정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적용범위를 과태료까지 확대 추진

o 지방세 특례의 합리적 재설계

- 법정 감면목표 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세 지출 효과성 제고

-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재설계, 예비타당성 조사·사후심층평가 등을 통한 지방세 감면 심사·평가체계 내실화 추진

□ 전략목표와의 관계

o 지방세 운영 역량 강화, 납세자 신뢰성 제고, 합리적 지방세 감면 관리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경쟁력 제고 추진

-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영된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납세자의 수용성 제고

- 영세납세자 등의 세금 고충 해결 및 지원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 증진

- 독립적 신고체계 구축으로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정책수단 활용 기반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지방세입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① 지방세기본법, ② 지방세징수법, ③ 지방세법,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00	100	100	100	지방세 제도 및 세정운영 개선사항을 반영한 지방세입 관련 법률과 그 하위법령의 개선을 목표로 설정	①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의 국회 제출 (각 법률 당 15점) ② 지방세입 관계 법률 시행령의 법제처 제출 (각 시행령 당 5점)	이행 실적 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 주민 주도의 세제 개편으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납세환경 조성
-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
- 징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조세정의 확립 및 지방세입 기반 강화
- 국세·지방세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간편 전자신고 환경 구축으로 납세편의 제공
- 지방세외수입의 종합적 징수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감면 제도 개선

약점(Weakness)

- 공정과세에 대한 관심 증가로 소송 등 지방세 불복절차 지속 증대
-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세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내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의 반발 예상
- 민원처리 인력 부족 등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소요 시간 증대 등 납세자 불편 사항 발생
- 지자체신고 제도의 홍보 부족 등으로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인식 부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제한적 적용 범위로 체납처분 실효성 미흡
- 세제지원이 필요한 국가정책 목적과 감면 정비 목적(지방재정 확충)간 상충

기회(Opportunity)

- 문재인 정부의 조세분야 국정과제*와 방향이 일치, 추진 동력 확보

  *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정 구축'

- 납세자, 민간 조세전문가 등의 지방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으로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및 지방소득세제 운용 기틀 마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과 체납징수 강화요구에 따른 기반마련
-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 및 관계부처간 협력 필요성 증대

위협(Threat)

- 납세자보호관, 지자체 선정 대리인 등 납세자보호제도에 대한 납세자 이해 부족
- 지방세 제도개선에 따라 국민 세부담 증가시 조세저항 우려
-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소득세 납부율 감소가 예상됨
- 세외수입에 대한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협의, 개별법(6백여개)의 난립 등 업무 난도가 높음
- 감면 정비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관계부처, 기득권자 등)의 반발 우려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방안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Ⅳ.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추진한다.		
2. 지방세제도 및 세제운영 개선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지방세 미납부로 인해 과세형평성에 대한 불만 초래 • 그간 지자체 세정행정이 과세권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	• 전국에 분산된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지방세 조합 설립 및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추진,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정과세 분위기 조성 노력 • 주민제안 공모, 세제개선안 마련 시 민간전문가 참여,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분위기 조성 노력
	•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집단의 강한 반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일반 여론 및 언론의 부정적 인식 우려 • 협업 추진시 기존 부처간 이기주의 재현으로 부진 우려	• 자치단체, 학계 등과 협업하여 과세자주권 확대 및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합리적인 세제개편안 도출 및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지자체, 관계기관 등 적극적 참여를 통한 의사소통 강화 추진
	• 신고제도 변경에 대한 대국민 홍보 부족과 코로나로 인한 납부율 감소 우려 • 개별 지방세외수입 세목의 부과징수 절차는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상충 및 관련 부처간 협의 곤란	• 감염병 확산방지 및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전자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SNS, 유튜브, 웹툰, 지역신문, 지역지, 마을버스, 지자체 홈페이지 등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홍보물을 제작 배포. 홍보물은 알기 쉽도록 시각적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납세자 불편 최소화 • 지방세외수입의 종합적 관리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 의견수렴 및 정책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해 부처간 이견 조정
	• 국가정책 목적의 세제지원 필요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감면정비 추진 등으로 업무 간 상충 발생	•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입기반의 악화 및 법정 감면한도, 지방재정 수요 증가 여건을 국회,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에게 적극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등을 통해 신규·기존 감면수요에 대한 충분한 대응 논리 마련

(4) 기타 : 해당없음

성과목표Ⅳ-3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고용상황 회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업의 신속·확대 추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극대화 등 지역 경제 지원 대책의 원활한 추진

※ 코로나19 영향의 전개 상황에 따라 대책의 내용과 시기를 고려하여 추진

○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중앙-지방 간 긴밀한 소통채널 유지 및 상호 협력, 지역 우수 시책·사례의 발굴·확산

○ 지역 및 기업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 부처협의 등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고, 주요 현안 규제에 대하여 지역 주민·기업·지자체 등에서 적극 참여하는 규제혁신 활성화 지원

○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확대하여,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 소득 창출 및 자영업 매출 증가 효과 기대

○ 새마을금고 관리 · 감독 강화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

○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매뉴얼 마련 및 면제제도 운영, 규제 혁신 등 적극행정 추진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 뒷받침

○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지방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

○ 청년 의무고용, 여성관리직 대폭 확대 등 지방공공기관의 포용과 상생을 우선시하는 일자리정책 추진

(2) 성과지표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0년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th></tr>
<tr><th>'17</th><th>'19</th><th>'20</th><th>'21</th></tr>
<tr><td>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회복 지원 실적(만명, %)</td><td></td><td>7.7</td><td>33.65</td><td>4.4</td><td>- 지역방역일자리사업 0.8만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6만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0.95만명
* 2021년 계획인원을 적용하되, 2021년 추경으로 추진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은 추경 확정 시 계획인원을 목표치로 적용</td><td>·지역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실적 (50%)</td><td>시·도별 취합자료</td></tr>
<tr><td></td><td></td><td></td><td></td><td>상품권 판매액 18조</td><td>- 상품권 판매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35% 증가한 18조 판매 목표 설정
<최근 3년 상품권 판매 실적>
(단위:억원)
<table>
<tr><th>'18</th><th>'19</th><th>'20</th></tr>
<tr><td>1,264</td><td>31,812</td><td>133,216</td></tr>
</table></td><td>·시도에서 취합한 지자체별 판매실적, 부정유통 단속반 운영 실적 및 조치율 (50%)</td><td>매월 자치단체 상품권 발행·판매 실적 조사, '21.3월 전국 일제단속 실시 및 실시결과 취합, 취합된 건에 대한 지자체 조치결과 관리</td></tr>
</table>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및 행·재정적 전폭 지원 • 규제혁신을 통한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대한 중앙-지방 간,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지역사랑상품권의 즉각적인 지역소비 창출, 지역 내 소비 유도 및 가맹점 매출 증대 • 지역사회 밀착형 서비스 기관으로 주민의 접근 및 정책참여 용이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 보유 • 지역경제 한 축인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행 유도 가능	•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우려에 따른 사회활동 제약과 고용불안 확대로 지역 경제 조기 회복에 상당한 기간 필요 • 일자리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역량 관련 지자체별 편차 존재 • 각 부처의 규제개선 수용률이 낮아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 저하 우려 • 오프라인 위주의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형태가 온라인 소비 형태와의 편차 발생 • 새로운 지역금융제도의 도입에 대한 지자체별 온도차 존재 • 국가·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공공기관의 특성상 국정과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데 한계 • 지방공공기관간 규모·예산 등 경영여건 편차가 커 관련 제도의 일괄적 적용이 어려움 • 지방공기업의 정원,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음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 차단 및 지역 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총력 대응 •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의 자율성 확대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강한 의지 • 규제정부입증책임제도 도입으로 기존 규제정비 논의 활성화 •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으로 경기침체 조기 극복 • 지역주민·시민사회의 정책참여 의지 및 역량 증대 • 과거에 비해 지방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해짐 • 지역주민·시민사회의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참여 의지 및 역량 증대 • 지방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및 채용 비리 근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간 이동 제약과 확산국가 내 주민의 외부활동 및 산업활동 축소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급격한 위축 초래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대외경제 불안으로 국내외 경제성장 둔화 예상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계층 등 고용충격 심화 예상 • 규제 해소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갈등 해소의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대형기업들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청 확대 • 일부 단위금고의 비위, 갑질 등으로 전체 새마을금고 신뢰도 저하 •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향후 예측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피해기업이 될 우려 • 주민,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다수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요인 잠재 • 결원부족, 사업영역 확대 곤란 등 신규사업 발굴이 어려워 고용확대 한계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방안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Ⅳ.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추진한다.		
3.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대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방 간 소통 부족 및 세부 정책 추진 상 이견이 발생할 우려	▪ 시·도 경제국장 회의 등 중앙-지방 간 긴밀한 소통채널 유지를 통해 상호 협력 및 정책 공감대 형성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기반 마련
	• '21년 일자리사업은 '20년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업 규모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단절 상실감이 큼 * 20년 대비 31.5만명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공백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 등 협의를 통해 일자리 추경 편성 노력
	• 규제 해소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갈등 해소의 어려움	▪ 지역주민·기업 등의 규제애로 발굴·해소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 등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참여 보장 및 갈등 해소
	• 코로나19로 인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 악화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전사적 대응으로 경영평가 부담 가중	▪ 지방공기업 재무영향 예측·분석 및 지방공기업 의견 수렴 등 경영평가 적극 반영 및 개선 추진
	• 여성관리자 확대와 관련한 역차별 우려	• 여성관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유도,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인사기준 마련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Ⅳ-4 지방재정세입정보화로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한다

(1) 주요 내용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재원의 보다 효율적 관리 및 업무혁신**

○ **(지방재정 업무혁신)** 업무 간 정보 연계로 종합적 재정관리체계 구현 및 지방보조금 운영 전반을 전자화하여 중복·부정 수급 근절

○ **(주민맞춤형 서비스)**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플랫폼 구현, 지방보조금 신청-정산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보조금 포털 구축

○ **(스마트시스템 구축)** 클라우드·블록체인·AI 챗봇 등 최신기술 기반의 스마트시스템 구축과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로 효율성 및 보안성 확보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납세편의 및 지방세정 역량 제고**

○ **(세무행정서비스 구현)** 세목별 부과·징수·체납 등 지방세 세무행정 전면 재설계·구현, 스마트 현장행정 등 세무행정 지원서비스 설계·구현

○ **(대민서비스 구현)** 납부자 중심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전면 개편, 핀테크,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의 납부 편의 서비스 제공 등

○ **(지방세 데이터 통합 및 관리체계 마련)** 전국 자치단체 분산된 데이터 통합 및 공동활용 체계 마련 등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 세정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 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50%)				100	주민맞춤형 업무서비스, 지방재정 업무혁신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율	이행 실적 자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50%)				100	대국민서비스 개선, 지방세정 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율	이행 실적 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강점(Strength)

- 3대 재정(국가·지방·교육) 시스템간 범국가 재정정보 공유·활용
- 빅데이터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조세 신뢰도 제고 및 지방세정 역량 강화
- 통계산출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지원 확대

약점(Weakness)

- 재정시스템의 재정활동 全 단계에서 필요 정보 단절, 통계업무 수작업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 시스템 노후화('08~)로 인한 보안 취약성 등 심각
- 지방세정보시스템은 납세편의 제공, 세무행정 지원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나, 노후화('05년 구축)로 인해 잦은 장애와 신규서비스 도입 불가 등 한계 봉착

기회(Opportunity)

- 수기 관리되는 지방보조사업관리를 전자화하여 중복·부정수급 근절
- 전국 자치단체 분산된 데이터 통합 및 공동활용 체계 마련
- 납부자 중심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전면 개편

위협(Threat)

-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지자체 반발, 민간에서 개발한 개별·특화시스템 업체의 반발
- 차세대 정보화 사업의 수요 과다로 사업자선정 공고 모두 무응찰 등 착수시기 지연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전략목표 Ⅴ	국민과 함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 **성과목표 1 : 안전정책 총괄 ·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 **성과목표 2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대책을 수립 · 추진한다.**
- **성과목표 3 : 지속가능한 예방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성과목표 1] 안전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들의 안전한 사회에 대한 기대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적으로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이 필요

○ 각 부처별로 개별 관리되는 안전기준의 통합과 불합리한 안전제도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수준의 격차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 행안부가 주관하여 재난안전사업 예산을 평가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 투자 환경 형성(`18년~)

* 인명피해 다발사고 등 대형피해 우려 분야를 중심으로 범정부 재난안전 예산 및 국가예산 대비 재난안전예산 비중 증가 추세

▷ ('17년) 14.3조 → ('18년) 15.2조 → ('19년) 15.9조 → ('20년) 17.5조 → ('21년) 20.6조
('17년) 3.57% → ('18년) 3.54% → ('19년) 3.39% → ('20년) 3.40% → ('21년) 3.69%

○ 재난안전산업은 공공성이 강한 산업으로, 재난 안전 제품·기술의 구매자와 이로 인해 직·간접적 수혜자가 상이하여 체계적 육성 필요

* 재난안전산업 관련 매출 총액 중 공공기관에 대한 판매비중은 18.7%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재난안전 분야 접목으로 신시장* 출현

* AI 활용 비대면 보안, 계측·측정·분석 빅데이터, IoT활용 원격안전관리, 재난드론 등

◇ **그간의 성과**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기별 재난안전정책 적극 발굴 및 시행
*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등 총 5회 개최, 안건 24건 논의

○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지역안전관리단」 설립 추진
* 지자체 재난안전조직의 인력 및 전문성 보강, 위험시설 상시점검, 재난 발생 시 적기 대응 등을 위한 지역안전관리단 시범지역 확정(20. 10월, 7개 시·군·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합리적 운용을 위한 법률자문단 운영 및 재난안전법 연혁집* 발간
* 법 제정 이후('04년) 이후 개정사항을 연혁적을 정리한 자료집

○ 부처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기술적 안전기준 310건 신규 발굴 및 등록(누적 1,638건) 등 범정부 안전기준 통합 관리 확대

○ 제도적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안전제도 개선* 추진
* 일선 현장 불합리한 안전제도 개선(81개 과제), 유형별 심층분석에 따른 안전제도 개선(안전제재 등 3개 분야 77개 과제) 등

○ 다부처 관련 재난·사고에 대한 정부합동 재발방지 대책* 마련(3개 분야)
* 출렁다리 안전관리,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물류창고 화재안전대책 등

○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4년)」 수립을 통하여 범정부 정책방향 설정
* 사망자 감축 목표 제시 : ('18년) 28,040명 → ('24년) 16,302명(△41.9%)

○ 범정부 재난안전사업 예산 투자 확대*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시·도의 소방·안전 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지원**
* '17년 14.3조 → '18년 15.2조 → '19년 15.9조 → '20년 17.5조 → '21년 20.6조
** '20년 소방안전교부세 6,851억원 지원(사업비 3,533억, 소방인건비 3,318억)

○ 재난안전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발의('20.11.24, 서영교 의원) 및 산업 생태계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재난안전기업 기술·제품 발굴 및 보급을 위한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 및 방재신기술 지정제도 정착

* 우수제품지정 심사 가점(6.17, 조달청) 반영 및 지자체 수의계약(7.14, 행안부) 등 인센티브 마련

○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사전 화상상담회, 온라인 전시관 등의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한 박람회 개최로 기업 해외 판로 개척 및 성과 창출

* 참가기업(411개사, 1,027제품전시), 방문객(총461,819명), 해외바이어(28개국 86명), 상담건수(495건), 상담금액(515억), 계약예정금액(102억)

[성과목표 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한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체적 취약 특성으로 인해 노인·아동·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 증대

※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15년) : 노르웨이 1.1명, 영국 2.0명, 한국 2.8명

※ 노인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19년) : 노인 100.0명, 전체 25.4명

○ 차량 중심의 법·제도 및 속도관리, 운전자의 보행자 배려·보호의식 부족으로 사망자 중 어린이, 노인 등 보행 사망자가 큰 비중 차지

* 횡단보도·교차로,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 보행자 안전 보장 미비(도로교통법)

** 위험운전 경험률 : 졸음(71%), 난폭(70%), 신호위반(53%) 등(교통안전의식 설문, '17.11월, 교통안전공단)

○ 반복적인 재난안전사고의 발생으로 개인의 안전의식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국민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및 '20년도 시행계획 수립·추진

○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로 승강기 운행대수 매년 증가*, 장기사용 승강기(15년 이상 사용)** 운행 비율 증가로 사고 발생 위험성 존재

* 국내 승강기 운행대수 약 74만대(세계 8위), 신규 설치대수 연 평균 4만대(세계 3위)

** 전체 74만대 중 22.8만대, 30.5%

◇ **그간의 성과**

○ 국민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확대

- '4대 불법 주·정차*'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주민신고제 도입 등 집중 관리

  * ①소화전 주변 5m, ②교차로 모퉁이 5m, ③버스정류장 10m, ④횡단보도 위

- '우리집 안전환경 점검하기*'등 국민의 자율 안전점검 문화 조성

  * 가정통신문을 활용, 가정에 안전점검표 배부 및 '안전점검 인증샷' 온라인 이벤트 등 추진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육인프라 확대 및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 '19년까지 512개 콘텐츠개발·보급 → '20년 85개 추가

  ** ('19년) 8개 시·도(36개 시·군·구) 89,080명 → ('20년) 10개 시·도(18개 시·군·구) 26,521명

  ※코로나19로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지역만 교육 운영

○ 주민 일상생활 속 안전인프라 정비

- 회전교차로 확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생활권 도로의 안전성 제고

  * 국비 2,511억원 투자, 9,570곳의 위험 요인 해소(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94, 회전교차로 설치 8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39,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8,939)

- 초등학교 보도·보행로 확충* 및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관계부처 합동) 등 어린이 안전 위협요소 정비

  * 학교 앞 보도 없는 구간 보도·보행로 조성 935개소 (87개소는 학교부지 일부 활용)

  ** 초등학교 주변 교통·식품·제품안전 분야 및 유해환경·불법광고물 일제 단속·정비

- 승강기 안전인증제* 도입으로 안정성 높은 국산 부품 비율 증가 및 신속한 부품 공급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승강기 관리 기반 마련

  * 승강기 설치·판매자는 설계심사, 안전성 시험, 공장심사를 거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제 도입 전 승강기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도입 후 국산 부품 비율 크게 증가

구 분	종전('17.1.~'19.2.)			현재('19.3.~'20.9.)			비 고
	국산	수입	합계	국산	수입	합계	
승강기 부품	93 **(23.7%)**	300 (76.3%)	393	765 **(64.3%)**	425 (35.7%)	1,190	**국산 40.6%p 증가**

[성과목표 3] 지속가능한 예방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일상 속 안전사고와 재난의 유형이 다변화함에 따라, 사고 발생 전에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정부와 국민 노력의 중요성 대두

-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 추진에도 안전사고 관련 국민 인식 부족
-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 기업 등의 재난시 기능유지 중요성 확대

○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의 증가, 지자체별 재난 취약점의 발생에도 통합적 재해예방체계의 구축 미비로 반복적 피해발생

- 자연재난 피해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의 분절적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재해예방사업 추진

○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재난 취약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보다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복구위주 운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

- 계획 수립시 지역별 지형적·기상학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부족
- 재해영향평가 진행에 따른 이행력의 부족으로 확인·점검 강화 필요

◇ **그간의 성과**

○ 민간(국민, 기업)이 주도하는 생활속 안전 위험요소 저감 및 예방역량 개선

- 불법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정착을 통해 위반율 감소(28.8% → 14.8%)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기업 확대('19년 9개 → '20년 149개)

○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주민체감도 제고

- 기존 부처별 단위시설 정비사업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통합 시행 확대('19년 5개소 → '20년 20개소)
- 취약지 사유시설(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 확대('19년 2개소 → '20년 4개소)

○ 기후변화 등 재난안전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기반 조성

- 지자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지속 추진 및 세부수립 기준 개정
-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 활성화('20년 4,799건 협의)로 재해 예방 기여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V	1	3	5	10	3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V. 국민과 함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① 국민안전의식 조사결과
1. 안전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① 통합적 안전정책 협의 구성 및 추진
	① 국민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① 안전정책 협의체 운영
		② 재난안전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③ 핵심추진업무 공유를 통한 협업성과 창출
		④ 안전정책 대국민 홍보
	② 안전기준 및 긴급신고전화 관리체계 강화	① 불합리한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 총괄 조정
		② 주요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 과제 이행률
		③ 유도선 현장관찰활동 개선 및 시정사항 발굴건수
		④ 긴급기관간 신고 연계서비스 확대·개선 및 정책 홍보 실적
	③ 재난안전 예산의 총괄·조정 및 지원	① 재난·안전예산 확보율
		② 재난 안전예산 사전협의 반영율
		③ 재난안전사업평가 미흡등급사업 개선계획
		④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 컨설팅
	④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① 재난안전기술제품 상담건수
		② 재난안전산업 지원 기업 만족도
		③ 재난안전 기술 및 제품 보급 지원 활성화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한다.		① 생활안전문화 의식개선 역량 강화
		② 생활안전 문화 확산 홍보
	① 지역교통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①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전·후 교통사고 감소율
		②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대국민 홍보
		③ 국민 안전신고 참여 건수
		④ 안전신고 현장점검 개선조치율
	② 국민 안전의식 개선 및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활성화	① 안전문화 교육 정책 수립 건수
		②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만족도
		③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건수
		④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참여율
	③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강화	① 승강기 1만대당 안전사고 피해자수
		② 승강기 사고예방 노력도
		③ 승강기 산업 일자리 창출
3. 지속가능한 예방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① 지역안전 담당자 만족도
		② 재해예방사업 여름철 안전 점검율
	① 예방안전 정책 및 서비스 강화	① 안전보안관 공익신고 실적
		②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률
		③ 안전정보통합 DB구축률
		④ 생활안전지도 사용자 만족도
	② 재해위험지역 점검·정비를 통한 재난피해 경감	① 재해위험지역 정비 실적
		② 재해위험지역 개선율
		③ 재해예방사업 정비사업 주민만족도
	③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사전 예방대책 강화	① 자연재해저감대책 추진율
		② 재해영향평가 협의이행 정비율
		③ 우수저류시설 지적사항 조치율
		④ 방재종사자 교육 수료실적

전략목표 V 국민과 함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1) 주요내용

□ 안전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

○ 재난안전정책 조정회의체 운영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주재 : 국무총리)의 간사 부처(행정안전부)로서 회의 운영 전반 총괄·조정·지원

  *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총괄 조정·논의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주재 :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

  * 국민이 위험을 느끼는 안전 분야 관련 대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관계 부처 및 일선 현장의 의견을 안전정책에 반영

- 지자체 재난안전 혁신 이슈 및 정부정책에 대한 논의 등을 위한 시·도 재난안전실장회의(주재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운영

  * 재난 대응 및 안전정책 수립에 있어 중앙·지방간 원활한 협력 추진

○ 정부 안전기준 관리 강화 추진

- 전 부처 소관 안전기준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규제 적합성 검토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안전제도 체계 구축

○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조기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재난안전사업·예산의 총괄관리체계 구축

- 내실있고 실질적인 재난·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안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지원 및 발전방안 마련

- 각 부처에 산재된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사전협의하여 재난안전예산 편성 시 활용

○ 재난안전 분야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자체별 재난안전예산 규모 파악 및 유형별·재원별 분석* 등을 통해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관리체계 구축**

* 지자체별 재난안전사업 현황, 예산 규모 및 변화추이, 지자체간 예산 비교 등

** 중앙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평가를 실시 중이나 지자체 등은 관리체계 부재, 재난안전법 제10조의4(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등) 신설로 '21년 시범운영 실시

○ 소방안전교부세의 효율적 운영

- 소방분야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집중투자(75%)하여 지자체의 노후·부족 소방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개선

- 소방안전교부세(담배 개별소비세의 20% → 45% 확대) 인상분*에 대한 지자체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건비로 우선 충당(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20.4.1.시행)

○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추진

- 체계적인 재난안전산업 육성 전략으로 중소기업의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및 제품 수출 지원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대책을 수립·추진

○ 사람중심의 보행자 안전 및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교육·제도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39개소, 122.5억원)

* 보도 신설, 보·차도 분리, 횡단보도 설치, 차로폭 축소,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등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646개소, 323억원)

  * 교통안전표지,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 시설개선

-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8,859개소, 1,665억원)

  * 신호등(3,330개소), 무인단속카메라 (5,529개소)

-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217개소, 70억원)

  * 보호구역 표지판, 노면표시, 일방통행 지정, 과속방지턱, 보도 등 시설 개선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375개소, 331억원)

  * 차로 정비, 중앙분리대·CCTV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 교통·안전사고 줄이기 대국민 홍보·캠페인 및 유공자 포상

○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 추진

- 제1차('22~'26)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국비지원 사업 추진

-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등) 맞춤형 안전대책 이행상황 관리

- 어린이 안전 우수시책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어린이 안전대상' 운영

○ 안전신고 활성화로 생활 속 위험요소 개선

- 위험 개선효과 높은 신고 선정·포상 및 계기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신고처리 미흡기관 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 신기술 탑재로 신고 편의성 개선 및 자동분류 기능 강화

○ 민·관 협업을 통한 생활 속 참여와 실천의 안전문화 활동 전개

- 안문협 등과 함께 일상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을 스스로 찾아서 정하고 실천하는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추진

- 안전문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유도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제도적 기반 및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 안전교육기관 확대 지정, 안전교육 전문인력 추가 등록·활용을 통해 안전교육 활성화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안전교육 교재 개발·보급 및 국민 안전실천역량 진단체계 개발 및 시범조사 실시

○ 승강기 이용자 보호 및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 수립·운영

- 승강기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안전점검 추진
- 승강기 이용자과실 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안전산업 진흥' 근거 신설로 승강기 산업 활성화 적극 추진

- 승강기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개최
- 승강기 안전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실시

□ 지속가능한 예방안전 체계 구축

○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 근절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중점 개선과제 선정하여 대책 지속 추진

○ 예방안전 정책의 지원과 대국민 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위해 유형별, 기관별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기업활동이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BCM) 수립 기반 마련

○ 재해예방사업의 조기 추진을 통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으로 예방사업 발전 추진

○ 대규모 풍수해 대비, 부처별 시행하던 정비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하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통합 추진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각종 개발에 따른 재해 유발 요인의 저감방안 검토

○ 각종 개발에 따른 재해 유발 요인의 저감 방안 검토와 이행 확인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력 제고

○ 재난안전 예방역량 강화를 위해 방재종사자들의 전문성 함양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Ⅴ, Ⅵ, Ⅶ은 공통지표 활용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국민안전의식 조사결과(점)	2.71	2.71	2.80	2.70	2.84	2.92	- (조사목적)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추진이 국민들의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조사결과는 재난안전정책 추진에 반영 - (조사대상) 일반국민 8,000명, 전문가 800명 - (조사항목)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안전체감도 * 항목별 5점 측도로 산출 - ('25 목표값) 최근 5년간 국민안전체감도 평균값 2.75, 연평균 증가율 1.2%을 감안, '25년은 2.92로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2.75(사회안전체감도) × 1.2% × 5년 = 2.92 • 5년간('16~'20) 사회 안전체감도 평균값: 2.75 •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2% • 측정연도('25년): 5년	전문조사기관에서 반기별로 실시한 조사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안전정책의 총괄 및 협업 구성에 대한 체계 확립과 효과적 운영 방안 수립 • 생활안전정책 관련 중앙부처·지자체·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추진	• 자연·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역량 집중으로 예방·대비에 대한 안전정책 구현의 어려움 • 조직 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장기적 정책 수립의 연계성 저하 •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사고원인과 대책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 • 국가 정책적인 사항에 반영되어 각 부처별 협업 중요성 부각	• 과학 기술의 발전이 점차적으로 빨라짐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어려움 • 복잡해지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이해 관계성 혼란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Ⅴ. 국민과 함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 범정부 안전정책조정기구가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안전사고 반복 • 각 부처별 안전기준에 대한 사항이 상이하여 동일한 대상임에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등 혼선이 발생 • 안전정책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 기관장의 관심도, 지자체의 재정력 등에 따른 내외적 제약요인 발생 • 국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	• 반복되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실효성이 있고 근본적인 개혁과제 도출을 위한 T/F 구성·운영 • 전 부처 안전기준 전수 조사 및 안전기준 DB확보를 통한 통합관리로 원채널 형태의 기준안 마련 •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 등을 통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 안전정책의 공감대 형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새로운 보행자 안전 확보 시책 추진과 안정적 교통안전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예산 확보·지원 노력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Ⅴ-1 안전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국민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 ㅇ 안전정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협의체 구성 및 조정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
- ㅇ 재난안전법과 관련 제도의 이해도 제고를 통해 재난안전사고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
- ㅇ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재난유형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정보 및 핵심추진업무 공유에 대한 총괄 조정
- ㅇ 다양하게 변화하는 안전정책 제도와 여건 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범정부 안전기준 총괄.조정 기능 강화

- ㅇ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를 운영하여 각 부처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안전기준의 체계적·통합적인 관리
- ㅇ 재난·사고 분석, 전문가·언론·국회 지적, 부처 자체 발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합리한 안전기준 발굴 및 개선 추진

□ 재난안전예산의 총괄.조정 및 지원

- ㅇ 「안전관리계획 - 사전협의 - 성과평가」 제도를 통해 정부 재난안전사업 총괄 · 조정
- ㅇ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역별 안전가치 반영 및 재난안전예산의 적재적소 투자로 재난안전투자 사각지대 발생 예방

○ 실질적인 재난·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안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지원 및 발전방안 마련

○ 각 부처에 산재된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사전협의하여 재난안전예산 편성 시 활용

○ 소방안전교부세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용 유도를 통한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소방국가직화 지원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

□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 시스템」 등 산업 육성 및 발전 기반 구축

○ 「재난안전제품 인증」, 「방재신기술 지정」, 「재난안전산업 R&D」 등 재난안전기술·제품 현장 보급 및 기술력 강화

○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재난안전기업 컨설팅」 등 자생적인 재난안전기업 판로개척 지원

(2) 성과지표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1년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th></tr>
<tr><th>'18</th><th>'19</th><th>'20</th><th>'21</th></tr>
<tr><td>통합적 안전정책 협의 구성 및 추진</td><td>-</td><td>100</td><td>100</td><td>100점</td><td>①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및 회의에 대한 추진 실적(50점)
- 재난안전정책 관련 회의: 8회
- 안전기준 및 제도 회의: 8회
- 재난안전예산 평가자문회의 : 8회
- 안전산업관련 회의: 8회

② 안전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 건수(50점)
- 정책 및 사업 진행에 대한 언론 홍보 실적 반영</td><td><회의 개최 실적표>
<table><tr><th>목표</th><th>등급</th><th>점수</th></tr><tr><td>32회 이상</td><td>탁월</td><td>50</td></tr><tr><td>28~31회</td><td>우수</td><td>45</td></tr><tr><td>24~27회</td><td>보통</td><td>40</td></tr><tr><td>23회 이하</td><td>미흡</td><td>35</td></tr></table>
<언론 홍보 실적표>
<table><tr><th>목표</th><th>등급</th><th>점수</th></tr><tr><td>25회 이상</td><td>탁월</td><td>50</td></tr><tr><td>20~24회</td><td>우수</td><td>45</td></tr><tr><td>15~19회</td><td>보통</td><td>40</td></tr><tr><td>14회 이하</td><td>미흡</td><td>35</td></tr></table></td><td>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 등 업무수행 관련 문서

언론 스크랩 및 보도자료</td></tr>
</table>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안전정책의 총괄 및 협업 구성에 대한 체계 확립과 효과적 운영 방안 수립 •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추진	• 자연·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역량 집중으로 타 분야에 대한 안전 정책 구현의 어려움 • 조직 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장기적 정책 수립의 연계성 저하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 • 국가 정책적인 사항에 반영되어 각 부처별 협업 중요성 부각	• 기술의 발전이 점차적으로 빨라짐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어려움 • 복잡해지는 사회적 구조에 의한 이해 관계성 혼란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Ⅴ. 국민과 함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1. 안전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 범정부 안전정책조정기구가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안전사고 반복 ▪ 각 부처별 안전기준에 대한 사항이 상이하여 동일한 대상임에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등 혼선이 발생 ▪ 안전정책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 기관장의 관심도, 지자체의 재정력 등에 따른 내외적 제약요인 발생	▪ 반복되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실효성이 있고 근본적인 개혁과제 도출을 위한 T/F 구성·운영 ▪ 전 부처 안전기준 전수 조사 및 안전기준 DB확보를 통한 통합관리로 원채널 형태의 기준안 마련 ▪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 등을 통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 안전정책의 공감대 형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Ⅴ-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사람중심의 보행자 안전 및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교육·제도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39개소, 122.5억원)

  * 보도 신설, 보·차도 분리, 횡단보도 설치, 차로폭 축소,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등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646개소, 323억원)

  * 교통안전표지,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 시설개선

-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8,859개소, 1,665억원)

  * 신호등(3,330개소), 무인단속카메라 (5,529개소)

-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217개소, 70억원)

  * 보호구역 표지판, 노면표시, 일방통행 지정, 과속방지턱, 보도 등 시설 개선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375개소, 331억원)

  * 차로 정비, 중앙분리대·CCTV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 교통·안전사고 줄이기 대국민 홍보·캠페인 및 유공자 포상

○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 추진**

- 제1차('22~'26)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국비지원 사업 추진

-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등) 맞춤형 안전대책 이행상황 관리

- 어린이 안전 우수시책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어린이 안전대상' 운영

-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제도개선, 현장점검, 홍보·교육 등을 통한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 안전신고 활성화로 생활 속 위험요소 개선

- 위험요인 개선 공로 우수신고자 중심의 포상금제 운영 및 취약시기의 주요 위험요인 발굴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안전신고에 대한 처리기관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및 안전신고 최종 조치 결과 2단계 알림 서비스와 재신고 기능 보강
- 신고 폭증 대비, 안전신문고 앱에 챗봇 및 스마트폰 인공지능과 연동하는 음성안내 기능을 마련하여 사용자 편의성 개선

○ **민·관 협업**을 통한 생활 속 참여와 실천의 **안전문화 활동 전개**

-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포럼 등을 통해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운동 협력방안 등 논의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선진화 등을 위해 부처·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이 총 망라된 민·관 협의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 일상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을 스스로 찾아서 정하고 실천하는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추진
- 안전문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유도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제도적 기반 및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 안전교육기관 확대 지정, 안전교육 전문인력 추가 등록·활용을 통해 안전교육 활성화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안전교육 교재 개발·보급 및 국민 안전실천역량 진단체계 개발 및 시범조사 실시
-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확대

○ **승강기 이용자 보호** 및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 수립·운영**

- 승강기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안전점검 추진

※ 불법운행 승강기 점검, 유지관리 실태점검, 특별점검 등

- 승강기 이용자과실 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안전산업 진흥' 근거 신설로 **승강기 산업 활성화 적극 추진**

- 승강기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개최

- 승강기 안전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실시

(2) 성과지표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1년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th></tr>
<tr><th>'18</th><th>'19</th><th>'20</th><th>'21</th></tr>
<tr><td>①생활안전 의식개선 역량 강화(건)
(50%)</td><td colspan="3">신규 100%</td><td>100%</td><td>○ 지자체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육 실시 543,100명(①+②)
① 승강기 사고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운영(480,000명)
② 안전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전교육 운영(63,100명)
※ 코로나19, 교육시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육실시 인원을 543,100명으로 설정</td><td>'21년 목표대비 실적 달성 비율
<실적 달성도>
<table><tr><th>목표</th><th>등급</th><th>점수</th></tr><tr><td>54만명 이상</td><td>탁월</td><td>100</td></tr><tr><td>54만회 미만
50만회 이상</td><td>우수</td><td>95</td></tr><tr><td>50만회 미만
46만회 이상</td><td>보통</td><td>90</td></tr><tr><td>46만회 미만</td><td>미흡</td><td>85</td></tr></table></td><td>보고서 및 공문 등 관련 자료 수집</td></tr>
<tr><td>②생활안전 문화 확산 홍보(건)
(50%)</td><td colspan="3">신규 100%</td><td>100%</td><td>○ 대국민 대상 생활안전 문화 확산 홍보 22건(①+②+③)
① 승강기 안전이용 공익홍보(2건)
② 취약계층 등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홍보(10건)
③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10건)
※ 코로나19, TV·라디오·보도자료·온라인 현장 홍보 예산을 고려하여 '20년 실적치와 동일하게 목표치 설정</td><td>'21년 목표대비 실적 달성 비율
<실적 달성도>
<table><tr><th>목표</th><th>등급</th><th>점수</th></tr><tr><td>22회 이상</td><td>탁월</td><td>100</td></tr><tr><td>22회 미만
20회 이상</td><td>우수</td><td>95</td></tr><tr><td>20회 미만
18회 이상</td><td>보통</td><td>90</td></tr><tr><td>18회 미만</td><td>미흡</td><td>85</td></tr></table></td><td>보고서 및 공문 등 관련 자료 수집</td></tr>
</table>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국가 비전인 '포용국가'에 맞춰 생활안전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 활성화 •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전부개정(시행 '19.3.28.)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생활안전정책 관련 중앙부처·지자체·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 생활안전 정책의 실효적인 총괄 및 조정을 위한 수단 부족 •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사고원인과 대책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부족 •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수준 미흡과 국민 안전의식 저조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일상생활의 안전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 • 지진, 대형화재 등 빈번한 대형재난으로 재난안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확대 • 전문가, 언론 등에 의한 생활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국민의 안전의식과 실천의지 부족 등 사회 전반에 안전불감증 만연 • 사회복지비용 증가, 안전사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국비 투자감소 가능성 • 경제성·효율성 위주 문화로 인해 후진적 안전사고 지속 발생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Ⅴ. 국민과 함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한다.	• 국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새로운 보행자 안전 확보 시책 추진과 안정적 교통안전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예산 확보·지원 노력
	• 정부 주도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따라 안전에 대한 민간 부분의 폭넓은 참여 필요	•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운영 등 중앙·지방·민·관 협업을 통한 안전의식 개선 추진
	• 승강기 사고는 매년 감소 추세,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지속 발생	• 승강기 안전수칙 공익광고,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약자 등)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Ⅴ-3 지속가능한 예방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1) 주요 내용

□ 예방안전 정책 및 서비스 강화

○ 안전보안관*을 중심으로 국민 공익신고 활성화 등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 추진

* 안전보안관: 지역 통·반장, 안전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안관들이 지역 내 안전무시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제도

○ 지역주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지역안전지수* 상세 정보 공개 및 지역·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한 지역안전수준 제고

* 지역안전지수: 안전 관련 통계를 계량화하여 산출한 자치단체별 안전등급으로, ① 교통사고, ② 화재, ③ 범죄, ④ 생활안전 ⑤ 자살, ⑥감염병 6가지 분야의 세부지표로 구성

○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이 비상 및 재난상황에도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계획(COOP) 및 재해경감활동(BCM) 수립 지원

○ 생활안전지도를 '생활안전정보 포털서비스'로 고도화('21년 하반기)하여 안전통계, 법령, 연구보고서 등 제공 서비스 다양화

□ 재해위험지역 점검·정비를 통한 재난피해 경감

○ 침수·붕괴 등 피해가 많은 우기철 대비 재해예방사업의 조기 추진 및 이월 최소화를 위해 사업 추진단 구성·운영

○ 부처별 단위사업 위주의 단편적 사업 추진에서 지역 생활권 중심의 종합 정비 사업으로 개선하여 재해취약요인 포괄적 해소

○ 재해예방사업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를 통해 피해 원인, 예방대책 등에 대한 사전 설계 기술검토

□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사전 예방대책 강화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 추진실적*(실행률) 관리를 강화하여 예방 인프라 구축 확대 도모

* 연도별 계획대비 시행율 증가 추세 : ('18년) 66% → ('19년) 68.7% → ('20년) 69.4%

○ 도시 침수예방과 함께 주민 편의 공간을 제공하는 우수저류시설이 적기 가동되어 집중 호우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 각종 개발에 따른 재해 유발 요인의 저감 방안 검토와 이행 확인하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력 제고를 통한 자연재해 사전 예방 대책 추진

○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 인력에 대한 전문성 향상으로 예방대책의 신뢰성 제고

(2) 성과지표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0년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th></tr>
<tr><th>'18</th><th>'19</th><th>'20</th><th>'21</th></tr>
<tr><td>지역안전지수
담당자 만족도(점)
(가중치 60%)</td><td>81.8</td><td>85.6</td><td>87.1</td><td>85.0</td><td>■ 80점은 거의 모든 문항에서 만족 이상인 경우에 달성 가능
■ 지속적인 목표치 상향은 어려우나, 최근 3개년 실적 평균(84.8점)보다 높게 설정
<table>
<tr><th>구분</th><th>'18년</th><th>'19년</th><th>'20년</th></tr>
<tr><td>목표(점)</td><td>80.0</td><td>82.0</td><td>83.0</td></tr>
<tr><td>실적(점)</td><td>81.8</td><td>85.6</td><td>87.1</td></tr>
</table></td><td>담당자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td><td>만족도
결과보고서</td></tr>
<tr><td>재해예방사업
여름철
안전점검율
(가중치 40%)</td><td></td><td></td><td></td><td>100%</td><td>■ 여름철 우기 대비 추진중인 재해예방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미비사항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되, 지적사항은 우기전 조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table>
<tr><th colspan="2">구분
(건)</th><th>재해위험개선</th><th>급경사지</th><th>저수지</th><th>소하천</th><th>우수저류</th></tr>
<tr><td rowspan="4">'20</td><td>사업지구</td><td>18</td><td>3</td><td>2</td><td>18</td><td>00</td></tr>
<tr><td>지적건수</td><td>23</td><td>3</td><td>2</td><td>23</td><td>00</td></tr>
<tr><td>조치건수</td><td>23</td><td>3</td><td>2</td><td>23</td><td>00</td></tr>
<tr><td>조치율(%)</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00</td></tr>
<tr><td>'21</td><td>목표</td><td colspan="5">100</td></tr>
</table></td><td>$\frac{\text{조치완료건수}}{\text{지적건수}} \times 100 \times 0.4$</td><td>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자료</td></tr>
</table>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다양한 기관의 안전 정보 통합, 활용·관리 기반 확보 ▪ 지역 안전지수 산출 및 컨설팅 경험의 축적으로 안전정보 활용능력 함양 ▪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 ▪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영향평가 등 제도적 인프라 운영	▪ 예방안전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홍보 및 인식개선대책의 추진 수단 부족 ▪ 민간기업의 재해경감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수단(재정지원 등) 미흡 ▪ 극심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법 부재 ▪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의 이행수단 부족으로 평가의 실효성에 한계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코로나19로 공공·민간의 재해경감활동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분위기 조성 ▪ 국회, 언론 등의 국민안전 생활 강조,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 ▪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생활속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가 가능	▪ 코로나19로 캠페인,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집합 활동 제한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및 집중강우 빈도 증가, 해수면 상승 등 재난피해 증가 ▪ 여전한 안전무시관행으로 각종 사고의 발생 위험 상존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Ⅴ. 국민과 함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3. 지속가능한 예방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각종 안전 관련 정보 생산기관에서 안전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보안 등의 사유로 정보 제공에 다소 소극적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 지구지정,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 예상	▪ 중앙 및 지자체 등과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설명 등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갈등 요인 해소 ▪ 「자연재해대책법」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별도 근거 추가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전략목표 Ⅵ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 성과목표 1 : 선제적 대비 중심의 재난관리정책을 구현한다.
- 성과목표 2 : 현장중심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성과목표 3 :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복구 · 구호체계를 확립한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량 진단과 환류를 통해 기관의 재난관리수준 제고할 수 있는 평가 기법 마련

○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국민에게 지진이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됨에 따라 종합적인 지진대책 및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필요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수행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 국정과제 '[56-1]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5년차)'을 위해 재난대응분야 책임성 및 현장작동성 강화방안 마련, 위기관리 매뉴얼 전주기 개선계획 추진

○ 태풍·호우, 대설,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유형별 대비 태세 강화 및 종합대책 마련 등 선제적 대응

○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매뉴얼 숙달 훈련 필요

○ 폭염, 가뭄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유형별 대비 강화, 종합대책 마련 및 선제적 대응

○ 맞춤형 구호, 심리 지원, 재난취약계층지원 강화 등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수습·복구 요구 증가

○ 국정과제 '[56-5] 국가재난 트라우마 총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효율적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범정부 재난심리지원 협업체계 구축 및 총괄 대응 필요

○ 국민 스스로 풍수해·지진피해에 대비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 정책보험 활성화 필요

○ 대규모·신종 복합 재난 등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응원 활성화 및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그간의 추진성과

□ 범정부 코로나19 통합 대응을 위한 중대본 공동차장제 최초 운영



○ 중대본 공동차장제 도입(중대본부장 국무총리 격상 시) 으로 코로나19 등과 같이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유기적 대응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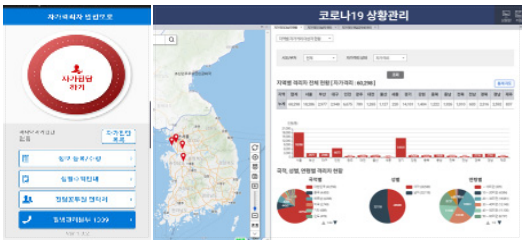
** (행안부) 국가 자원과 기능의 협조·연계 및 지자체 대응 지원 총괄
(주관부처) 분야별 전문성(감염병–복지부, 방사능–원안위 등)에 기반하여 대응·수습

※ 코로나19 중대본 : 본부장(국무총리), 1차장(복지부장관), 2차장(행안부장관)

○ 중수본(주관부처/주관)-대책지원본부(행안부/지원)로 운영되던 재난 대응 체계를 단일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각 기관의 강점 활용

□ 코로나 19 대응 적극 지원

○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개발, 모바일 원격관리 통한 지자체 부담 완화**



※ 앱 설치자 : (현재)4.4만명 / (누적)119만명,
앱 활용 적발 이탈자 : 501명('21.1.26기준)

○ **감염병 최초 특별재난지역 선포**(3.15) 및 재난대책비(4,000억원) 지원(3.26)

○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금품**(기부금 2,505억원, 물품 1,901만점) 모집 및 **적기 배분**으로 **방역 지원***과 **조기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

*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3개소)에 생필품(20종) 등 물품 8만점 지원

□ 기록적 장마에도 불구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대응노력)** 중대본 운영, 주민 사전 대피, 위험지역 통제 등 선제적 대응

※ 주민 사전대피(10,054세대, 17,345명), 위험지역 사전통제(787개소, 1,981회) 휴교(11,821개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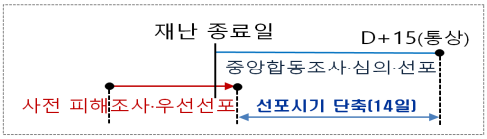
○ **(성 과)** 2000년 이후 최대 피해가 발생했던 '06.7월(7.11~29) 호우와 비교('06.7.11~29 vs '20.7.28~8.11) 시 강수량은 비슷했으나 피해는 70% 수준

* 인명피해 : '20년 39명/'06년 56명 (69.6%), 재산피해 : '20년 1조 371억/'06년 1조 4,912억(69.5%)

□ 수요자 중심 복구제도 운영 및 개선

○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재난 종료 전 사전 피해조사로 **선포기간 2주 단축**

○ **(재난지원금 상향)** 인명·주택* 및 주생계 지원항목** **재난지원금 인상**



* (인명) 사망10→20백만원, (주택) 전파13→16백만원 ** 농·어·임·염생산업 227개 항목 단가 현실화

□ 재난 조기 수습을 위한 사전 대비 · 대응 역량 강화

○ **(자원관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3개 시·도(울산 · 경기 · 강원) 우선 구축 및 ICT기반의 유통 · 물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20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억) → '21년 정보시스템 구축(57억)

○ **(통신망)** 2단계 준공 등 차질없는 재난안전 통신망 사업 추진*으로 일원화된 재난현장 통신지휘체계 구축 마무리 단계('21.3 완료)

* 2단계(남부권) 준공('20.9) 및 3단계(수도권) 착수('20.6), 집중사용지역 운영('20.8, 강원도 10개 시·도)

□ 이재민 적기 구호 및 의무보험 총괄관리 기반 마련

○ **(이재민 구호) 구호지원기관·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필요 구호물품 적기 지원,** 주택 전파·반파 이재민 대상 **임시조립주택 129동 신속 설치**

* 적십자사, 구호협회, 민간협약기업(BGF리테일, 아이두젠 등)을 통해 구호물품 47만점 지원

○ **(보험) 재난안전의무보험**(17개 부처, 45개 법률) **총괄·관리* 제도 도입**(재난법 개정, 6.9)

□ 대설 피해 최소화 및 지진 대비 · 대응 체계 강화

○ **(대설)** 적설 취약구조물 집중관리(2,483개소), 상습결빙구간 내비게이션 안내, 대설특보* 전 · 중 · 후 안전점검으로 피해 최소화**

* 대설특보 111회 ** '06년부터 14년간 인명피해 "ZERO" 유지, 겨울철 대책기간 중 재산피해 없음

○ **(지진)** 체계적 지진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및 '19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내진율 67.2% 달성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절차 및 방법 신설 등(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20.6.4)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Ⅵ	1	**3**	**3**	**14**	**26**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Ⅵ.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① 국민안전의식 조사결과
1. 선제적 대비 중심의 재난관리정책을 구현한다.		① 재난대비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위한 정책 효과성 제고율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비역량 강화	① 재난대비역량강화 지원 활동 추진도
	② 선제적인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	①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 추진
	③ 지진재난 대응 역량 강화	① 지진재난대비 및 대응 노력도
	④ 재난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	① 재난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확대
	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으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강화	① 재난안전통신망 장비 가동률 ②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 만족도
2. 현장중심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한다		①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위한 대책제도 마련 및 훈련 추진
	①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강화	① 매뉴얼 점검체계 강화 및 매뉴얼 개선
		② 현장 재난대응체계 강화
		③ 민관협력체계 강화
	② 재난대비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① 재난대비훈련 및 재난안전 전문교육 강화
	③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	① 국민 안전을 위한 자연재난 신속 대응역량 강화
	④ 폭염, 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체계 강화	① 폭염, 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체계 강화
	⑤ 상황관리 운영체계 개선 및 상황훈련 강화	① 재난상황 대응역량 강화 및 상황관리 기반 구축
		② 재난관리기관의 신속한 상황전파 훈련 실적
3.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복구·구호체계를 확립한다.		① 시대에 부합하는 재난 복구 및 구호 지원체계 강화
	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재난복구 지원	① 재난복구 지원체계 고도화 추진실적
		② 재난복구 지원 역량 강화 추진실적
		③ 재해복구사업 취약시기 대비 조기 추진율
	② 현장 맞춤형 재해구호 역량 강화	① 재해구호 정책의 현장 실행력 제고
		② 재해구호 정책 기반 강화
	③ 보험을 통한 실질적 재난피해 보상체계 구축	① 풍수해보험 활성화
		②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 체계 구축률
		③ 재난보험제도 기반 확충 실적
		④ 재해지도 제작·활용 기반 강화
	④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및 민관협력 강화	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체계 개선
		② 재난관리자원 관리역량 강화
		③ 재난관리분야 민관협력 체계 강화

전략목표Ⅵ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1) 주요내용

□ 행.재정적 지원 개선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

○ (재난관리 재정기반 강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난관리기금 집행 규모 급증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효율적 관리 운영 추진

○ (재난안전특교세)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 및 재난안전 정책 구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별교부세 지원

○ (재난관리평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역량 진단과 환류를 통해 기관별 미흡사항을 개선하여 기관의 재난관리 수준 제고

- 역량중심의 재난관리평가 기법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2개 재난유형(지진, 화학사고)에 대해 기초 지자체 4곳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

○ (지진안전 인증)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 본격 시행('19년~), 소요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국비 지원('21년 7.1억)

○ (활성단층) 전국 활성단층 조사·연구(총 4단계, '17~'36), 지도 제작 추진

○ (교육·훈련) 지진분야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지진 대응역량 향상 및 자발적인 교육 환경 조성

□ IT를 활용한 재난관리 인프라 강화

○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 본격 활용기반 구축 및 재난감지 센서(급경사지, 저수지, 노후건물 등) 연계 등 기능 고도화 기반 마련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정의·범위를 재정립하고 업무포털을 통한 공유、개방형 구조로 개선하며 차세대 NDMS 전략 마련

○ 휴대폰 센서 활용 움직임 감지 및 이탈 거리·시간에 따라 3단계(관심·경계·심각)로 구분하여 이탈 판단 정교화

○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난 상황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 개발 및 통합 예경보시스템 기반 마련

□ **재난 상황정보의 신속한 전파로 체계적 재난관리 역량 강화**

○ 경찰, 소방, 군 등의 8대분야 재난대응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신속한 재난현장 상황 전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대응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 및 재난현장에서 통합지휘에 활용

○ 재난대응기관이 재난관리를 위한 상황의 보고 및 전파가 가능하도록 재난안전통신망의 상시 안정적 서비스 유지 관리

□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강화**

○ '재난대응 책임성 및 현장 작동성 강화방안' 마련

○ '재난상황 및 우려시 개인·위치정보 조회·이용 및 제공' 지침 고시 및 지대본 참고조례(안) 마련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확대 등 민관협력 재난대응체계 강화

○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대피명령 단계 세분화 등 재난현장 대피명령 제도 개선 추진

□ **국민 참여형 재난대응 훈련체계 강화**

○ 코로나19 상황 고려, 하반기 훈련시기 결정, 훈련·평가 간소화를 통한 비대면 훈련 중심으로 기본훈련 실시

- 공공·민간시설의 재난 대피훈련을 시설 자체, 종사자 중심 비대면 훈련 권장

○ 어린이가 직접 재난 선정, 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어린이 재난훈련' 활성화

□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운영

○ 여름철(5월)·겨울철(11월)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실시

○ 재해위험구역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굴 등 선제적 대응 추진

○ 계절형 자연재난 대비 국민 생활 밀착형 자연재난 인프라 지속 구축

○ 재해위험구역 현황 DB화 및 상황관리 지원 시스템 개발

□ 폭염, 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체계 강화

○ 관계부처 합동 기후재난 유형별 종합대책 수립

○ 범정부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선제적 상황관리 추진

○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추진 및 대국민 홍보활동 지속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재난복구 지원

○ 자기책임성 원칙을 기반으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원체계 개편 및 사회재난 복구지원 프로세스 정립

○ 대규모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지구단위 종합복구제도를 확대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 현장 맞춤형 재해구호 역량 강화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재난 피해자 등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 신속 추진

○ 구호기관·지원기관 합동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 구호역량 제고

□ 보험을 통한 실질적 재난피해 보상체계 구축

○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기관별 보험 운용현황 등에 대한 평가 및 제도개선 추진

○ 재난배상책임보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홍보 추진 및 지자체·보험 관련단체 협업을 통한 제도운영으로 가입률 제고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강화

○ 적시·적소에 재난관리자원이 동원될 수 있도록 시·도별 지역통합 자원관리센터를 설치하고, ICT 기반 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민관협력위원회 개최,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등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국민안전의식 조사결과(점)	2.71	2.71	2.80	2.70	2.84	2.92	- (조사목적)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추진이 국민들의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조사결과는 재난안전정책 추진에 반영 - (조사대상) 일반국민 8,000명, 전문가 800명 - (조사항목)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안전체감도 * 항목별 5점 측도로 산출 - ('25 목표값) 최근 5년간 국민안전체감도 평균값 2.75, 연평균 증가율 1.2%을 감안, '25년은 2.92로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2.75 × 1.2% × 5년 = 2.92 • 5년간('16~'20) 평균값: 2.75 •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2% • 측정연도('25년): 5년	전문조사기관에서 반기별로 실시한 조사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안정적 재난관리 가용재원 보유 ▸ 재난관리기금(2조4,290억) 등 ✓이재민 구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민간기업과 협약 강화 ✓재난관리 매뉴얼 관리체계 정착	✓재난관리 분야 전문인력 부족 ▸ 학과 등 연구기반 미비, 민간 인력풀 부족 ✓재난배상책임보험 사각지대 존재 등 정책보험 운영 강화 필요 ✓대규모 전염병(코로나19) 대응 협조로 인한 직원 및 관계기관 피로도 증가
기 회(Opportunity)	**위 협(Threat)**
✓ICT 기술 고도화로 재난 복구·구호 체계에 적용 가능성 기대 ✓재난피해지원에 대한 정책, 예산 등 확대 분위기 ✓국민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정 기조	✓신종재난 추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복합화 ✓사회재난 중심 재난에 대한 정부 대응과 지원범위 지속적 확대 요구 ✓기록적 폭염, 많은 태풍 및 태풍의 대형화, 눈 없는 겨울 등 이상기후 현상 발생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복구·구호체계 확립 필요**

- 재난 발생 시 국민 인식과 사회 요구 수준 상향에도 현 체계 내 일부 제도개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
- 복구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 검토, 4차 산업혁명 및 첨단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한 지원체계 고도화 추진

○ **재난 초기 혼란한 현장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간의 역할 중복과 혼선 우려**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본격 운영을 통해 재난현장 자원봉사 기능의 체계적 관리

(4) 기타 : 해당없음

성과목표Ⅵ-1 선제적 대비 중심의 재난관리정책을 구현한다.

(1) 주요 내용

□ 행.재정적 지원 개선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

○ (재난관리 재정기반 강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난관리기금 집행 규모 급증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효율적 관리 운영 추진

○ (재난안전특교세)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 및 재난안전 정책 구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별교부세 지원

○ (재난관리평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역량 진단과 환류를 통해 기관별 미흡사항을 개선하여 기관의 재난관리 수준 제고

- 역량중심의 재난관리평가 기법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2개 재난유형(지진, 화학사고)에 대해 기초 지자체 4곳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

○ (지진안전 인증)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 본격 시행('19년~), 소요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국비 지원('21년 7.1억)

○ (활성단층) 전국 활성단층 조사·연구(총 4단계, '17~'36), 지도 제작 추진

○ (교육·훈련) 지진 행동요령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국민 참여형 지진안전 행사(캠페인, 공모전 등) 추진

□ IT를 활용한 재난관리 인프라 강화

○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 본격 활용기반 구축 및 재난감지 센서(급경사지, 저수지, 노후건물 등) 연계 등 기능 고도화 기반 마련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정의·범위를 재정립하고 업무포털을 통한 공유、개방형 구조로 개선하며 차세대 NDMS 전략 마련

○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난 상황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 개발 및 통합 예경보시스템 기반 마련

□ **재난 상황정보의 신속한 전파로 체계적 재난관리 역량 강화**

○ 경찰, 소방, 군 등의 8대분야 재난대응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신속한 재난현장 상황 전파

○ 재난대응기관이 재난관리를 위한 상황의 보고 및 전파가 가능하도록 재난안전통신망의 상시 안정적 서비스 유지 관리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재난대비 중심의 재난 관리체계를 위한 정책 효과성 제고율	100	100	100	100	①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25%) * 목표 : 내진율 68.4%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 $\frac{\text{내진보강 완료시설 수}}{\text{내진보강 대상시설 수}} \times 100$ ('20.12월말 기준, 누적)	'21년('20년도 실적)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87	100	100	100	② 국민 지진 교육·홍보 노력도(25%) ㉠안전취약계층 대상 지진 역량 교육 실시(8%) ㉡비대면 지진 교육·홍보 자료 개발·보급(8) ㉢국민 참여형 지진안전 집중 홍보(8%) ㉣지진 행동요령 인지도(6%) * 76이상(6점), 70~75%(4점) 74이하(2점)	(㉠㉡㉢)교육·홍보 실시 및 자료 보급 여·부 ㉣국민 안전의식조사 행동요령 인지도 부분	결과 보고서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행정안전부) *'19년(70%) '20년(74%)
	신규	신규	100	100	③GIS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25%) - '20년 설문조사 결과(75점) 대비 5점 증가한 80점을 목표로 설정	달성율: $\frac{\text{'21년 실적}}{\text{80점}} \times 100$ ※'21년 실적: $\frac{\text{점수 총합}}{\text{(응답자수×문항수)}} \times 100$	설문결과
	신규	신규	신규	95	④ 재난안전통신망 장비 가동률(25%) * '21년 신규지표로 장비가동시간 95%를 목표로 설정	$\frac{\text{장비가동시간}}{\text{365일×24시}} \times 100$	재난안전통신망 유지보수 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 점(Strength)	기 회(Opportunity)
✓재난기금(24,290억), 특교세 등 **재난관리 가용재원 보유** ✓재난(태풍, 지진) 대응 경험을 토대로 **부처 간 협업기반 구축**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체계적인 재난통신 인프라, 경쟁력 보유**	✓포항·경주지진 이후 적극적 예산투자를 통한 공공시설물 내진율 향상 ✓**대국민 재난상황 정보공유**체계 혁신에 대한 **전방위 관심 고조**
약 점(Weakness)	**위 협(Threat)**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형식적**인 **지원사업 집행 반복** ✓**코로나 19 지속에 따른 지자체 재난부서 담당자들의 업무 과중 우려** ✓포항지진 4년 경과 및 사회재난(감염병, AI 등) 이슈 따라 **지진안전 의식 저하** 우려	✓**재난관리분야 근무 기피**현상 심화, **방재안전직** 공무원 **사기저하** ✓**코로나19** 등 재난관리 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집행규모 급증** ✓이례적인 지진 발생(해남군*) 등 우리나라 지진발생 가능성에 따른 불안감 상존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Ⅵ.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Ⅵ-1. 선제적 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정책을 구현한다.	▪ 비장애인 중심의 지진 안전 문화조성으로,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체적 행동요령 인지 부족	▪ 안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진 안전 컨텐츠 개발 및 확대 보급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Ⅵ-2 현장중심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체계, 대피제도 등 재난대응분야 제도개선

○ '재난대응 책임성 및 현장 작동성 강화방안' 마련

○ '재난상황 및 우려시 개인·위치정보 조회·이용 및 제공' 지침 고시 및 지대본 참고조례(안) 마련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확대 등 민관협력 재난대응체계 강화

○ 위기관리 매뉴얼 전주기(작성、관리、점검、활용、환류) 개선 추진

○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BPR/ISP 수립)

○ 대피명령단계 세분화 등 재난현장 대피명령 제도 개선 추진

□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대비훈련 내실화

○ 코로나19 감염 대유행에도 또 다른 재난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 필요성 인식으로 훈련 간소화를 통한 기본훈련 실시 강화

○ 수시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상황보고, 주민대피 등 핵심사항이 반영된 참여형 훈련 및 중수본 중심 주요 재난관리분야 상황조치 훈련 실시

○ 공공·민간 다중이용시설 시설별, 이용자별 맞춤형 대피훈련 강화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확대('16년 2개→'17년 17개 →'18년 34개 →'19년 46개 →'20년 93개)

□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운영

○ 여름철(5월)·겨울철(11월) 자연재난대비 종합계획 수립·실시

○ 여름철(3~4월)·겨울철(10월) 재해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각지역 발굴을 통한 선제적 자연재난 대비

○ 재난대비 및 비상대응체계 가동 등 대국민 홍보활동 지속

○ 풍수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재해우려지역 자료 디지털화 추진

□ 현장중심의 통합적 기후재난관리체계 강화

○ 기후재난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GIS 상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취약계층(노숙인, 독거노인 등) 관리 강화 등

○ 폭염피해 저감 및 열섬완화를 위한 '21년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추진

* (사업기간) '21년, (사업예산) 29.3억원, (사업규모) 65개소 설치 예정

○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교세* 지원 추진

*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등), 무더위쉼터(실내, 야외), (가뭄) 다목적 계측장비 (미세먼지)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 스마트에어 모니터링 사업 등

□ 상황관리 운영체계 개선 및 상황훈련 강화

○ 재난상황관리 대응역량 강화 및 상황관리기반 구축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 재난상황관리체계 강화

- 신종·복합재난 등 미래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실 역할·기능 재설계

○ 상황전파·보고 훈련(자치단체) 및 상황근무자(중앙상황실)의 임무숙달 훈련을 통한 재난발생 시 초동대처 역량 강화

- 실전형·연계형 훈련과 교육을 통한 재난상황보고 훈련의 내실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위한 대책·제도 마련 및 훈련 추진 (①+②+③+④)			100%	100%	①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관리시스템 BPR/ISP수립 및 현장 재난대응 체계 강화(25%) - 관리시스템 BPR/ISP 보고서, 대피명령 제도재난안전법 개정(안) 마련	보고서 / 2 × 100(%)	보고서 등
					② 재난대비훈련 추진(25%) - 안전한국훈련 참여기관 확대 * ′19년 참여기관(705개) 대비 5% 증가치를 목표(740개)로 설정 - **상시훈련 추진** • (대상) 기관자체상시훈련 중 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하여 컨설팅·평가 대상 훈련 결정 • (의의) 자체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지표개선,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행안부 컨설팅 대상 지속 확대 • (목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비대면 컨설팅 확대 등을 바탕으로 성과 미달성된 전년도 목표치(58회) 재추진 ※ 미완료시 실적/목표 × 100(%) (코로나19 상황 반영 추진)	(참여기관/740 + 상시훈련실적 /58) / 2 × 100(%)	안전한국훈련 및 상시훈련 결과보고서 등
					③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 등(25%) -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수립, 상황판단·대책회의 운영 등 대책 15회 추진	실적 건 수/15 × 100(%)	자연재난 관련 대책수립 결과보고서 등
					④ 선제적 기후재난 대응역량 강화(25%) - 폭염, 가뭄 등 종합대책 마련 총 2회 이상	대책마련/2 × 100(%)	대책마련 결과보고서 등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복합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필요성 증대 • 재난관리 매뉴얼 관리체계 정착 • 자연재난 대응에 관한 노하우 축적 • 국민 중심 재난대응훈련 필요성 확대	• 대규모 전염병(코로나19) 대응 협조로 인한 직원 및 관계기관 피로도 증가 • 일부 국민의 안전 중요성 인식 부족 • 지자체의 중앙 의존적 재난관리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필요성 증대 •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 수준 향상 • 국민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정 기조	• 기록적 폭염, 많은 태풍 및 태풍의 대형화,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 발생 • 재난의 복합성, 돌발성 등으로 컨트롤타워와 일선 재난대응기관의 통합·연계 대응역량 부족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현장중심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강화	대규모 전염병(코로나 19) 대응 -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피로도 증가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애로 - 집합교육, 대규모 훈련의 축소나 일정지연	-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4) 기타 : 해당 없음

성과목표Ⅵ-3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복구·구호체계를 확립한다.

(1) 주요 내용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재난복구 지원

○ 자기책임성 원칙을 기반으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원체계 개편 및 사회재난 복구지원 프로세스 재정립

○ 대규모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종합복구 시범사업을 토대로 제도 확대개편 추진

□ 현장 맞춤형 재해구호 역량 강화

○ 적기 구호 활동으로 이재민 조기 생활 안정에 기여

○ 중앙 및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활용한 심리지원 실시

○ 제도 개선, 교육·훈련, 민관 협업을 통한 현장 구호역량 제고

□ 보험을 통한 실질적 재난피해 보상체계 구축

○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기관별 보험 운용현황 등에 대한 평가 및 제도개선 추진

○ 정책보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홍보 추진 및 지자체·보험관련 단체 협업을 통한 제도운영으로 활성화 추진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강화

○ 적시·적소에 재난관리자원이 동원될 수 있도록 시·도별 지역통합자원관리센터를 설치하고, ICT 기반 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민관협력위원회 개최,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시대에 부합하는 재난 복구 및 구호 지원체계 강화	신규	100	100	100	자기책임성 원칙을 기반으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복구지원체계 개선실적을 종합 평가 ① 복구·구호 지원체계 개선(100%)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제도화(50%) -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신속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50%) ② 정책보험을 통한 실질적 보상 및 사회안전망 강화(100%) - 의무보험 총괄관리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평가계획·ISP 수립 ③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개선(100%) - 재난관리자원 디지털 통합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법률 제·개정(각1건)	① × 0.5+ ② × 0.25 + ③ × 0.25	- 정책추진 및 목표 달성 여부 확인이 가능한 보고서·공문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및 대형화재·폭발 등 사회재난 복구와 구호에 관한 노하우 축적
- 이재민 구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민간기업과 협약 확대 등 민관협력 기반 강화
- 풍수해보험 가입범위 확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정책보험 활성화
- 중점 재난관리자원 선정, 민간장비 관리체계 마련,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등 현장중심 자원 관리

약점(Weakness)
- 사회재난은 체계적 복구지원 기반이 미흡하여 혼선 없는 신속한 지원에 차질
- 재난 초기 집중 발생하는 이재민의 체계적 구호 및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미흡
- 재난배상책임보험 사각지대 존재 등 정책보험 운영 강화 필요
- 재난현장 수습과 이재민 구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설 자원에 대한 관리 미흡

기회(Opportunity)
- 비대면문화 활성화에 따른 ICT 기술 고도화로 재난 복구·구호 체계에 적용 가능성 기대
- 재난피해지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 증가에 따라 정책, 예산 등 확대 분위기
- 예기치 못한 자연·사회재난 증가 추세로 정책보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환기
- 재난관리자원 관리와 자원봉사 등 민관협력 기능 통합에 따른 실제 동원력 강화 등 상승효과 기대

위협(Threat)
- 지진 위험도 증가, 폭염·한파 등 신종재난 추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복합화
- 사회재난을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과 지원범위 지속적 확대 요구
- 각 부처 재난의무보험들이 개별 관리되고 있어 보험별 보상수준 및 관리·운용 방식 상이
-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한 동원 등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미흡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Ⅵ.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Ⅵ-3.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복구·구호체계를 확립한다.	▪ 재난 발생 시 국민 인식과 사회 요구 수준 상향에도 현 체계 내 일부 제도개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	▪ 복구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 검토,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한 지원체계 고도화 추진
	▪ 재난 초기 혼란한 현장에 각 계의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간의 역할 중복과 혼선 우려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본격 운영을 통해 재난현장 자원봉사 기능의 체계적 관리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전략목표 Ⅶ	사회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안전수준을 향상시킨다.

기 본 방 향

- **성과목표 1 : 체계적인 사회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성과목표 2 : 사전 대비체계 구축으로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지자체 스스로 지역 내 사회재난 위험요인 발굴 및 예방계획 수립 등 중앙·지방간 사회재난 협력·대응 및 사회재난 예방·관리에 필요한 제도 마련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체계 개선,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중심 기획점검 추진,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정보 대국민 본격 공개 및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개선 등

○ 전문적·체계적 사고원인조사로 유사재난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
-재난원인조사를 통한 제도개선으로 선순환 예방체계 정립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관련 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확대하며 선제적 재난 예측·대응기술 개발사업 추진

○ 대규모 사회재난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사전 재난 대비체계 구축·강화를 통한 사회재난 대응역량 제고 필요
- 사회재난 역량교육, 재난 유형별 훈련, 매뉴얼 점검·관리 등을 통한 사회재난 대비·대응체계 구축 강화

○ 재난 유형별 매뉴얼 중심의 초동대응 및 수습 관련 임무 숙달 훈련 실시로 관계기관의 경각심 제고 및 재난 발생 시 대응력 강화

○ 감염병·가축질병, 산불재난 등 다양한 사회재난에 대한 관계기관간 협력적 대비·대응체계 구축
- 중대본·대책지원본부 운영 등을 통한 재난대응활동 강화

○ 중앙수습지원단 상시 운영체계 구축으로 대규모 재난현장 즉시 대응체계 마련 및 교육·컨설팅을 통한 지자체 사회재난 수습역량 강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Ⅶ	**1**	**2**	**2**	**10**	**2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Ⅶ. 사회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안전수준을 향상시킨다.		① 사회재난 관리체계 법·제도화 마련
1. 체계적인 사회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① 통합공개시스템 DB 및 시스템 연계 추진율
관리과제	① 통합적 사회재난 관리체계 구축	① 통합적 사회재난 관리체계 구축률 ②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율
	② 위험시설에 대한 체계적 안전점검 추진	①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보수·보강 개선도 ② 정부합동안전점검 실적 및 점검결과 개선대상 조치율
	③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신뢰성 제고	① 재난사고 원인조사 · 분석 추진 ② 재난원인조사기관 협력 네트워크 추진 ③ 재난원인조사 정책 홍보
	④ 국민 체감 및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재난안전 R&D 확대	① 부처 · 지자체 협력을 통한 범정부 정책조정 강화 ② 국민체감 등 지역 현장 문제해결사업 발굴 추진
2. 사전 대비체계 구축으로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① 감염병 재난 대응 이행률
관리과제	① 사회재난 사전 대비·대응체계 강화	① 중대본·대책지원본부 운영 ② 국가핵심기반 관리실태 점검률 ③ 다중이용시설 현장 맞춤형 컨설팅 추진
	② 산업교통재난 신속대응 및 대응역량 강화	① 선제적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② 산업교통재난 유형별 훈련실적 ③ 정책협의체 개최실적
	③ 감염병 재난 대응역량 강화	① 감염병 재난 대응·협업 추진율
	④ 가축전염병 대응역량 강화	① 가축전염병 대응·협업 추진율
	⑤ 환경재난 대응역량 강화	① 환경재난 예방역량 강화 ② 환경재난 대응역량 강화 ③ 환경재난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
	⑥ 현장과 함께 움직이는 사회재난 수습지원체계 가동	① 재난 수습지원 사전 대비 ② 재난수습지원 역량 강화

전략목표Ⅶ 사회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안전수준을 향상시킨다.

(1) 주요내용

□ 체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실시

○ 지자체 스스로 지역 내 사회재난 위험요인 발굴 및 예방계획 수립 등 중앙·지방간 사회재난 협력·대응 및 사회재난 예방·관리에 필요한 제도 마련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체계 개선,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중심 기획점검 추진,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정보 대국민 본격 공개 및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개선 등

○ 전문적·체계적 사고원인조사로 유사재난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

-재난원인조사를 통한 제도개선으로 선순환 예방체계 정립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관련 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확대하며 선제적 재난 예측·대응기술 개발사업 추진

□ 사전 대비체계 구축으로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규모 사회재난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사전 재난 대비체계 구축·강화를 통한 사회재난 대응역량 제고 필요

- 사회재난 역량교육, 재난 유형별 훈련, 매뉴얼 점검·관리 등

○ 재난 유형별 매뉴얼 중심의 초동대응 및 수습 관련 임무 숙달 훈련 실시로 관계기관의 경각심 제고 및 재난 발생 시 대응력 강화

○ 감염병·가축질병, 산불재난 등 다양한 사회재난에 대한 관계기관간 협력적 대비·대응체계 구축

○ 중앙수습지원단 상시 운영체계 구축으로 대규모 재난현장 즉시 대응체계 마련 및 교육·컨설팅을 통한 지자체 사회재난 수습역량 강화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국민안전의식 조사결과(점)	2.71	2.71	2.80	2.70	2.84	2.92	- (조사목적)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추진이 국민들의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조사결과는 재난안전정책 추진에 반영 - (조사대상) 일반국민 8,000명, 전문가 800명 - (조사항목)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안전체감도 * 항목별 5점 측도로 산출 - ('25 목표값) 최근 5년간 국민안전체감도 평균값 2.75, 연평균 증가율 1.2%을 감안, '25년은 2.92로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2.75 × 1.2% × 5년 = 2.92 • 5년간('16~'20) 평균값: 2.75 •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2% • 측정연도(`25년): 5년	전문조사기관에서 반기별로 실시한 조사결과 보고서

※ 전략목표 Ⅴ, Ⅵ, Ⅷ은 공통지표 활용

성과목표Ⅶ-1 체계적인 사회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1) 주요 내용

□ 통합적 사회재난 관리체계 구축

○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모델 구축 및 사회재난 위험성 분석 제도 구축, 예방 중심 사회재난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화 추진

○ 지자체 및 주관부처 사회재난관리 종사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체계 확립

□ 위험시설에 대한 체계적 안전점검 추진

○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 점검결과 공개 제도화, 점검 실명제 정착 등

○ 국가안전대진단 전 과정(대상 선정, 점검, 후속조치)에 국민참여 확대, 자율점검 확산, 안전신고 활성화 등 국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 재난원인조사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 법·제도 및 조사절차 체계화 추진으로 과학적 재난원인조사 기반 구축

○ 관계기관에 개선조치 권고 등 재난원인조사 결과 통보 및 이행점검 체계 강화

□ 국민·재난관리기관 등 현장수요 기반의 체감형 R&D 확대

○ 재난안전기술 실제 활용기관의 수요에 기반한 R&D 확대 및 연구개발 과정에 실수요자의 참여 확대로 성과활용도 제고

○ 중앙-지방 간 재난안전 R&D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업사업 적극 발굴 등 선제적 투자 확대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통합공개시스템 DB 및 시스템 연계 추진율	-	신규	70	80%	- 국가안전대진단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2차년도 연계 시스템 수 - 20년 목표치 70% 대비 10%p 상향한 80%를 목포로 설정 ※ 외부 DB 또는 시스템과 연계 시에는 상대 시스템의 고도화 일정이나 제도 변경 등의 이유로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연계 DB 또는 시스템 수)/(기준 연계 DB 또는 시스템 수(11개)×100	통합공개시스템 연계 시스템 실적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집중·합동점검을 통한 통합점검체계 구축 • 재난안전 기술개발 목표설정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위한 '중앙-지방 재난안전 R&D 협의체'의 운영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중복점검 우려 • 재난안전기술 분류의 광범위 • 범부처 재난안전 기술개발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 지자체 유인책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안전점검의 실효성 강화 요구 • 국민의 안전분야 관심 증가 및 재난안전 R&D 예산의 꾸준한 증대	• 점검결과 체계적인 후속조치 미흡 • 감염병 등 신종·복합재난 발생 가능성 증가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Ⅶ-1. 체계적인 사회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 실시		
1. 체계적인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대상 과다로 전문점검인력 부족 및 중복점검 초래 ■ 재난안전 R&D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국민 불안감은 여전 ■ 지역 및 현장 수요와 재난안전 R&D 투자간 괴리	■ 핵심위험시설로 점검대상 선정 및 민간협회·단체와 협력 강화 ■ 대국민 생활안전 기술개발 수요조사 등 체감형 R&D 사업 확대 ■ 지자체 참여 R&D 협의체 운영 정례화로 중앙·지방의 협력 강화

성과목표Ⅶ-2 사전 대비체계 구축으로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사전 대비·대응체계 강화 및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 유관기관-지자체-민간 전문가와의 상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예측불가한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사회재난 역량교육, 재난 유형별 훈련, 정부합동 점검, 매뉴얼 점검·관리 등을 통한 사회재난 사전 대비·대응체계 구축 강화

○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조기수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중대본·대책지원본부 운영 등을 통한 재난대응활동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감염병 재난 대응 이행률		100	100	100	감염병 매뉴얼 조치계획 이행률 1. 상황 보고·전파(30%) - 긴급 보고, 상황관리반 가동 2. 초기대응(30%) - 최초 보고서 보고, 시도 긴급영상회의, 대응기구 구성 3. 대응조치(40%) - 총리·장관 주재 대책 회의, 일일영상회의 운영	상황 보고·전파(30%) +초기대응(30%) +대응조치(40%)	긴급현장대응단, 기동점검반, 일시이동중지 등 현장점검 파견 공문 및 결과 보고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사회 재난 통합 대응체계 마련 • 현장 중심의 재난 수습지원체계 가동	• 사회재난 대응역량 전문성 부족 • 일부 국민의 안전 불감증으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 발생 • 지자체 사회재난 부서 근무 기피 및 대응경험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국민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정 기조 •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및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 요구	•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코로나 19 등 각종 재난의 상시화 • 예측불가한 사회재난 특성상 일선 재난 대응 기관 및 전문가 연계 추진 어려움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Ⅶ. 사회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안전수준을 향상시킨다.		
2. 사전 대비체계 구축으로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사회재난 재난관리 기관과의 업무 범위·역할 등 갈등 우려 ·수습지원단 운영시 관계기관간 유기적 업무 협조 미흡 우려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한 유기적 협업 추진 ·기관간 사전 협업 관계 형성을 위해 간담회, 컨설팅, 교육 등 실시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전략목표 Ⅷ	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대비·민방위태세 확립

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 ▪ 성과목표 1 : 정부 비 군사 분야 비상대비 역량 강화.
- ▪ 성과목표 2 : 민방위사태 대비 주민보호 체계 강화.

◇ 추진배경·필요성(중요성)

○ 정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비군사 분야 비상대비 업무를 총괄·조정하여 유사시 국민생활안정·정부기능유지·군사작전지원 수행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실제 동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평시 중점관리대상자원 관리 강화 필요

○ 비상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 비축물자 신형대체 등 현실화 지속 추진이 필요하며,

- 중대재난시에도 비축물자를 활용하여 평시 국민 생활안정에 기여

○ 비상사태 초기 비상대비 자원(동원자원·비축물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과 戰力손실을 방지하고,

-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적시적소에 비상대비 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DB구축 시급

○ 비상상황에 대비해 수립하는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계획을 반복 숙지하기 위해 정부연습의 효과 제고 필요

- IT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정부연습 훈련모델 개발

○ 정부연습과 더불어 지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단위 비상대비훈련 추진

○ 민방위 목표, 환경변화, 조직·편성, 사태수습 등 5년 간의 민방위 업무 중점 방향 제시가 가능한 기본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 수립

○ 민방위 제도개선 과제의 실행력 확보와 민방위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방위 시설·점검 운영 점검 강화

- 상·하반기 민방위 급수·대피시설 및 장비 일제 점검 추진

○ 민방위 체험·참여형 교육 확대로 실전 대응 역량 제고

-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체험·참여형 교육 발굴 및 강화로 민방위 대원의 실전교육 내실화 추진

○ 국지도발 등 위기 시 정부 대응체계 확립을 통한 국민 보호 필요

- 유관부서, 지자체 매뉴얼 확인·점검 및 위기대응훈련 추진

○ 주민대피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정부지원 대피시설 지속 확충 및 평상시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비상시 개인의 생존가능성을 높여주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 인지도 제고 필요

○ 공직자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안보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체험 지속적 추진 필요

○ 무기체계 발전(소형, 지능화)으로 공격양상이 다양화(미사일, 드론 등)됨에 따라, 신속·정확한 경보발령을 위해 발령체계 고도화 필요

○ 최근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주민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국민 경보발령 요구

- 지자체 운영매뉴얼 정비, 재난유형별 경보발령 훈련 등을 통해 재난분야 민방위경보시설 적극 활용체계 마련

◇ **그간 추진성과('20년도)**

○ 비상대비·민방위 업무 제도적 기반강화 및 충무계획 수립

- 민방위 업무 활성화 및 유사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정책 제도 개선 방안 마련('20.10.22.)

- 드론공격, 생물테러 등 다양한 안보위협을 반영한 '21년 충무기본·집행·시행, 실시계획 수립

○ 체계적인 민방위 업무 추진을 위한 '2021년도 민방위 집행계획' 수립('20.9.25.)

- 중앙행정기관(27개), 소관 민방위 운영 조치계획 및 시도 계획의 작성방침 제시

※ (주요내용) 민방위 교육·훈련 실효성 제고, 검열 제도 개선과 국제협력 확대 등

○ 전시 임무수행능력 판단을 위한 동원자원조사 실시(1차 2.11~3.20, 2차 5.18~26)

○ 비상시 감염병 등으로 인해 국민 보건위생상태 악화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제조업체 전수조사 및 동원업체 추가 지정(1개→31개)

○ 비축물자 단기 현실화 추진 완료(수도복구자재(12종) 비축해제 등)

○ 비축물자 중앙합동점검 실시(11.2~11.13, 14개 기관 22개 보관장소)

○ 비상대비 훈련 강화 및 정부연습 및 충부계획 발전을 위한 사후강평회의 최초 실시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6개소(인천3, 경기2, 강원1) 확충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배포(60만부)

○ 신속·정확한 경보발령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전달체계 강화

- 적 탄도탄 공격 시, 軍(탄도탄관측)과 행안부(민방위경보) 간 시스템 자동연계로 대국민 경보발령의 신속성 및 정확성 확보

- 민방위경보시스템(행안부)과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과기정통부) 간 자동연계를 통해 민방위경보 방송매체 확대

- 민방위경보 전달의 사각지대인 다중이용시설(대규모점포, 영화관 등) 건물 내 경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기술적 기반 마련

- 풍수해 기간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제방붕괴·하천범람 등 긴급한 주민대피가 필요한 경우 민방위경보시설을 적극 활용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Ⅷ	1	**2**	**2**	**6**	**1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Ⅷ. 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대비·민방위태세 확립		①개인 안보의식 및 비상대비 인지도
1. 정부의 비군사 분야 비상대비 역량 강화		①비상대비 계획수립 및 훈련 평가의 환류 실적
	① 실효성있는 국가 비상대비계획 수립	①비상대비 계획수립 및 시행태세 확립 ②비상대비 정책역량 및 소통강화
	② 국가 동원자원의 비상시 대응역량 강화	①동원자원조사 정확도 제고율 ②비축물자 합동점검 지적사항 개선율
	③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한 국가 비상대비훈련 체계 구축	①을지태극연습 중앙통제단 사건계획 처리실적 ②충무훈련 자원동원 응소율
2. 민방위사태 대비 주민보호 체계 강화		①민방위사태 대비 주민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민방위 제도 정비
	① 민방위사태 시 대응능력 제고	①민방위 사이버 교육 이수율 ②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② 국가 위기관리지원 역량 강화	①접경지역 주민대피 시설 확충 ②주민보호 위기대응 체계 구축
	③ 대국민 경보발령·전달체계 강화	①전국 민방위경보 가청률

전략목표 Ⅷ 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대비·민방위태세 확립

(1) 주요내용

□ 정부의 비군사 분야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안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비상대비계획 수립

○ 국가 비상대비자원 관리 및 활용 능력 제고

○ 비상대비훈련을 통한 계획 점검·숙달 등 대비역량 강화

□ 민방위사태 대비 주민보호 체계 강화

○ 민방위 관련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 민방위 기본·집행 계획의 수립·협의

○ 민방위대 편성·운영 개선 및 실전 교육 강화

○ 국민참여형 민방위 훈련·교육 시스템 구축

○ 민방위대 법적임무 수행을 위한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제고

○ 국민보호를 위한 주민대피시설 확충 및 접근성·활용성 제고

○ 재난상황 시 민방위경보 활용 활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신속·정확한 전파를 위한 민방위경보 자동화 시스템 구축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개인 안보의식 및 비상대비 인지도				61.9	53.6	70(점)	'20년 일반국민 대상 비상대비 인지도 조사 결과를 점수 환산 결과 53.6이므로, 향후 '25년까지 70점으로 제고	안보의식 수준 조사 결과 토대로 점수 환산 {(매우높다+높다) -(낮다+매우낮다)} *0.5	'21년 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보고서 *(위기관리지원과) 국민인지도 조사 용역 ※ '21년 하반기 실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중앙·지방 행정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약 581명) 보유 • 전문경력관 등 장기근무 전문인력 보유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노하우 축적 • 민방위 분야 기본법 보유 • 민방위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적용 가능 • 전국적인 민방위대 조직 및 인력 보유 • 전국 단위의 일사불란한 체계적 민방위 훈련	• 비상대비계획에 다수기관이 연관되어, 단독 업무에 비해 연계성 확보 어려움 • 과거 대비 조직 축소(위원회→독립 局)에 따른 비상대비업무의 위상 약화 • 전쟁 경험세대 감소, 일부 한반도 평화 분위기 등으로 국민의 안보의식 약화 • 과거에 비해 민방위대원들의 자부심 약화 • 주민대피 시설·장비 등 예산 확보 제약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낮은 인지도 • 민방위 중요성 약화로 업무담당자들의 사기 저하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4차 산업혁명 시대 IT기술을 활용한 비상대비 정책 발전 가능성 증대 • 현역 군인 장교(연습훈련지원단) 파견을 통한 비상대비계획, 정부연습 등 지원 • 전통적 안보에서 포괄안보 개념의 위기관리 체계로 민방위 역할 재정립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민방위대 편성 운영 • 재난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훈련 참여 확대 및 민방위 대원의 교육의 내실화 • 중앙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전국단위 재난훈련 필요성 증가	• 평시 상황의 오래된 지속으로 비상대비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저하 우려 • 지자체(시·도, 시·군·구) 전담 조직 및 인력 부족 • 남북관계의 불안정성과 경제발전에 따른 대형 재난 및 신종 재난의 증가 • 민방위의 당위성 약화 및 부정적 이미지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방안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Ⅷ. 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대비·민방위태세 확립		
1. 정부 비 군사분야 비상대비 역량 강화	• 다수기관 비상대비계획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해서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 필요 • 비상대비 관련 주요 자원인 기술인력 관련 대상지정, 동원훈련 등에 대한 불만 등 민원 다수 존재 • 효과적인 비상대비훈련을 위한 전문 평가단 구성·운영 예산 확보의 어려움	▪ 계획수립 기관 대상 합동토론회 및 연계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 ▪ 기술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홍보, 동원훈련 보상금 현실화 방안마련 ▪ 법 개정을 통한 평가 근거 신설 및 기재부 등 유관기관 적극 대응
2.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 활동 및 역할 강화	• 남북 비핵화 프로세스 추진으로 안보의식 변화 - 전쟁 경험 세대의 감소, 한반도의 평화분위기 등으로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 등 안보의식 약화 우려 • 민방위 훈련 시 일반 국민의 관심 및 참여 부족 - 민방위 훈련을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으로 이해 • 남북 평화 분위기에 따른 화생방 방독면 예산 확보 제한	• 안보환경 변화를 대비한 민방위대 개선·발전 추진 - 포괄안보(군사위협, 대규모 재난 및 테러 위협까지 포함) 개념의 민방위 역할 재정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 추진 • 홍보 강화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국민적 관심 제고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지역 맞춤형 특성화훈련 확대 • 중앙·지자체 협업을 통한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상향 추진 - 국비보조사업 유지 및 정부합동 평가에 관련지표 반영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Ⅷ-1 정부 비 군사 분야 비상대비 역량 강화

(1) 주요 내용

□ 정부 비상대비계획 수립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안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실효설 있는 비상대비계획 수립

○ 다수기관이 연관된 계획을 핵심시행과제로 선정하고, 기관 합동 토론회 등 회의를 주도하여 계획의 연계성 제고

□ 내실있는 비상대비자원(동원, 비축) 관리

○ 비축 불필요 물품 동원대체, 노후물자 현행화 및 기관 대상 '타겟식' 합동점검 강화 등 비축물자 현실화 대책('19.8.30) 조기 완료

○ 내구연한 초과, 노후화 등 기능상실 비축물자 분류, 보관장소 구체화 등 관리 세분화를 위한 기능 보강(비축물자관리시스템)

○ 비상대비 기술인력 관리 강화를 위해 타 자격·면허 시스템과 연계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6개 기관 34개 자격면허

□ 전국·지역 단위 정부 비상대비훈련 추진

○ 비상대비계획 실효성 검증을 위한 을지태극연습 실시

* 연습 全단계(3개월간) 전문평가단을 운영하여 내실있는 평가 추진

○ 민·관·군이 함께하는 지역단위 비상대비훈련(충무훈련) 추진

* '21년 훈련지역(6곳)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훈련 평가의 환류 실적	20(건)	22(건)	22(건)	22(건)	비상대비 분야 각종 훈련(을지연습, 충무훈련, 인력동원 훈련 등) 결과 개선사항의 충무계획 반영 건수로서 충무계획 작성 중앙행정기관 개수(28개)를 감안, 80%이상인 22건으로 설정	·각종 훈련 결과를 반영한 충무계획 개선 건수	각종 훈련 결과, 개선 보고서, 법령 개정 등 실적 집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 중앙·지방 행정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약 581명) 보유
- 전문경력관 등 장기근무 전문인력 존재

약점(Weakness)
- 비상대비계획에 다수기관이 연관되어, 단독 업무에 비해 연계성 확보 어려움
- 과거 대비 조직 축소(위원회→독립 局)

기회(Opportunity)
- 4차 산업혁명 시대 IT기술을 활용한 비상대비 정책 발전 가능성 증대
- 현역 군인 장교(연습훈련지원단) 파견을 통한 비상대비계획, 정부연습 등 지원

위협(Threat)
- 평시 상황의 오래된 지속으로 비상대비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저하 우려
- 지자체(시·도, 시·군·구) 전담 조직 및 인력 부족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Ⅷ. 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대비·민방위태세 확립		
1. 정부 비 군사분야 비상대비 역량 강화.	• 다수기관 비상대비계획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해서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 필요 • 비상대비 관련 주요 자원인 기술인력 관련 대상지정, 동원훈련 등에 대한 불만 등 민원 다수 존재 • 효과적인 비상대비훈련을 위한 전문 평가단 구성·운영 예산 확보의 어려움 •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대면 방식의 훈련을 진행할 수 없어 비대면 방식의 훈련 진행 필요	▪ 계획수립 기관 대상 합동토론회 및 연계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 ▪ 기술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홍보, 동원훈련 보상금 현실화 방안마련 ▪ 법 개정을 통한 평가 근거 신설 및 기재부 등 유관기관 적극 대응 • 비대면(자원동원 훈련 Drive-Thru 등) 방식을 적용한 훈련 적용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Ⅷ-2 민방위사태 대비 주민보호 체계 강화

(1) 주요 내용

□ 민방위사태 대비 주민보호 체계 강화

- ㅇ 민방위 관련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 ㅇ 민방위 기본·집행 계획의 수립·협의
- ㅇ 민방위대 편성·운영 개선 및 실전 교육 강화
- ㅇ 국민참여형 민방위 훈련·교육 시스템 구축
- ㅇ 민방위대 법적임무 수행을 위한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제고
- ㅇ 국민보호를 위한 주민대피시설 확충 및 접근성·활용성 제고
- ㅇ 적 침투·도발 대비 주민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기본체계 구축
- ㅇ 재난상황 시 민방위경보 활용 활대를 위한 제도 개선
- ㅇ 신속·정확한 전파를 위한 민방위경보 자동화 시스템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민방위사태 대비 주민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민방위 제도 정비	-	-	100%	100%	주민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계획 및 민방위 기본·집행계획 수립(교육, 훈련, 시설, 경보) 시 분야별 추진과제 반영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민방위 교육, 훈련, 시설, 경보 등을 민방위기본법 개정 계획 및 민방위 기본·집행계획에 개선사항·실적을 포함하여 반영하였는지 여부	민방위기본법 개정계획 및 기본·집행계획 작성 및 추진실적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관련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민방위 분야 기본법 보유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간차원의 비군사적 자위 활동 • 전국적인 민방위대 조직 및 인력 보유 •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민방위의 날 훈련	• 전쟁 경험세대 감소, 일부 한반도 평화 분위기 등으로 국민의 안보의식 약화 • 과거에 비해 민방위대원들의 자부심 약화 • 주민대피 시설·장비 등 예산 확보 제약 • 과거 제도 답습 운영에 따른 민방위 업무 중요성 약화 및 업무담당자의 사기 저하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현행 민방위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여 민방위기본법 개정 등 제도 정비 추진 • 체험·실습형 민방위 훈련을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생황민방위 운영 • 실전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민방위 교육 프로그램 육성 및 체험·참여형 교육 확대 •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용·관리로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보호를 위한 상시운영체계 마련	•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 협상 교착상태로 안보환경 불확실 • 전통적인 안보 못지않게 전염병 등 신종 재난 증가로 재난안전 환경 급변 •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 등 안보의식 약화 • 자치단체 민방위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저하와 조직규모 축소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Ⅷ. 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대비·민방위태세 확립		
3.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 활동 및 역할 강화	■ 한번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및 재난안전 환경변화로 국민안전 위협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북한과의 대화 단절 및 상호신뢰 부족 - 코로나19 세계적 확산 등 신종 재난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증가	■ 민방위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추진 - 제도 운용 및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발굴 - 제도개선 과제의 실행력 확보와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
	■ 민방위 훈련 시 일반 국민의 관심 및 참여 부족 - 민방위 훈련을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으로 이해	■ 홍보 강화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국민적 관심 제고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지역 맞춤형 특성화훈련 확대
	■ 남북 평화분위기에 따른 화생방 방독면 예산 확보 제한	■ 중앙·지자체 협업을 통한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상향 추진 - 국비보조사업 유지 및 정부합동평가에 관련지표 반영

전략목표 Ⅸ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 성과목표 1 : 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총괄・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 성과목표 2 : 수요자 중심의 성과창출을 통해 정책만족도를 극대화한다.
▪ 성과목표 3 : 대내・외 협력·소통 강화를 통한 기관 신뢰도를 향상한다.

◇ 그간 추진성과

○ 주요정책의 기획・조정・관리 등 정책역량 및 효율성 제고
○ '21년 세출예산의 성공적 확보, '20년 주요 사업예산 조기집행 추진
○ '20년 정부입법계획 수립·이행 및 주요법안의 국회통과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전략적 기획홍보 추진
○ 온라인·모바일 정책홍보 강화로 정책 체감도 및 국민과의 소통 증진

◇ 추진배경·필요성 (중요성)

○ 국정철학 구현 및 국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점검 및 관리, 주요 정책의 기획·조정 및 예산의 적정 편성과 집행 필요
○ 국정과제 이행 등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입법계획 점검 및 입법추진 대책 마련 필요
○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효율적인 평가체계 운영으로 정책성과를 제고하고 성과평가의 책임성을 확보
○ 우리 부 추진 정책의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위해 주요정책 기획홍보,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 전략적・체계적 정책홍보 추진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대내·외 역량 강화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한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일 잘 하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에 기여
○ 법제처, 국조실 등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력강화를 통한 입법추진
○ 기관 역량강화·효율성 증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성과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수요자 정책만족도 극대화
○ 정책홍보, 행정한류의 세계적 확산 및 범정부 행정한류 확산 지원 등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성과 창출 기반 마련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Ⅸ	-	3	5	19	4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Ⅸ.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
1. 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총괄·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① 주요정책의 추진 실적 ② 주요법안 국회 제출률
	①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및 예산의 적정 편성 · 집행	① 주요정책의 수립 · 점검 · 조정실적 ② 적정예산의 편성 및 확보 노력
	② 효율적 조직운영 및 체계적 산하기관 지원	① 부내 조직관리의 효율화 실적(%) ②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노력(%) ③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지원실적(%)
	③ 부내 체계적인 입법추진	① 입법계획 대비 국회 제출률 ② 주요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③ 규제정비 이행률
	④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 환경 제공	① 사이버보안 ·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② 정보화 추진성과 제고지원 및 데이터·통계 이용 활성화
	⑤ 적재적소 인사운영과 인적역량 강화	① 효율적인 부내 인사운영 ② 균형있는 인사제도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고충 상담 및 간담회 실시 ③ 조직경쟁력 및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⑥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① 유연근무 이용률 ② 근무형태혁신 만족도 조사결과
2. 수요자 중심의 성과창출을 통해 정책 만족도를 극대화 한다.		①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관리	①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 만족도
	②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행사	① 국경일 행사 결과에 대한 언론과 국민 등의 반응·평가
	③ 국민추천포상 활성화	① 국민추천포상 발굴 노력도 ② 공정하고 투명한 공적심사 개선도
	④ 정부청사 시설관리 및 입주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① 청사시설 및 후생복지 서비스 만족도(점) ② 정부청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⑤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추진	①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추진율
	⑥ 정부청사 보안관리 개선	① 방호인력에 대한 전문 직무교육을 통한 보안의식 확립 ② 청사보안 관련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③ 청사 보안성 강화를 위한 방호진단 및 근무실태 점검 등 추진 실적
3. 대내·외 협력·소통 강화를 통한 기관 신뢰도를 향상한다.		① 기관장 언론홍보 활동 건수 ②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및 적극행정 면책 실적
	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체계적 기획홍보 추진	① 정책홍보의 적절성 및 효과성 ② 핵심홍보과제 대국민 소통 정도
	② 공공행정의 전 세계적 확산 및 범정부 행정한류 확산 지원	① 공공행정 협력 건수 ② 행정한류 우수사례 현장 설명회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③ 우리부 국제협력 활성화 및 재난관리분야 국제적 위상 강화	① 재난안전 분야 국제협력 추진율 ② 국제협력 분야 만족도 조사
	④ 주민불편·기업애로 해소 등 국민생활 중심 감사 구현	① 사전컨설팅 감사 홍보 및 의견제시 실적 ② 적극행정 지원 실적 ③ 지자체 감사 프로세스 혁신 지원(**신규**)
	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하는 공직감찰 추진	① 감찰실적 ② 감찰노력도
	⑥ 재난안전관리 책임성 제고	① 제도개선 중심의 안전감찰 추진(**신규**) ② 시도 합동감찰 및 안전감찰결과 성과홍보(건)(**신규**) ③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안전감시망 확충(**신규**)
	⑦ 안보와 재난분야 대비태세 확립	①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실질적인 정부연습 실적 ② 소속기관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예방(**신규**) ③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성과목표 Ⅸ-1 **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총괄·지원기능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ㅇ 국정철학 구현 및 국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점검 및 관리
- ㅇ ’20년 예산 조기집행 관리 및 ’21년 예산의 적정 편성
- ㅇ ’20년 정부입법의 계획적·효율적 추진 및 국회 법안심사 적극 대응
- ㅇ 행정환경 변화 대응 및 주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부내 조직 및 정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내 정부혁신 추진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 ㅇ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한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 ㅇ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고 위해 보안 역량 강화
- ㅇ 능력과 성실한 태도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

□ **전략목표와의 관계**

- ㅇ 부내 주요정책의 기획·조정, 조직운영 및 중요입법의 성공적 추진 등 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 총괄역할 수행
- ㅇ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조직 활력 제고
- ㅇ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조성, 업무능률 향상 등의 지원으로 조직역량 개발에 기여

(2) 세부 추진계획

○ 조직성과 향상 및 중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조직·정원관리 기반 구축, 산하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감독을 통해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정부 주요시책의 공유·확산

○ 국민제안 활성화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고

○ 국정과제를 반영한 정부입법계획 수립으로 정부입법의 계획적·효율적 추진 및 원활한 입법추진을 통한 정책추진의 적시성·효과성 제고

○ 부내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각종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등에 대한 안정적 운영 지원, 사이버침해사고를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통해 조직역량 강화 및 인사고충 해소 등 적극적 배려를 통한 따뜻한 인사 운영

○ 다양한 형태의 대화의 장 마련, 전 직원이 참여 가능한 문화 행사 등을 통한 소통 강화

○ 보다 많은 직원이 참여 할 수 있는 나눔·봉사활동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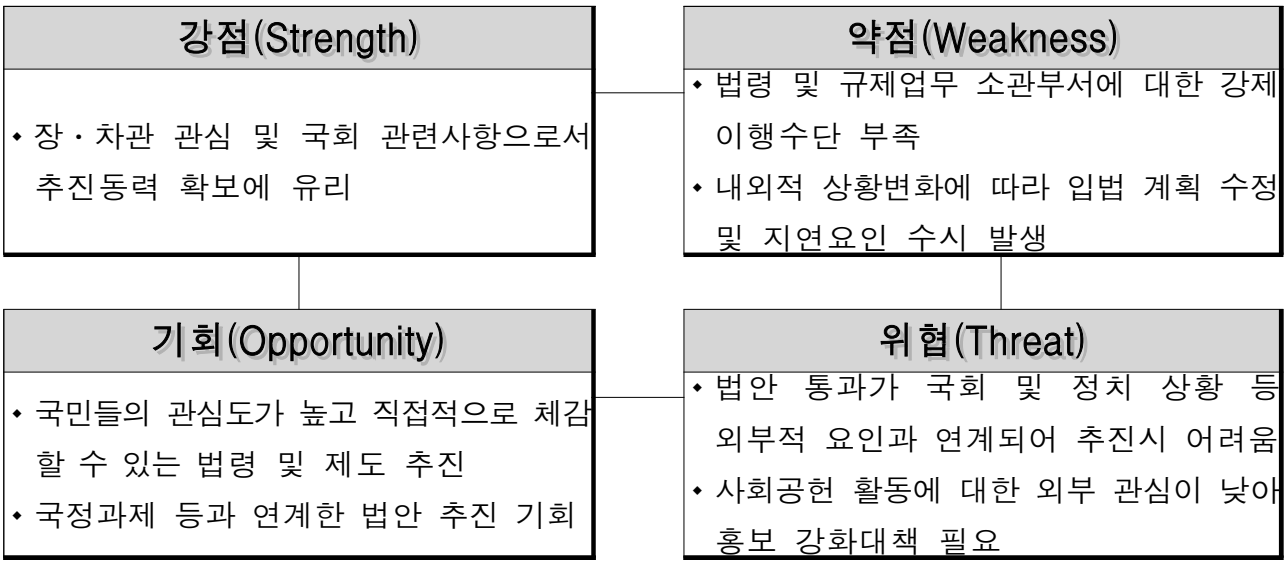
○ 개인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 설계, 초과근무 자제·연가 활성화 등 근무혁신 방안 추진

○ 국민안전 중심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안전감찰 활동

- 재난책임기관에 대한 엄정한 안전감찰 수행으로 국민안심사회 실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Ⅸ. 기관 효율성 제고 및 소통강화를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총괄·지원기능을 강화한다.	▪ BH・총리실・기재부・국회 등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의・조정의 어려움 ▪ 국조실・권익위 등 평가주관 부처 등과 평가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한 이견 발생 가능성 ▪ 국조실·법제처 등 심사주관 부처의 심사지연, 이견 발생 가능성 ▪ 행안부 소관 국정과제 등 주요법안에 대한 상임위 상정・처리 비협조	▪ 관계기관, 소관부서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통해 이견에 대한 협의・조정 노력 ▪ 국회 동향 등의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정치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의원 및 보좌관, 상임위 수석, 입법조사관 방문 설명, 소위심사 전 심사목록 협의, 사전 쟁점조율 등으로 국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4) 기타 : 해당없음

성과목표 Ⅸ-2 **수요자 중심의 성과창출을 통해 정책만족도를 극대화 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ㅇ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성과평가체계 개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등 대·내외 협력·소통을 강화하여 체감도 높은 정책성과 도출
- ㅇ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품격 있는 정부행사 실시로 국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통합을 강화
- ㅇ 국민추천포상을 사회에 귀감이 되는 숨은 공로자를 찾아 포상하는 '국민대표 포상'으로 점진적 확대·발전 추진
- ㅇ 입주 공무원의 수요 등을 반영한 청사시설 관리 및 후생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제공

□ 전략목표와의 관계

- ㅇ '주요정책 성과목표 관리'와 '소통중심의 업무체계' 강화로 정책성과를 극대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
- ㅇ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행사 실시로 '국민 신뢰 향상'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추천포상으로 나눔 및 통합(화합)문화 확산
- ㅇ 고객 요구를 반영한 청사 건립 및 후생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일하기 좋은 사무환경을 지원, 공직사회 활력과 창의성 향상 도모

(2) 세부 추진계획

- ㅇ 국정과제 등 주요 대외평가의 주기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성과창출과 소통·홍보 강화
  - 상시적인 성과관리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극대화
  - 국민과의 소통·홍보 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 효율적·체계적인 평가기반 마련 및 주요정책에 대한 환류 활성화를 통한 정책개선 기여

- 내·외부평가 항목의 연계 등 핵심정책 중심으로 평가체계 조정을 통해 정책-평가 간 연계성 제고
- 국정과제와 주요정책 평가 연계 및 평가위원·관계자 의견수렴 등 환류기능의 강화를 통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개선 유도

○ 알찬 행사콘텐츠를 발굴·개선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

- 국경일의 의미를 압축해 올바로 전달하면서도, 예술성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
- 종전 학부모, 학생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범위 지속 확대
- 정부행사의 권위와 형식을 완화하고 국민 축제·화합의 장으로서의 국경일 행사 준비 및 진행

○ 현장 밀착형 청사 서비스 개선 및 정부청사 시설 관리

- 다양한 고객을 고려한 정부청사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추진
- 정부청사 시설 관리 및 종합 행정서비스 제공 및 업무환경 지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국정과제 추진 4년차로 국민체감형 성과창출 역량 결집 • 정부의전 행사의 경험과 역량의 성숙 • 국민추천포상 활성화를 통한 노하우 축적	• 국정과제, 부내평가 및 자체평가 등 성과관리가 어렵다는 부서 성과담당자의 인식 • 지원부서로서 실질적 권한 부재 • 품격 높은 정부행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 장소, 인력 등의 제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정책-평가 간 연계강화 등 성과관리 체계화는 대외평가시 이점으로 작용 • 정부행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각계의 정부포상제도 개선 요구	• 평가의 복잡성 증가시 성과관리업무 기피현상 및 체계적 성과관리의 어려움 • 정부행사 참석자의 고령화로 60~70대 위주 행사라는 고정관념 • 포상 탈락자 등의 민원 제기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Ⅸ. 기관 효율성 제고 및 소통강화를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2. 수요자중심의 성과창출을 통해 정책만족도를 극대화한다.	▪ 성과관리 등에 있어 각 부서별, 개인별 입장차로 인한 수용 및 조정 어려움 ▪ 총리실·권익위 등 평가주관 부처 등과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견 발생 가능성 • 경호, 의전 등의 사유로 정부행사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으로 불만제기 • 국민추천포상 탈락자 등으로부터 포상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수상자 비방 등 발생 소지 ▪ 국민추천포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미흡 및 자발적 참여의지 부족 ▪ 입주공무원 및 청사방문객 등 청사 이용객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	▪ 부서 및 담당자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통해 이견에 대한 협의·조정 노력 ▪ 평가주관 기관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체제 구축 ▪ 관계부처와의 사전조율 등 치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재발 방지 ▪ 각계 명망가 등 외부인사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실화 ▪ 심사위원 직접 현장 공적확인(필요시) 등 공적검증 강화 ▪ 포스터, 백서, SNS, 영상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대국민 홍보 추진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수렴과 장단기적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갈등해소방안 마련

(4) 기타 : 해당없음

성과목표 Ⅸ-3 대내·외 협업·소통 강화를 통한 기관 신뢰도를 향상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ㅇ 우리부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홍보, 뉴미디어 활용 온라인 홍보 등 전략적·체계적 정책홍보 추진
- ㅇ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확산하고 국제협력 수요 발굴하여 국격 제고 및 국가 경쟁력 강화 계기 마련
-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전략목표와의 관계

- ㅇ 우리 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체계적·선제적인 정책홍보 필요
- ㅇ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이 감사걱정 없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불편 및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해소
- ㅇ 적극 행정 면책 활성화를 통해 감사 걱정없이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지원하여 기관 신뢰도 향상
- ㅇ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행정 분야 협력 확대를 바탕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관련 사업의 국외진출 도모 등의 성과 창출
- ㅇ 예방 위주의 재난안전 관리로 기관의 효율성 제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2) 세부 추진계획

○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호감도 제고

- 신규사업·추진정책 중 부정적·비판적 보도가 가능한 이슈를 선정, 이슈별 언론 대응체계 강화
- 연간 홍보 로드맵 수립, 월별 홍보 아이템 발굴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홍보 추진
- 사이버 서포터즈 위촉을 통한 온라인 국민참여 활성화

  * 주요 행사, 현장 방문 등에 온라인 생중계 운영, 관련기관 공유·확산

- 주요 포털 사이트와 협력을 통한 모바일 홍보 강화

○ 공공행정분야 행정한류 국제적 확산을 위한 '한-SICA 공공행정 협력단' 및 '한-ASEAN 공공행정 협력단' 추진

○ 범정부 공공행정 우수사례, 수요자 중심의 행정한류 콘텐츠 발굴 및 관리 강화

○ 국민안전 중심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안전감찰 활동

- 재난책임기관에 대한 엄정한 안전감찰 수행으로 국민안심사회 실현

○ 정부청사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역량, 보안의식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보안진단 평가·컨설팅을 통한 청사 보안역량 강화
- 정기적인 보안교육 및 훈련 강화를 통한 보안의식 확립
- 최신 보안시스템 구축, 위협요인 분석 등을 통해 대응방안 구축

○ 재난안전 관련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강화, 국가중요·보안시설 지도감독 강화,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실질적인 정부연습 추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언론과의 우호적인 관계형성으로 언론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공공행정 관련 제도·시스템 ◦ 범정부-공공기관-학계 협업체계 구축에 따른 공공행정 협력 역량 강화 ◦ '365일 상시감찰'을 통한 예방 중심의 선제적 감찰 ◦ 비상대비 전문역량 보유 및 중앙행정기관과 유기적 협조 가능	◦ 정책과 홍보의 연계 부족 ◦ 행정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하여 장기적 관점의 비전 제시 필요 ◦ 협력국의 지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행정 콘텐츠의 현지화 필요 ◦ 다양하고 지능화된 공직 비리에 대응 할 수 있는 감사·감찰 적발 한계 ◦ 전시대비 업무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관련 예산 획득제한 ◦ 재난안전·테러·비상대비 상황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 시 조치역량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우리나라 공공행정 발전모델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 및 협력 수요 증가 ◦ 주요 정책결정자의 행정한류 확산에 대한 관심 ◦ 국민들의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열망 고조 ◦ 안전관리 및 비상대비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업무수행 가능	◦ 언론 환경과 홍보기법, 홍보전략의 급변 ◦ 협력 대상국(기관)의 유동적인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 공무원의 무사안일, 소극적 행정, 불합리한 규제 행태 및 비위행위를 관행으로 인식하는 온정적 조직문화 여전 ◦ 북한의 대남도발 및 후방테러 가능성 고조 ◦ 새로운 형태의 도발 가능성 농후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Ⅸ. 기관 효율성 제고 및 소통강화를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3. 대내·외 협업·소통 강화를 통한 기관 신뢰도를 향상한다.	▪ 우리나라와의 공공행정협력을 요청하는 국가 및 기관들이 매년 증가 ▪ 성과 홍보 등의 미흡으로 대외적인 인지도 약함 ▪ 감사를 의식하여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 업무처리에 소극적 행정 처리 ▪ 법령·지침의 적극적 해석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처분 우려로 관행적·소극적 업무 처리 행태 유지 ▪ 재난안전 관련 전문성 부족 ▪ 재난안전·테러·비상대비 상황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 시 조치역량 부족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행정한류 확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필요 ▪ 언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협력다변화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제시한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그 사안에 대해 감사면제) ▪ 재난안전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전문능력 배양 ▪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지속적인 상황 관리

(4) 기타 : 해당 없음